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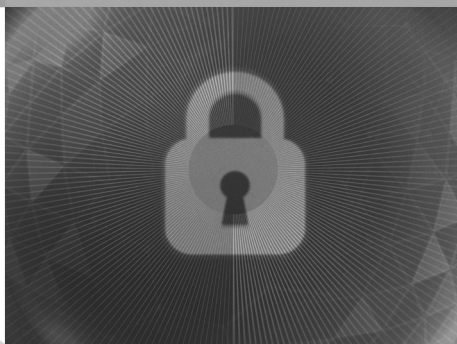
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1. 상비병력 급감에 대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연구원 : 정진섭, 곽정근

2. 국민정신(안보의식) 동원체계 강화방안

연구원 : 박균열, 방정배, 이원봉



2024 안보연구시리즈 [제 5-5호]
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인 쇄 2024년 12월 31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 행 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주 소 3302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별로 1040
전 화 TEL. 041-831-6412 FAX. 02-748-7588
홈페이지 <http://www/kndu.ac.kr>
<http://www/kndu.ac.kr/rinsa>

디자인 및 인쇄 (주)문화공감 TEL.041-631-7783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4

비매품
ISSN 2586-5323

1. 본 연구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2. 본 연구보고서는 정책입안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타 기관에 불필요한 자료유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사 | P R E F A C E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는 매년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전력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 연구자들에게 심층적인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매우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종전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1년 이상 지속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 같았던, 강대국 간의 무력대결이 여전히 국제질서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 해협의 중국 군사력 투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진영의 대중국 억제 전략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간 대결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헌법에 남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전쟁시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망발을 일삼는 등 한반도를 최고의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안보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국방혁신 4.0을 뒷받침할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금년도에는 '상비병력 급감에 대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과 국민정신(안보의식) 동원체계 강화방안' 등 2개 주제로 정기(기초)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제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비전력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자와 감수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가 국가 예비전력 정책 관련 부처의 정책개발 및 추진과정에 기여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교수 박 영 준

제1장. 상비병력 급감에 대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1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정진섭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곽정근	
I. 연구 개요.....	4
II. 국가인구 감소 추이 분석 및 평가.....	9
III. 국방인력 소요와 보충 전망.....	22
IV. 외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32
V. 한국군의 예비병력 운용 실태.....	45
V. 국방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54
VI. 결론 및 정책 제언.....	71
제2장. 국민정신(안보의식) 동원체계 강화방안	79
경상국립대학교 박균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방정배	
경상국립대학교 이원봉	
I. 연구 목적.....	81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84
III. 현대전의 특징과 안보의식.....	88
IV. 국민안보의식 수준과 안보교육 실태.....	97
V. 주요 선진국의 국민안보의식 함양 사례 및 시사점.....	118
VI.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	147
VII. 결 론	170

제1장

상비병력 급감에 대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정진섭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곽정근

- I. 연구 개요
- II. 국가인구 감소 추이 분석 및 평가
- III. 국방인력 소요와 보충 전망
- IV. 외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 V. 한국군의 예비병력 운용 실태
- VI. 국방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요 약

본 연구는 인구절벽으로 촉발된 국방인력 부족 문제를 예비병력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통해 과학기술군으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상비병력 규모를 기존 60여만 명에서 50만 명 이하로 감축하였으나 지속적인 병역자원 부족으로 2040년경에는 35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예비병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만 예비군 편성 자원이 상비병력 전역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이 역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자원이 충분하던 시절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간부예비군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등 과거와 같은 양적인 총원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예비병력을 상비병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주요 전력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에 외국 주요 국가의 국방인력 운용사례를 보면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을 통합 운용하는 추세이다. 평시에는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면서 정예화된 예비병력 육성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 이후 인구감소를 고려한 미래 국방인력운영계획을 아직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미래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 예비병력의 확충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예비군 복무유형과 부대 유형별 예비군 편성 기준, 예비군 편성 연차 설정 등 운용개념을 정립하였다. 예비군 복무유형은 동원예비군, 대기예비군, 재복무예비군 등 3가지 유형으로 정립하였다. 미래 부대 유형은 상비부대와 예비전력부대, 지역방위부대 등으로 구분하고, 부대 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비율을 상비부대는 100% 현역으로, 예비전력부대는 100% 예비군으로 편성하되 지휘관 참모 등 주요 직위자는 평시복무예비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정립하였다. 지역방위부대는 예비군 위주로 편성하되 평시에도 대비태세 유지가 긴요한 신속대응전력은 현역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군 복무 연차는 자원감소를 고려하여 8년 차까지로 유지하되 1~6년 차를 동원예비군, 7~8년 차를 대기예비군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정립하였다. 즉, 예비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복무 연차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예비군 복무 연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미래 첨단과학기술군을 이끌어 갈 간부예비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간부예비군 복무체계 개선, 여군 전역자 예비역 복무 의무화, 예비군 진급제도 발전, 현역과 예비역 혼합 복무제도 도입, 퇴역예비군의 재복무제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간부예비군 확충을 위해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간부도 일정 기간(60세 이전 6년)의 무적으로 예비역이나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복무하며, 퇴역자도 희망 시 재복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여군 전역자도 남성과 동일하게 해당 신분과 계급에 상응한 예비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여군의 예비군 복무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하여 여군의 비율 증가에 따른 예비군자원 감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현역 복무기간의 일부를 예비역 복무로 대체하는 등 유연한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하였다. 아울러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족 계급과 병과의 자원을 확보하고 개인의 명예 욕구를 충족하며, 보직의 상승적 변화와 경제적인 혜택까지도 고양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군 진급 범위를 병장-하사부터 장군까지 확대하고 능력에 따라 2~3단계 진급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평시복무예비군제도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상비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위충분성을 갖춘 적정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상근예비군'을 '평시복무예비군' 개념으로 발전시켜 예비전력부대를 운영하는 주 전력으로 활용하

여야 한다. 평시복무예비군의 적정 규모는 4~5만 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평시복무예비군의 유형은 상근예비군과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하고, 상근예비군은 미군의 '상근예비군(AGR: Active Guard Reserve)'과 같은 개념으로 예비전력부대와 지역방위 부대의 기간요원으로 현역과 동일하게 365일 full-time으로 근무하며 예비군 관리 및 운용, 훈련 및 각종 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근예비군은 현행대로 180일 이내에 근무하되 부대 유형과 직위에 따라 근무 일수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평시복무예비군을 국군조직의 일원으로 편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총력전 수행 체제 구축과 상비·예비병력 부족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민간인력과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방위부대에 상비병력 할당이 제한되고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인력과 조직을 활용하여 기 능별 지원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전시 동원소요 슬림화를 위한 민간인 력과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 제는 ①현역과 예비역을 통합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②예비군 가용자원을 고려한 전시 부대계획 조정, ③평시복무예비군제도의 발전, ④국방인력 풀(pool)을 확대할 수 있는 다 양한 정책 개발, ⑤지역예비군부대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이 2022년도 이후의 병역자원 정체 시기와 20세 남아 인구가 최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까지의 국방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병력 부족 문제를 다루다 보니 보충해야 할 대상 인원 규모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예비 병력 규모 면에서도 미래 예비군 복무 연차와 예비전력부대 구조 개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해야 할 예비군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래 상비병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국방인력 자원 수급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병력과 민간인력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해법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글로벌 안보 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과 대만 문제 등으로 전방위적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촉발된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점차 고착되어 가는 양상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며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으로 규정”하는 등¹⁾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동북아 지역의 경색 국면을 교묘히 활용하여 치명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중점은 ①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②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③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④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⑤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이다.

이러한 국방혁신 중점 중 본 연구의 주제인 병력 문제는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의 세부 과제인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 및 국방인력구조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향 방향은 ‘상비병력은 작전 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다.²⁾

그러나 우리 군은 국방인력 수급 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신생아 출생률에서 촉발된 인구절벽 사태와 MZ세대의 직업군인 기피 현상은 ‘작전 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을 어렵게 하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군 구조를 개편하여 병력 소요를 줄이고, 상비병력 위주의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의 총체적인 병력공급 역량을 확충시키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당면한 국방인력 문제의 핵심은 ①인구절벽에 따른 적정 상비병력의 충원 문제와, ②간부의 충원과 유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1) 연합뉴스, “김정은, ‘한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 2024.1.16.

2) 국방부, 「국방혁신 4.0」 팜플렛, p.30.

먼저 상비병력 충원 문제이다. 20세 남성인구가 2022년에는 33.3만 명에서 2040년에는 14만 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상비병력 규모는 2025년 50만 명에서 2040년 이후에는 35만 명 이하 수준으로 감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래 작전 소요를 35만 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우수한 간부의 충원과 유지 문제이다. 미래 국방혁신의 방향이 첨단과학기술군을 지향함으로써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우수 간부의 소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직업군인의 매력이 감소하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대하여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도 장기복무를 하지 않고 군을 떠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³⁾ 따라서 초급간부의 충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및 국방인력구조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비병력 부족 문제, 특히 간부의 부족 문제를 ‘상비병력에 국한된 범주’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는 피할 수 현실이고, 상비병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한 방법으로 예비병력 확충을 통한 상비병력 부족을 상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미래에는 경제인구 부족에 따른 세수(稅收) 부족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방예산의 감소가 예상되고, 경제적인 군 건설에 대한 압박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초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성장률 저하와 복지 소요 증가로 국가 예산 확보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금 등 인력 유지 비용의 감축이 불가피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한 예비병력의 확충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이라는 사회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예비병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조선일보, “허리 나간 軍… 작년에만 간부 9481명 떠나”(2024.06.06)

2. 연구 중점 및 방법

가. 연구 중점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방인력 부족 문제를 예비병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중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국가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21세기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절벽 추세가 병역자원 수급과 예비군 편성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둘째, 국방인력 소요 계획과 보충 전망을 예측하여 인력 수급상의 문제를 분석한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가 국방인력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방혁신 4.0」과 미래 국방 비전에서 추구하는 국방인력 소요(규모)를 확인한 뒤 가용 병력과 비교하여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예비병력 운용사례와 현상을 분석한다. 외국군에서는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병력과 민간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예비군 운용사례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예비병력 운용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주목적인 국방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예비군 운용개념과 복무 연차를 정립하고, 부족한 간부예비군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여군 전역자의 예비군 복무 문제점을 분석하여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예비군 진급제도 발전과 비상근예비군제도를 평시복무예비군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 민간인력과 조직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중점

연구 중점	세부 과제
미래 인구감소가 국방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인구추계 분석(2022~2072) • 병역자원 감소 추이 분석 • 예비군자원 감소 추이 분석

연구 중점	세부 과제
국방인력 소요 및 보충 전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안보 환경변화가 국방인력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국방인력 소요와 보충 전망
외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 현대전에서 예비병력과 민간인력 운용사례
한국군의 예비병력 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운용개념과 예비병력 운용계획 • 간부예비군 수급 현황 • 비상근(평시복무)예비군제도 • 지원예비군제도 등
국방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운용개념 정립과 복무 연차 설정 • 간부예비군 확충방안 • 평시복무예비군제도 정착 방안 • 민간인력과 조직의 활용 확대 방안 등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방인력 부족 문제를 예비병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추세와 국방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 현재 외국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서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등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 방법을 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할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편, 『통일한국의 동원체제와 예비전력 운용 연구』(2016),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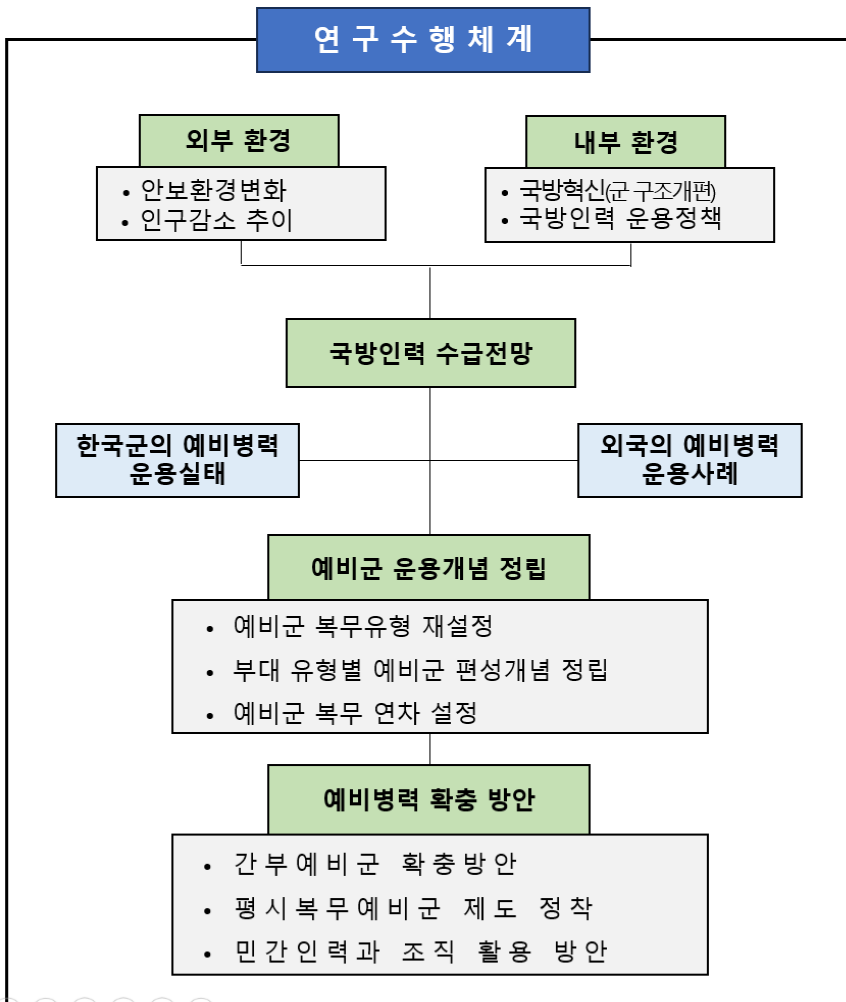
첫째, 인구와 예비군자원 감소 추세 등 주요 현황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인구감소 추세가 국방인력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 등 기존 문헌을 검토하는 문헌조사 방식을 적용한다. 문헌조사는 문헌적 원천으로부터 연구 범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검토하고, 각 자료의 검토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한 뒤,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결론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둘째, 현대전에서 예비병력과 민간인력 운용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하며, 전문가들의 견해와 선행연구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셋째, 자료 수집 방법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와 발표 자료, 국내외 각종 서적, 연구·세미나 자료 등의 자료를 사용하며, 군사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는 상비병력 급감에 대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을 모색한다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수행 절차를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및 체계



3. 연구 자료의 활용

한반도에서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병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상비병력 부족에 따른 대안 마련의 핵심은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예비병력과 민간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서 묘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분석하고, 외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에서 교훈을 도출하여 우리 군의 예비병력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써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국방혁신 4.0」에서 추구하는 예비전력 능력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및 법령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
- 나. 미래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
- 다. 관련 법령 보완 및 충무계획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라. 예비전력 정책서, 동원업무추진계획 등 수립 시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
- 마. 예비전력예산 확충 논리 설명 자료로 활용
- 바. 국방대학교, 민간대학 군사학과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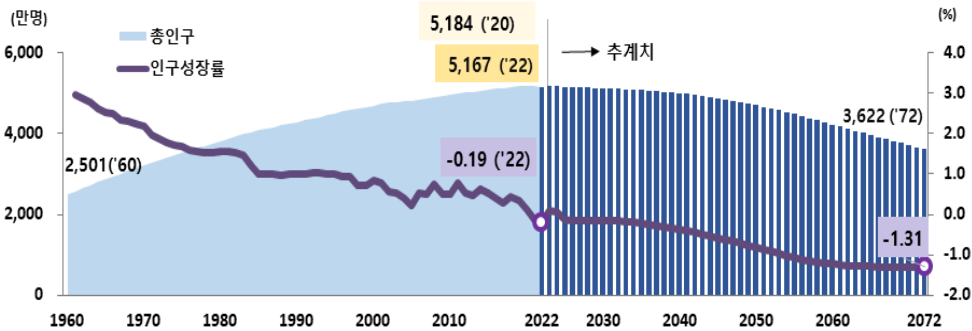
II. 국가인구 감소 추이 분석 및 평가

1. 장래 인구추계(2022~2072) 분석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국가 소멸을 우려하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나 범국가적인 인구정책을 통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서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그림 2>와 같이 증위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은 5,131만 명, 2072년 3,622만 명으로 1977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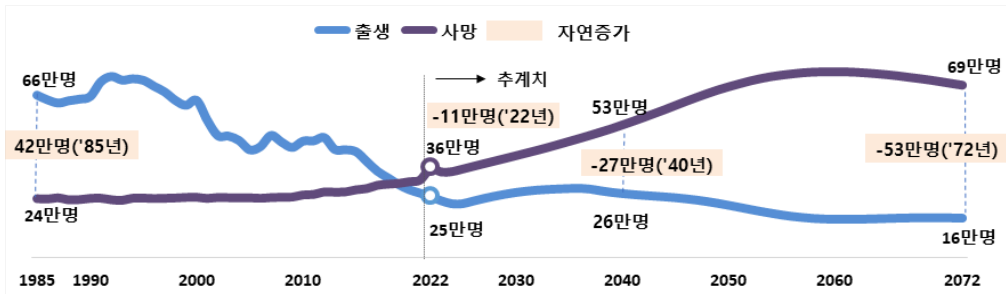
〈그림 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



출처: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보도자료(2023. 12. 14)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 명에서 2072년 16만 명(2022년의 65%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6만 명에서 2072년 69만 명(2022년의 1.9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72년 -53만 명 수준이 되어 매년 큰 폭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3〉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85~2072)



출처: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보도자료(2023. 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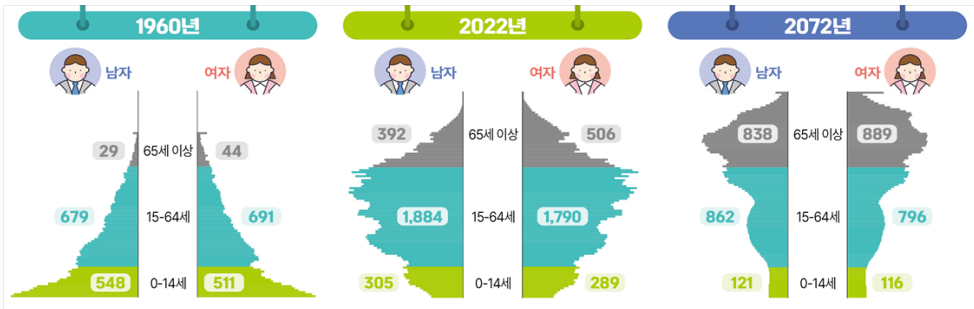
또한, 2022년과 2072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대폭 감소(71.1%→45.8%)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17.4%→47.7%)하여 소위 초고령화사회⁵⁾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래

4)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 2022~2072년”, 2023.12.14. p.1.

5)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

〈그림 4〉에서와 같이 인구피라미드는 2022년에는 35~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 구조이나 앞으로 60세 이상이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4〉 인구 피라미드(1960~2072년)



중위연령⁶⁾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에는 50세를 넘기고 2072년에는 63.4세까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징병제 체제하에서의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 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 병역자원 감소 추이 분석

미래 군구조 설계 시 핵심적인 제한 요인은 병력확보 문제이다. 「국방개혁 2.0」에서 전투부대 중심의 병력 효율화, 즉 병력은 전투부대로, 지원기능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조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국방혁신 4.0」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고려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해 왔다. 한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8만 명이었으나 부대 해체 및 편성의 효율화 등을 통해 2020년 말 기준 55.5만 명으로, 최종적으로 2022년 말까지

화사회로 분류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20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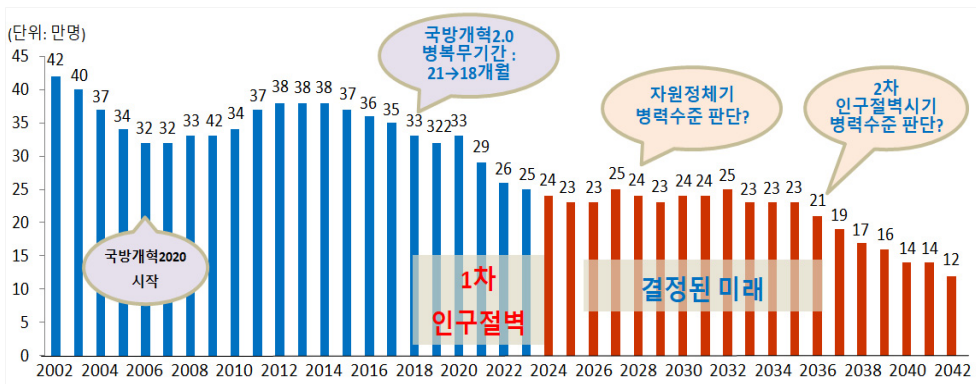
6) 중위연령: 전체 인구 중 나이 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다.⁷⁾ 이러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국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 수준을 간부로 증원하고,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군무원+민간군로자) 비중을 2017년 5% 수준에서 2022년 10%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였다.

인구구조와 병력공급 논의 시 어떤 연령대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종종 문제가 되는데, 징병제를 운영해 온 우리나라는 징병 대상이 남자이고 20세에 가장 많이 입대하기 때문에, 병력공급 기준을 20세 남자 인구로 삼고 있다. 모병제의 경우 입대 인원 연령 폭이 넓고 재입대 인원도 있으므로, 20세뿐만 아니라 20~24세, 18~40세, 총인구 등 다양한 인구 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하고 있는 20세 남성 중위추계인구⁸⁾를 종합 정리해 보면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병 복무기간 단축이 시작된 2018년에는 20세 남성인구가 33만 명이었으나 병력구조조정이 완료된 2022년에는 2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정체기와 2차 인구절벽 시기를 지나 2040년에는 약 14만 명 수준으로 2020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20세 남성인구 변화와 병력정책



출처: 조관호, “병역자원 감소시대 국방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3.6.15.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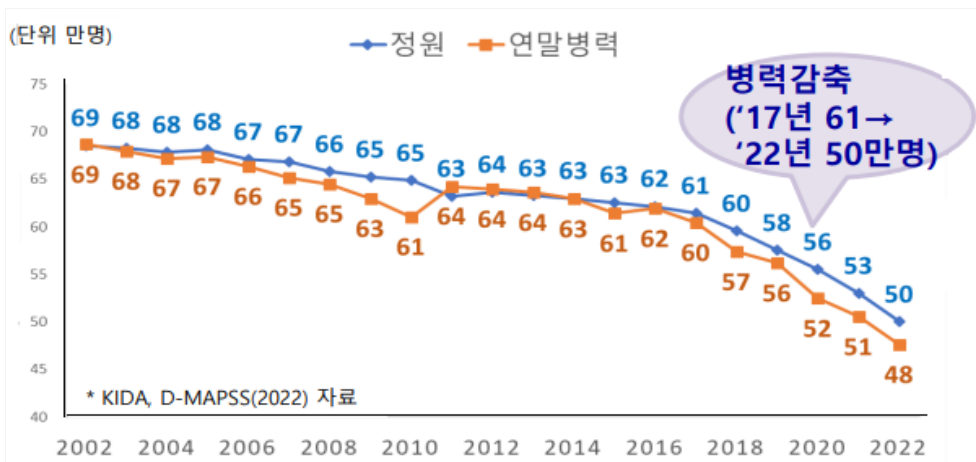
7) 2020 국방백서(2020.12.), p.100.

8) 중위추계인구란 최대 예상치와 최소예상치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미려 인구에 대한 산정은 e=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최대 및 최소 예상치를 추론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1, 2차 인구절벽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국방인력운영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비병력의 충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군은 아직까지 2022년도 이후의 병역자원 정체 시기와 20세 남아 인구가 최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까지의 국방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상비병력 감축의 목표시한이었던 2022년 말 기준 정원 대비 운용인력 현황을 보면 병력자원의 부족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그림 6>과 같이 2022년 연말 기준 한국군의 총 병력은 48만 명 수준으로 「국방개혁 2.0」 계획 수립 당시의 50만 명보다 이미 2만 명이 나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림 6> 상비병력 정원과 연말 병력 변화



출처: 조관호,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3.6.15.

정원 대비 부족 인력의 원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간부의 충원 역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병력규모 조정의 목표연도인 2022년 말 기준 간부의 정원은 20만 명인 데 비해 연말 기준 병력수는 19.1만 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청년인구 감소와 함께 병 복무기간 단축, 병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장교 및 부사관의 지원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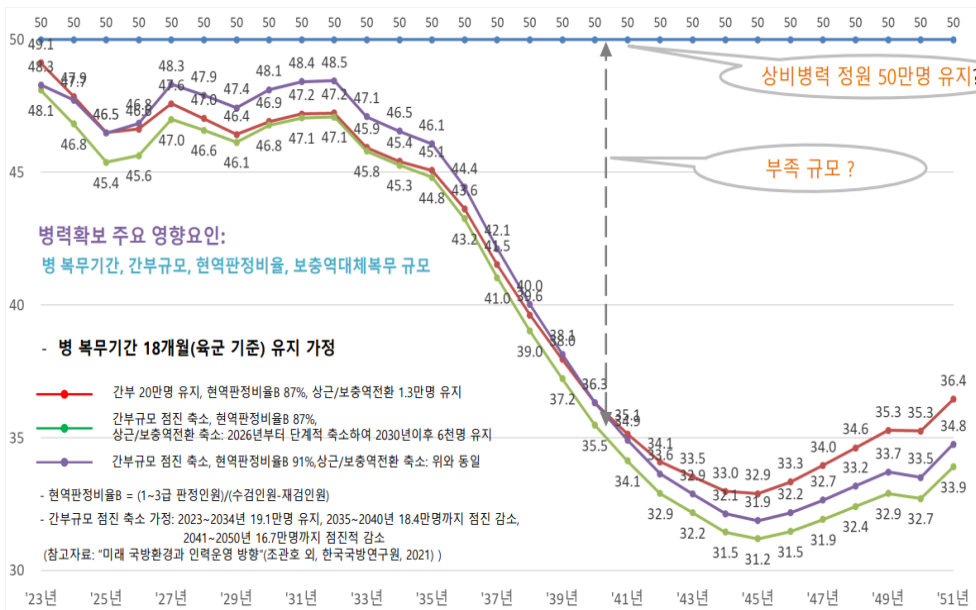
9) 조관호,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3.6.15.

서 간부 부족 현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국방인력 분야의 기초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력정책 대안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방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 Defense-Manpower Analysis & Planning Support Syste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한 인력통계와 인력계획모형을 활용하여 인력운영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증장기 전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군 인력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¹⁰⁾

2023년에 발행된 D-MAPSS 보고서에는 현 체제하에서 병 복무기간과 간부 규모, 현역 판정 비율, 보충역 대체복무 규모 등을 반영한 미래 상비병력 수급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현 체제 하 상비병력 수급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 KIDA, D-MAPSS, 2023

10) 국방부의 「군 인력관리훈령(훈령 999호, 2014. 12.)」에서는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국방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의 증장기 인력 예측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국방 통합 차원의 공식적이고 신뢰도 높은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 결과를 군 관련 실무자에게 제공하고자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 오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와 같이 간부를 20만 명 규모로 유지하고, 현역 판정비율을 B수준¹¹⁾으로 적용하며, 상근예비역 및 보충역 전환병력을 1.3만 명으로 유지할 경우 현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2020년대 초반부터 병력부족 현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병력규모 유지를 위해 현역판정비율을 추가 상향 또는 대체복무의 대폭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2차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는 부족 병력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부터는 35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뮬레이션에서는 간부 규모를 20만 명으로 유지한다는 가정을 한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간부 규모의 설정과 확보방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군은 2022년 병력 규모를 발표한 이후 병역자원 감소를 반영한 병력 규모를 포함한 병역정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예비군자원 감소 추이 분석

북한 등 외부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상비병력을 감축하지만 그것이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상비병력이 감축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한데 일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과학화로 보완하고 부족한 병력 중 비전투직위 상당부분은 민간인력(군무원+민간근로자)으로 대체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직위의 일정부분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간부 병력을 확보하여 보완할 수 있으나, 부족한 전투직위 중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최적의 대안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군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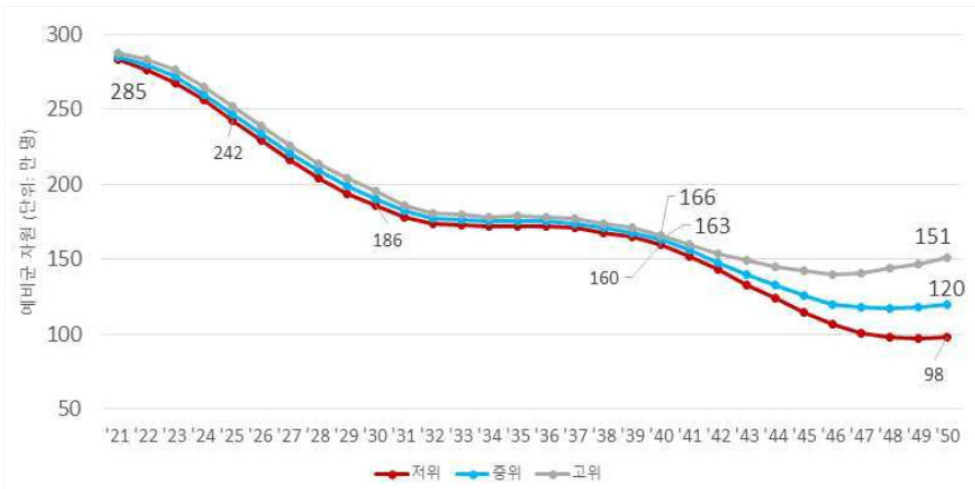
예를 들어 동원사단의 평시 편성률은 군 구조 및 병력구조 개편에 따라 2004년에 15%였으나 현재는 8% 수준으로 낮아졌다.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은 변하지 않았는데 평시 현역의 규모가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곧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렇게 상비병력이 감축된 직위에 평시부터 현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예화된 예비군을 편성하

11) 현역판정 비율: (1~3급 판정인원)/(수검인원-재검인원)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절벽의 영향은 비단 상비병력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 자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자원은 2021년 275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출산율 저위 기준으로 2025년에는 242만 명, 2040년에는 약 16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8〉 예비군 자원추계(2021~2050년)



출처: KIDA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21-34,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 2021.5.25, p.12.

이를 연차별로 분석해 보면 1~8년까지 예비군을 편성하는 현 제도를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총 예비군 규모는 242만 명이며, 2040년에는 160만 명으로 감소가 불가피하다.

만약 복무 연차를 1~5년 차까지로 조정할 경우¹²⁾ 예비군 규모는 〈표 2〉와 같이 2025년에 139만 명, 2030년에는 109만 명 수준이며, 2040년에는 94만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12) 예비전력 기본계획서(2019~2033)에서는 예비군 편성을 5년 차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13) 정진섭 등(2022), “미래 예비군제도를 대비한 예비군개념 정립 연구”, 국방부 연구보고서, (2022.10.), p.56.

〈표 2〉 연차별 예비군 가용자원 현황(추산)

구 분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8년차
2025년	78	108	139	172	242
2030년	65	86	109	132	186
2035년	66	87	108	130	172
2040년	54	74	94	116	160

출처: 정진섭 등, “미래 예비군제도를 대비한 예비군개념 정립 연구”, 국방부 연구보고서, (2022.10.), p.56.

단순히 예비군자원 감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가용자원이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전·평시 예비군 소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40년 기준 상비병력 유지 가능 규모가 35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비병력 부족분을 예비병력으로 상쇄해야 한다면 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비군 소요는 전쟁의 양상과 예상되는 기간, 작전계획을 기초로 전시 부대확장 소요(증편+창설)와 손실보충소요, 후방지역의 지역방위작전 소요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교리에 의해 예비군의 총 소요를 판단하여 제시한 문서는 없고, 전시부대계획에 따른 부대확장소요와 예상 손실률을 기초로 판단한 손실보충소요를 기준으로 병력동원소요만을 판단해 왔다. 지역방위작전 소요는 Bottom-Up 방식으로 하급 부대에서 판단한 시·군·구 단위의 소대 수를 제대별로 합산하여 그 결과치를 소요로 삼아왔다.

이렇게 소요를 산정하다 보니 「국방개혁 2.0」 또는 「국방혁신 4.0」 문서에 예비군 총소요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국방개혁 2.0」에 예비군 소요는 전체 예비군 소요에 대한 언급 없이 동원예비군 소요만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명시된 동원예비군에는 전시 부대확장과 손실보충에 필요한 예비군 소요를 망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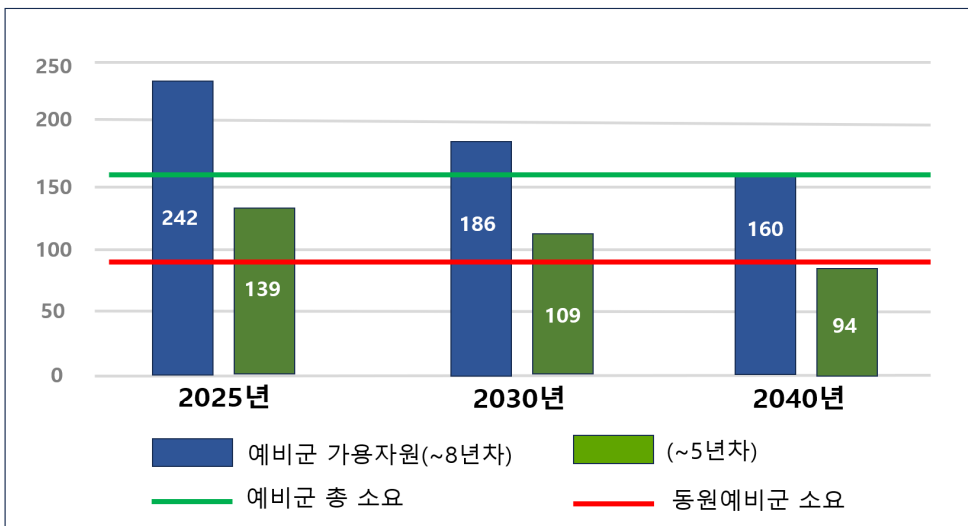
〈표 3〉 지역예비군 작전소요 현황

구분	계	육 군				해군		
		소계	2작사	수방사	지작사	소계	해군	해병대사
작전소요 (만 명)	64	00	00	00	00	0	0	0

한편으로 지역예비군 작전소요는 지역방위작전 시 예비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운용해야 할 총 소요를 말하며, 합참에서 판단한 現 지역예비군 작전소요는 64만 명으로 세부 현황은 <표 3>과 같다.¹⁴⁾

전술한 동원예비군 소요와 지역예비군 작전소요를 합하면 전체 예비군 소요가 되는데 현시점에서의 예비군 소요는 동원예비군 96만 명, 지역예비군 64만 명 등 총 160만 명이 된다. 예비군 가용자원과 소요 충족 여부를 예비군 편성 및 고려하고 있는 예비군 복무 연차와 연계하여 연도별로 판단해 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연도별 예비군 가용자원과 예비군 소요 비교(단위: 만 명)



국방부가 검토한 예비군 편성 연차를 현 8년 차에서 5년 차까지로 조정할 경우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0년 이후에는 예비군 총 가용자원이 94만여 명으로 예비군 총소요 160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는 예비군 가용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복무 연차의 재설정을 포함한 예비병력 확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4) 정진섭 등(2022), 앞의 연구보고서, p.78.

다. 신분별 가용 예비군자원 분석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병역 가용인구와 현역 입영 가능 인구 추계를 토대로 2040년 기준 신규 편입 예비군 가용자원은 추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군 병 가용자원이다. 현역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할 때, 2038년도에 입대한 자원이 2040년 예비군 1년 차로 편성된다. 따라서 2038년도 20세 남자 인구 가운데 징병검사 수검자 비중 약 96%와 징병검사 수검자 중에서 현역 및 보충역 판정비율 약 90%를 적용할 경우 예비군 가용자원은 약 15만 명으로 산출된다(174,174명×0.96×0.9=150,486명). 이 수치에서 예비군 간부 가용자원(여군을 제외한 약 1만 명)을 제외하면,¹⁵⁾ 2040년도에 신규 편입될 예비군 병 가용자원은 <표 4>의 현황과 같이 약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표 4> 연도별 예비군 ‘병’ 가용자원 추산

(신규 예비군 편입자원,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자원	288,570	273,877	274,191	261,192	223,471	206,411	203,770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자원	187,857	183,773	191,194	202,984	188,153	185,007	200,169
구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자원	196,645	192,036	179,986	183,135	176,844	157,546	140,486

출처: 연구자 산출.

예비군 간부 가용자원으로 1만 명을 뺀 것은 징병검사 현역 판정 자원 중에 장교·부사관으로 전환하는 인원(임기제부사관, 단기부사관, 간부사관) 등을 고려한 수치이다.

이를 ‘장래 예비군 편성조정 계획’에 따라 동원예비군 1~3년 차, 대기예비군 4~5년 차를 적용하여 산정해 보면 2040년 동원예비군 가용자원(1~3년 차)은 약 47.5만 명, 대기예비군(4~5년 차)은 약 36.3만 명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2040년도 병 예비군 총 가용자원(1~5년 차)은 약 83.8만 명으로 추산된다.¹⁶⁾

15) 예비군 병 가용자원 산출을 위해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에서 적용한 방식이다. 이용·채광원, 『미래 육군 병력동원 적정 소요 연구』, p.68. ; 조관호, “미래 국방환경 전망: 병력운영을 중심으로,” 「모병제: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2021 국방학술세미나 자료집(2021. 6.3), p.35.

반면에 현행 1~8년 차 체제를 유지하면 동원예비군(1~4년 차) 65.8만 명, 지역예비군(5~6년 차) 37.2만 명 대기예비군(7~8년 차) 39.6만 명 등으로 총 가용 자원(1~8년 차)은 142.6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간부예비군이다. 상비병력 50만 명은 장교 7만 명(14%), 부사관 12.7만 명(25.4%), 병 30.3만 명(60.6%)으로 구성된다. <표 5>의 같이 연간 간부 순환률 약 10%를 고려하면, 연간 간부 전역 자원은 약 2만 명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5> 연간 '간부' 예비군 가용자원 추산(단위: 만 명)

구 분		계	장교	부사관
평시 정원		19.7	7	12.7
연간 예비군 편입자원 수	연 순환율(%)	10%		
	전역자 수	1.97	0.7	1.27
	예비군 수	1.77	*전역자의 90% 적용	
총 예비군 간부 가용자원		10.6 (1.77 × 6년)		

출처: 연구자 산출

연간 전역 간부의 90% 정도가 예비군에 편입되므로, 이를 적용하면 연간 약 1.8만 명이 예비군에 새롭게 편성되며, 1~6년차 총 간부예비군 가용자원은 약 10.6만 명, 1~8년 차는 14.2만 명으로 추산된다.

<표 6> 2040년 예비군 가용자원 판단 (단위: 만 명)

구 분	1~5년 차 적용시			1~8년 차 적용시		
	계	병	간부(6년)	계	병	간부
계	94.4	83.8	10.6	156.8	142.6	14.2
동원예비군	58.1	47.5	10.6	113.6	65.8	10.6
지역예비군					37.2	
대기예비군	36.3	36.3	-	43.2	39.6	3.6

16) 우리 군의 '장래 예비군 편성조정 계획'에 의하면 1단계인 '24년까지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 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 2단계인 '30년까지 동원예비군(1~3년차), 대기예비군(4~5년차)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산출 결과에 따라 2040년 기준 예비군 총 가용자원은 <표 6>의 같이 1~5년 차를 적용 시 94만여 명, 1~8년 차를 적용 시 156만여 명으로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군 규모 275만 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소 결론

튼튼한 안보의 근간은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있다고 할 때 상비병력의 감축과 연계하여 예비병력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 국방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국가인구 감소의 여파로 병역자원은 급격히 감소하여 국방개혁을 통해 조정된 상비병력 50만 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 시 2040년까지 35만 명 이하 수준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예비병력의 확충이 긴요하나 예비군 편성을 상비병력 전역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상 예비군자원도 동반 감소하여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 억제에 실패하고 국가의 명운을 건 전면전을 치러야 할 경우 전쟁 지속의 주 전력은 예비군임을 고려할 때 예비병력의 확충과 운용·유지 정책은 상비병력 확보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안으로 상비병력 충원정책과 연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연구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비병력 유지 목표 50만 명의 부족 인원 15만 명(2040년 기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¹⁷⁾, 둘째, 상비병력 부족을 예비병력으로 상쇄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비병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래 과학기술군으로 개혁의 완성은 상비병력 규모를 일정부분 감축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겠지만 한반도가 처한 안보 리스크를 고려 시 첨단전쟁과 재래전쟁을 모두 대비하는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는 유지되어야 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상비군 유지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시 예비병력으로 전력 공백을 상쇄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병역의무부담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예비군 복무 연차

17)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변신은 2040년 기준 상비병력 규모를 더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상비군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50만 명을 가정하였다.

단축 문제도 국방인력 전체(총 전력)의 수급 상황, 상비군 단축에 따른 대체전력으로서의 역할, 경제적인 국방 운영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국방인력 소요와 보충 전망

1. 미래 안보환경 변화가 국방인력 정책(소요)에 미치는 영향

가. 글로벌 경쟁의 심화 및 북한 위협 상존, 혼란과 불안정성 증가

미래에는 지금보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기술혁명, 전염병, 금융위기 등 글로벌 도전이 증가하고 에너지, 식량, 기술 등에서도 수급 불균형으로 국가 간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되어 안보 강화와 군비경쟁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¹⁸⁾ 또한, 초연결시대의 극단화·분열화 현상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나 공동체가 수용하기에 제한이 되고, 노령화·자율화·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간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적인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고도화, 재래식 전력 유지와 현대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로 우리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이버전, 인지·심리전, 생물학적 위협, 테러 등 비전통위협 증가에 대한 대비와 한미동맹의 유동성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도 감소보다는 총량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증가할 것이며, 잠재적인 위협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도 군사력 소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한·미동맹과 같은 공동의 대응과 함께 미래 상황의 유동성에 대비한 독자적인 대응능력 강화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 조관호,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_상비병력 충원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21.5.25.), p.5.

나. 전장영역의 확장과 첨단화,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혁신 요구

한편,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전 양상 변화에 따른 부대구조와 병력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미래전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능형 전쟁으로 진화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 인지·심리 등 새로운 전장영역 확장과 함께 무기체계의 정밀성과 위력도 향상되고 신무기체계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군구조는 기술중심 구조로 더 빠르게 진화하고 병력구조는 전문성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미래 군구조 설계 시 핵심적인 제한 요인 중 하나는 병력확보 문제가 될 것이다. 「국방혁신 4.0」에서도 전투부대 중심의 병력 효율화, 즉 병력은 전투부대로, 지원기능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40년을 내다보는 부대구조와 병력구조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가용자원의 제약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가 예상된다.

부대편성 측면에서는 경량화되고 편조화된 편성, 유무인 복합부대 편성, 유사 기능부대의 통합편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병력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무인화, 자동화 등에 의한 병력 절감형 편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군별 미래 부대구조를 발전시켜 시범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육군의 ‘아미타이거여단’, 해군의 ‘무인수상함·잠수정·항공기전대’, 공군의 ‘유·무인전투기복합체계 기반 부대’ 등이다. 2022년부터 시범 운용 중에 있는 아미타이거 4.0은 2030년대 중반을 구현 시점으로, 전투대대 성격에 따라 10~25% 수준의 병력절감 편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학기 등(2018)의 연구자료¹⁹⁾에서도 국방행정 분야의 기술에 의해 인력 대체 효과가 20% 정도일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전투부대의 병력확보와 지원부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역 직위의 민간인력 전환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군 도입은 기존의 병력집약형 군대에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 전투수행개념에 부합한 부대개편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병력절감, 현역 직위의 민간인력 전환이 추진될 것이다.

19) 이학기 외. (2018).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방안 연구”(기본연구 18-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98.

다. 국방인력정책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WMD 능력 발전, 재래식 전력 유지와 현대화, 북한 내부의 불안정 가능성 등 북한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중 경쟁 심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주변국과의 도서영유권, 해양관할권, 자원개발 문제 등으로 다양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감염병·테러와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상이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미래 국가인구의 감소와 전쟁양상의 변화로 현재와 같은 병력 중심의 군구조는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현상은 멀지 않은 시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절벽 상황에서 병력확보를 위한 병력운영체제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부담의 완화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다.

청년인구의 소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민간과 군 간의 인력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군인 직업 선호도의 획기적 변화 없이는 군 인력확보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의 소요와 사회적 병력공급 능력과의 거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병력운영체계의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간부 및 민간인력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추진은 국방예산의 소요를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국가 성장률의 저하와 복지 소요의 증가는 향후 적절한 국방비 확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미래 국방 여건은 기술 진보 추세와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방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북한을 비롯한 글로벌 위협과 기술진보, 인력활용 가능성과 국가 재정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국방 안정성과 사회적 요구의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국방인력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2. 국방인력 소요 계획 분석

가. 국방인력정책 추진 방향

우리 군은 병역자원 수급 전망과 부대구조 개편, 전력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 이러한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투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간부 병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다.²⁰⁾

첨단무기체계 확대 도입에 따라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운영 능력과 전문기술을 가진 간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간부 편성률을 높이면서 간부 증원을 추진하여 상비병력 중 간부의 비율을 2022년 20.1만 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 2027년까지 20.2만 명(상비병력의 40.5%)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²¹⁾ 특히,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며,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2022년 18.3%에서 2027년까지 19.8%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력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민간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 행정, 보급 및 정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비전투분야의 현역은 전투부대로 전환함으로써 전투부대를 보강하고 있다. 민간인력 중 예산, 보급, 정비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군무원을 보강하고, 시설관리, 조리, 어학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에는 민간근로자를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국방인력의 4.7% 수준이었던 민간인력 비중은 2022년 11%까지 높아졌다. 군무원은 군인이 직접 수행하는 전투 등의 업무를 제외한 작전지원, 신영역·신기술 분야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인력의 중요한 축²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군은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 중심의 전장환경, 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여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군 규모는 2020년 기준 1.4만 명, 간부의 7.5% 수준에서 국방개혁 2.0의 병력감축이 완료된 2022년에는 1.7만 명, 간부 정원의 8.8%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 안에 따르면 향후 2027년에는 2.7만 명, 15%를 전망하고 있다. 그 이후 확대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군 인력관리 특성상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p.129.

21) 국방개혁 2.0에서는 2022년 병력규모는 50만 명, 목표 간부 규모는 20.2만 명, 병 규모는 29.8만 명으로 정함

22)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제1항에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 국방인력운영의 변화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 7〉 국방인력운영계획 상 주요 인력운영 지표

지 표		'22년도	'27년도
국방 정원	군인	50만명	50만명
	간부 (비중)	20.1만명 (40.2%)	20.2만명 (40.5%)
	군무원	4.5만명 (11%)	4.7만명 (11.3%)
	여군	1.7만명 (간부의 8.8%)	2.7만명 (간부의 15%)

나. 국방인력 보충 전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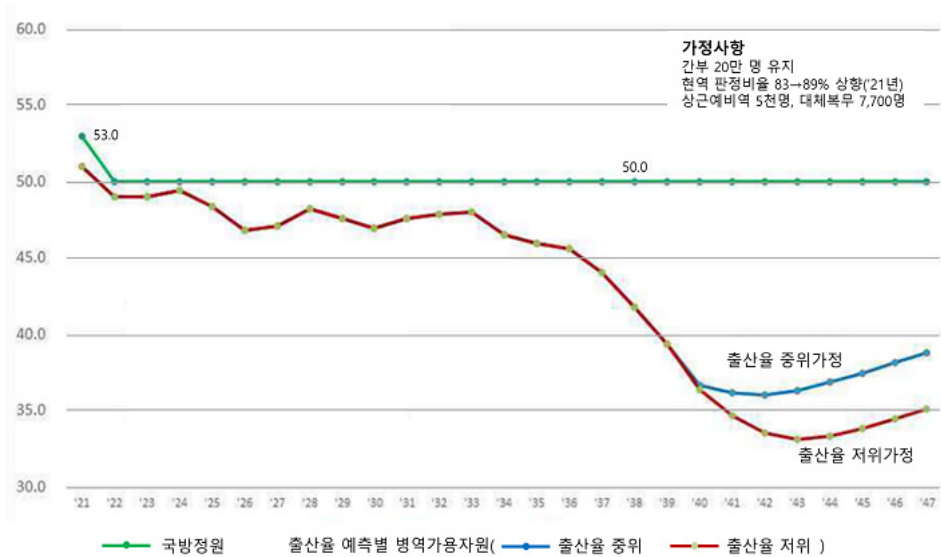
1) 국방인력 보충 전망

미래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전투부대는 간부를 증원하여 전투 및 작전 숙련도를 강화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둘째, 예비전력은 핵심 동원전력(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을 우선 정예화하고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평시 동원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유사시 동원 속도를 단축시키도록 하는데 방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예측치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추세에 맞춰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부대 개편, 간부 증원, 민간인력²³⁾ 확대, 여군 확대 등이 동시에 빠르고 큰 폭으로 진행되면서 인력구조 조정의 신분별 연계성과 속도, 인력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23) 민간인력은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구분한다. (『2020 국방백서』, p.101p)

〈그림 11〉 장기 병력수급 전망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_상비병력 충원을 중심으로”, (2021.5.25.), p.8.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²⁴⁾한 장기 병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제1차 인구절벽(2010년대 말~2020년대 중반)이 본격화되면서 현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20년대 초반부터 병력 부족 현상이 시작되어, 병력 부족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현역 판정 비율을 83%에서 89%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전환복무 폐지, 대체복무 감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현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간부 규모를 20만 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병력 수급을 전망해 보면 20세 남자인구는 2020년 33만 명 → 2025년 23만 명 → 2040년 1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²⁵⁾ 2040년 20세 남자인구는 2020년의 절반이 안 되는 41%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2025년 병역자원으로도 5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2030년대 초반까지 평균적으로 2~3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2040년 기준으로 병력확보 수준은 최대 30만 명대 중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병역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현역 판정비율을 급격하게 상향 조정하기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체복무의 축소 또는 폐

24)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_상비병력 충원을 중심으로”, 2021.5.25.

25)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앞의 보고서, p.5.

지 역시 국가인력 활용 관점에서 기존 기관과의 갈등이 예상되어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간부와 병: 편성 비율과 수급 전망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의 대안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간부 증원이다. 국방개혁에서도 간부 규모와 여군 확대를 통해 간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전문화된 숙련 간부의 비중을 올리기 위해 상비병력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7년까지 40.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투 및 작전지속지원부대를 중심으로 상시 전투준비태세가 차질없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먼저 GOP 및 해안경계, 공중감시 및 정찰, 초동조치 등 24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현행작전부대, 대테러부대 등에 병력을 보강하였다. 2021년에는 경계작전부대 영상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병력을 보강하였으며, 2022년에는 작전지속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부대를 보강하고, 향후에도 상시 상황조치 및 대기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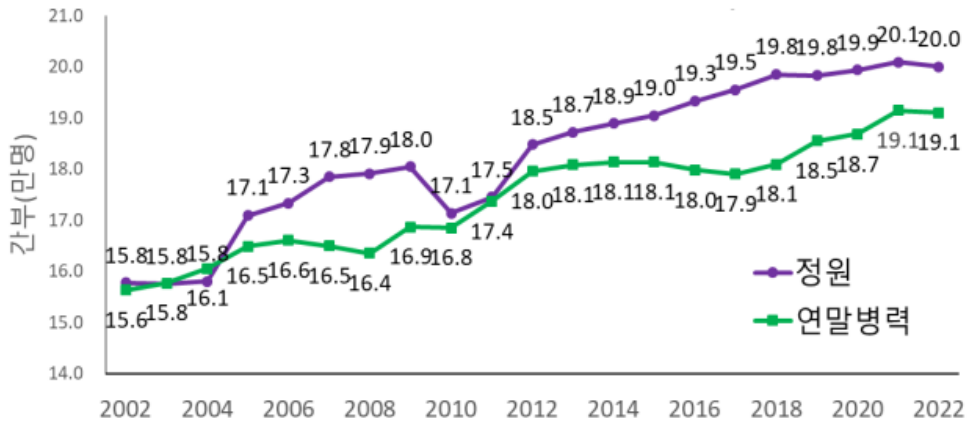
간부의 획득은 숙련간부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임 간부의 정원은 줄이고, 획득한 인력은 최대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계급²⁶⁾ 간부의 정원을 늘려 정원 비율이 2022년에는 18.3%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까지는 19.8%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대보다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학군 및 학사 장교의 지원 인원 감소 추세는 미래의 간부확보 여건을 잘 보여준다. 남군 지원 인원은 2016년 2.2만 명에서 2020년 1.1만 명으로, 선발인원은 5,7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경쟁 비율은 3.9:1에서 2.4:1로 감소했다.

육군 발표에 의하면 2024년 육군3사관학교 3학년생 모집 정원은 550명이었지만 430명(78.1%)만 지원했고, 학군장교(ROTC) 모집 경쟁률도 2023년 1.8:1로 사상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의 복합적인 영향이다. 현재 징병제에 기반하여 간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인구 감소와 병역부담 완화 추세가 간부확보 전망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26) 중간계급은 장교는 대위와 소령, 부사관은 중·상사를 의미한다.

〈그림 12〉 간부 정원 및 연말 병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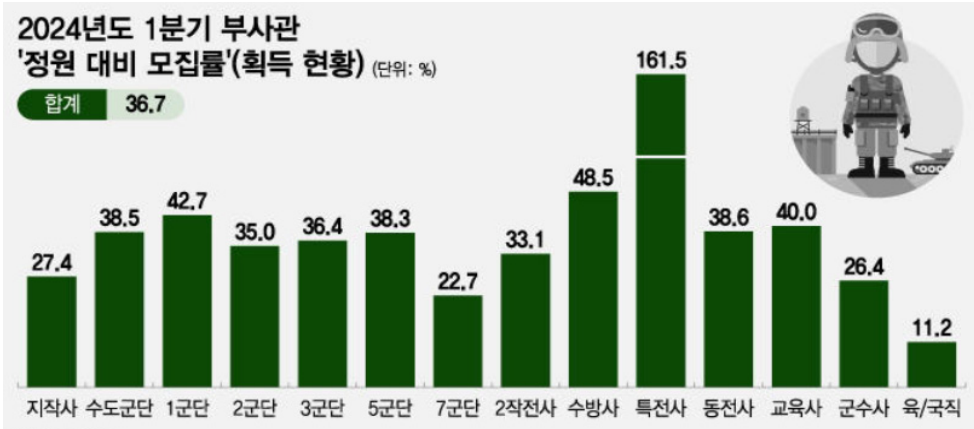
출처: 앞의 보고서, p.2.

한국국방연구원 D-MAPSS(2022)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 간부의 정원 대비 운영인력 수준은 〈그림 12〉와 같이 정원 20만 명 대비 실제 운영인력은 19.1만 명으로 약 9천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간부 운영인력의 부족 현상은 장교와 부사관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사관 충원의 어려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군 부사관의 경우 민간자원 지원 인원은 2016년 2.9만 명에서 2020년 1.9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최근 육군은 2024년 1/4분기 부사관 모집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집 정원의 36.7%만을 모집하였고, 정원을 채운 특전사를 제외한 대부분 부대에서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부사관 정원 미달은 최근 5년간 지속돼 오는 추세로 구체적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군의 1분기(2024년 1~3월) 부사관 모집률(정원 대비 실제 모집 인원)은 36.7%로 군 인력 운영 계획상 매년 모집해야 하는 정원 100명 중 약 37명만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양구·고성군, 경기도 파주시·연천군 등 최전방 부대의 정원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방 부대의 모집률은 △1군단 42.7% △2군단 35% △3군단 36.4% △5군단 38.3% 등으로 집계됐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수도군단 모집률은 각각 48.5%와 38.5%로 집계됐다. 동원전력사령부(동전사)는 38.6%, 군수사령부(군수사)가 26.4%로 나타났다. 육군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최하위 모집률인 11.2%를 기록했다.

〈그림 13〉 2024년 육군 부대별 부사관 정원 대비 모집률 현황



출처: 김인한, “육군 부사관이 모자라요’ 정원 63% 부족...특전사만 채웠다”, 『머니투데이』, 2024년 4월 23일자

이러한 결과는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및 병 봉급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징병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를 대상으로 간부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의 모집제도는 앞으로 청년인구 감소와 병사에 대한 병역부담 완화 추세, 급여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도입 등의 영향을 받아 그 확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군인 직업경쟁력이나 간부운영체제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단기 복무자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복무하는 장기복무자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경쟁하여 간부를 확보하는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3) 여성인력 운영계획과 보충 전망

국가 차원에서 병역자원이 부족할 경우 해결방안으로는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상비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²⁷⁾ 전자의 경우는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병력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인 주변국의 동향을 볼 때 급격한 감축은 고려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후자인 병력자원 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방부는 현역 판정기준 완화, 전환복무 폐지, 대체복무의 50%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만으로는 부족 병력의 소요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전투력의 질적 저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27) 강소영·김경곤·김영곤·김병주·김진형·남기현(2023), 『2023 국방정책 환경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최근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군인력의 확대 필요성은 비단 병력자원의 부족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차원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여군 비율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과 같이 여군에 대해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여군 비율과 규모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외국군 여군 규모 및 비율(2020년 기준)

구 분	총 계		장 교		부사관	
	규모(만명)	비율(%)	규모(만명)	비율(%)	규모(만명)	비율(%)
미국	22.5	17.0	4.3	18.5	18.2	16.7
프랑스	3.2	15.5	0.4	11.0	1.4	14.9
호주	1.1	19.2	0.3	21.3	0.8	18.4
독일	2.2	12.1	0.6	8.9	1.1	11.6

출처: 이은정(2022), “여군 확대 추계 분석과 정책방향”, 『국방논단』, 1889(22-10).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여군은 2012년 8,200명(간부의 4.3%) → 2020년 13,500명(간부의 7.4%) → 2022년 17,000명(간부의 8.8%)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향후 중기계획의 여군 획득 인원과 진출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면 2040년 여군 규모는 4.7만 명, 비율은 25%가 예상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상대적으로 획득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간부 정원 축소 또는 남군 획득 인원 감소 시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2023년 2월 기준 각 군별 여군의 규모와 비율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한국군 각 군별 여군 규모 및 비율(2023년 2월 기준)

구 분	총 계	육 군	해 군	공 군	
인원 (점유율)	계	16,667명 (10.2%)	11,425명 (9.6%)	2,409명 (10.1%)	2,833명 (10.3%)
	장교	6,421명 (10.9%)	4,628명 (10.6%)	662명 (10.4%)	1,131명 (11.8%)
	부사관	10,246명 (9.5%)	6,797명 (9.1%)	1,747명 (10%)	1,702명 (9.5%)

출처: 김영성(2023), “20세 남성인구 절벽에 따른 여군인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4권 2호, pp.1323-1338.

2020년 기준 병과별 여군 점유비율은 행정 20%, 기술 10%, 전투병과 5%로 앞으로 여군 비율 증가는 행정, 기술 병과보다는 전투병과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 기술 등의 분야는 민간인력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이 분야는 여군과 민간인력 활용이 증첩되는 분야로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소 결론

미래 안보 위협이 감소하기보다는 총량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증가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인력 확보는 국가 안보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미래 국방인력운영정책의 지향 방향은 전투부대는 간부를 증원하여 전투 및 작전 숙련도를 강화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예비전력을 강화하여 전시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측치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상비군 규모의 대폭적인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고, 전문화된 숙련 간부의 비중을 40% 수준으로 증가시켜 첨단과학기술군의 중추로 삼고자 한 인력정책은 장교, 부사관 모두 지원을 하락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하여 요망하는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첨단과학기술군을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기대한 간부의 충원과 유지도 직업군인의 직업경쟁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상비병력 부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예비전력의 가치와 실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역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인원의 질적, 양적 확대와 민간인력 및 조직을 지원예비군으로 편입시켜 준 상비군으로 운용함으로써 부족한 상비병력 직위를 대체하고 경제적인 군 운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IV. 외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상비병력 부족 문제는 한국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적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적정 수준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군을 상비군의 동반전력이자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제에서 모

병제로 전환함에 따라 상비군 감축과 국방비 삭감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총체전력 개념을 도입하여 예비전력을 주요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상비병력 부족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예비병력 운용사례를 고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예비병력의 실제 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우리 군에 적용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가. 미국의 총체전력정책과 예비군 운용

미국의 총체전력정책(Total Forces Policy)의 개념은 1973년 닉슨(Richard M. Nixon) 행정부가 베트남전쟁 반전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군사력의 저하, 국방예산 압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이 정책의 기본 개념은 첫째, 상비군의 일차적 증원대상으로서 예비군을 활용하는 것이며, 둘째, 모든 이용 가능한 상비군, 예비군, 민간인력 및 연합국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²⁸⁾ 이러한 방침에 의거하여 평시에는 국가안전 정책, 군의 전략, 국외 파병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상비군만을 유지하며, 상비군과 예비군과의 능력과 전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 현역의 상당 부분을 예비군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들 예비군으로 하여금 전시의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평시의 주요 작전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총체전력 개념은 예비전력을 잉여전력이 아닌 주요 전력요소로 인식하고, 예비군을 상비군과 동일 수준으로 육성하여 기존 전력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상비군과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군 구조를 개선하고,²⁹⁾ 상비군과 동일한 장비·물자로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총체전력 개념하에서 <표 10>의 현황과 같이 약 6:4의 비율로 상비군(현역)과 예비군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

28) 이필중, 『군사동원론』(서울: 국방대학교, 2003), pp. 46-47.

29) 상시 복무하는 긴급예비군으로 상근예비군(AGR), 계약예비군(ADOS 등)을 확대 편성

〈표 10〉 미군의 상비군과 예비군 배합 현황(2024년 기준)

구분	총병력 (100%)	상비군 (62.7%)	예비군(37.3%)			비고 (병력구성비)
			계	연방예비군	주방위군	
계	2,048,100	1,284,500	763,600	333,600	430,000	100%
육군	944,800	445,000	499,800	174,800	325,000	48.4%
해군	395,000	337,800	57,200	57,200	-	20.2%
해병대	204,300	172,300	32,000	32,000	-	10.4%
공군	494,600	320,000	174,000	69,600	105,000	20.5%
우주군	9,400	9,400	0	-	-	0.5%

출처: Defense Budget Overview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2025 Budget Request Revised April 4, 2004.

먼저 상비군인 현역(Active-Duty)부대는 총병력의 62.7%인 128만 명 수준이다. 전원 현역(상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투수행이 가능한 여단 단위 모듈화부대로 구성하고,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부(작전사, 군단, 사단)와 작전적 지원이 가능한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로 편성되며, 단기적으로 단독 임무수행이 가능한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한다.

예비군은 연방예비군과 주방위군으로 편성되며 37.3% 수준인 76만여 명으로 전원 예비군으로 편성된다.³⁰⁾ 연방예비군(Reserve)은 전·평시 현역(상비군)을 장기적(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작전지속지원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 역시 전원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시 卍 방위(테러 등)와 재난에 대응하며, 전시에는 현역(상비군) 부대를 증원·교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군의 부대 유형을 한국군 육군과 비교하면 현역 부대(Active-Duty)는 전방군단 등에 소속된 상비사단과 유사하며,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은 지역방위사단, 연방예비군(Reserve)은 유사시 확장하여 증원하는 동원사단과 유사하다. 병력 편성 면에서 한국군은 지역방위사단과 동원사단에 평시 현역(상비군) 병력을 편성하고 있으나 미군은 전원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30) 매년 발간되는 미 국방예산서에는 각 군별 선발 예비군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정원은 763,600명으로 되어 있다.

나. 미국의 예비군제도

미국군 총 전력의 약 40%에 해당하는 예비군의 복무 형태는 다음 페이지 <표 11>의 같이 계약에 따라 긴급예비군, 대기예비군, 퇴역예비군 등으로 구분되며, 총 전력상 예비군 병력에 반영되는 인원은 긴급예비군의 주력인 선발예비군(Selected Reserve)을 말한다.

선발예비군(Selected Reserve)은 예비군 복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운용 및 훈련하는 예비군으로 2024년 기준 76만여 명 수준이며, ①우리의 단기 비상근예비군에 해당하는 부대편성 예비군(TPU: Troop Program Unit)과 ②장기 비상근예비군에 해당하는 상근예비군(Active Guard Reserve)³¹⁾, ③개별동원예비군(IMA: Individual Mobilization Augmente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선발예비군 중에는 ADOS(Active Duty Operation Support)와 밀텍(MT: Military Technicians)이라는 유형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ADOS는 현역 및 상근예비군(AGR) 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계약을 통해 추가 복무하는 인력으로 계약기간은 수일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ADOS는 별도의 신분이나 복무형태는 아니며, TPU, IMA, ING³²⁾ 등이 지원하여 선발 시 계약을 통해 각각의 AGR, TPU, IMA 직위에 추가 복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우리 군의 단기 비상근예비군과 유사하며 2024년 현재 약 69,200명으로 선발예비군의 약 9% 규모이다.

31) 우리 군의 장기비상근예비군은 연 180일을 근무하지만 미국의 상근예비군은 full-time(365일) 근무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큰 차이가 있다.

32) ING(Inactive National Guard): 미 복무 주방위군

〈표 11〉 미국 예비군의 복무유형

구 분		인원(비율)	내용
전체 예비군 수		1,213,130명	
긴급 예비군 (Ready Reserve) [용어정립] 복무가능 예비군	선발 예비군 (Selected Reserve) [용어정립] 선 발 예비군	계 763,600명 (100%)	정원에 MT(47,727명, 6.2%), ADOS (69,200명, 9.2%)가 포함된 현황임
	①부대편성 예비군(TPU) Troop Program Unit [용어정립] 비상근예비군	541,819명 (70.9%)	예비군부대에 비상근(Part-Time) 복무하며, 부대단위로 집중 편성되어 있는 예비군으로 선발예비군의 70~80% 규모 *연간 최소 훈련일은 38일 월1회 주말 훈련(1박 2일, 연 12회) + 연14일 연속 동원훈련 *예비전력사령관은 TPU 신분으로 ADOS 추가 복무
	②상근예비군 (AGR) Active Guard Reserve [용어정립] 상근예비군	90,286명 (11.8%)	예비군부대 및 일부 현역(상비군)부대에 상근(full-time)하며, 예비군훈련, 관리, 모집, 운용, 계획 등에 운용되는 기간요원으로 선발예비군의 10% 규모 *진급, 급여, 복지, 복무기간(계급정년) 등 조건은 현역과 동일
	③개별동원 예비군(IMA) Individual Mobilization Augmentees [용어정립] 현역(상비군)지원 예비군	14,568명 (1.9%)	현역부대의 신속한 전사확장을 위해 개별 총원되는 예비군으로 선발예비군의 1~2% 규모이며, 주교 기술직이나 전문적인(동원/예비군업무 등) 능력이 요구되는 관리/참모 직위에 운용(연방) *연간 14일 동원훈련만 실시
	개인 준비 예비군 Individual Ready Reserve [용어정립] 복무준비 연방예비군	239,303명	군 복무기간이 남아 있으나 현재 복무하고 있지 않는 연방예비군 *국가 위기시 강제동원 가능/연1회, 1회 소집
	미 복무 주방위군 Inactive National Guard [용어정립] 복무준비 주방위군	2,677명	군 복무기간이 남아 있으나 현재 복무하고 있지 않는 주 방위군 *국가 위기시 강제동원 가능/연1회, 1회 소집
	대기예비군 Stand-by Reserve [용어정립] 복무보류 예비군	19,296명	군 복무기간이 남아 있으나 긴급 예비군 임무수행이 곤란한 자 *건강상 보류, 직업상 사회 필수 인력으로 분류
퇴역예비군 Retired Reserve [용어정립] 복무전역 예비군	188,254명	20년 이상 복무후 퇴직연금 수령자 (60세 미만) 및 수령 대기자 *국가 위기시 강제동원도 가능	

출처: 배웅인,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방안”(서울안보포럼 세미나 자료, 2024.7.16), p.78.

밀텍(MT: Military Technicians)은 현재 예비군은 아니지만, 유사시 예비군으로 전환 가능한 인원으로 현역·예비군 부대에 계약 복무하며 전체 선발예비군의 약 6% 규모이다. 이는 우리 군의 예비전력군무원과 유사하나 우리는 기술직위가 아닌 훈련지원·관리직위만 선발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미국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지원한 군과 현역 복무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총 의무복무기간은 8년이며 최초 지원 시부터 현역 또는 예비군(주방위군, 연방예비군)을 선택할 수 있다. 복무방법은 <표 12>와 같이 현역복무기간에 따라 예비군 복무기간이 달라지는 형태이다. 즉, 선발예비군 복무 연수는 본인 지원과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며, 현역 장교의 경우 현역 4년 + 선발예비군(SR) 2년 + 개인준비예비군(IRR) 2년 등의 형태로 기본설계가 이루어진다.

<표 12> 미국의 예비군 복무기간

구분	현역 지원자					예비군 지원자
	6년 복무	5년 복무	4년 복무	3년 복무	2년 복무	
계	8년	8년	8년	8년	8년	8년
현역	6년	5년	4년	3년	2년	+ 6개월
예비군 (선발/준비)	2년	3년	4년	5년	6년	선발 6년 준비 2년

다. 미국 예비군제도 평가

미국 총체전력정책의 특징은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비군부대는 예비군 편성 없이 100% 현역으로만 편성하고, 예비군부대인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은 상비군 편성 없이 상근예비군(AGR)과 비상근예비군(TPU) 만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점과 ADOS와 밀텍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 운영을 통해 상비군과 예비군부대 부족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점은 경제성과 유연성 면에서 높게 평가된다.

아울러 모병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복무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상비군과 예비군의 복무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역 복무와 예비군 복무를 엄격하고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한국군과 큰 차이가 있으며, 한국군 간부의 복무 형태를 개선할 때 검토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 즉, 현역과 예비군복무 총량제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 의사에 따라 현역과 예비군의 복무기

간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스라엘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가. 이스라엘의 국민 총동원체제와 예비군 운용

이스라엘은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접하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지속적인 유혈 충돌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세적이고 속전속결을 지향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800만여 명에 불과한 적은 인구로 인하여 대규모 상비군 유지가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총동원체제(시민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병력규모와 전력배합 비율을 보면 <표 13>과 같이 상비군은 총 전력의 27%에 해당하는 17만여 명이며 평시 경계 및 초동대처와 근무지원부대로 운용하고, 73%에 해당하는 예비군 46.5만 명을 유사시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 13> 이스라엘의 상비군과 예비군 전력배합 현황

구 분	계	상비군	예비군
계	64.15만명(100%)	17.65만명(27.5%)	46.5만명(72.5%)
육 군	53.3만명	13.3만명	40만명
해 군	1.95만명	0.95만명	1만명
공 군	8.9만명	3.4만명	5.5만명

출처: 국방부,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제도』(2017), p.200.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상비군으로 초기 반격에 대응하면서 10월 7일과 8일 사이에 36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총 동원령을 발령하였다.³³⁾ 이후 이스라엘군은 동원 병력이 전열을 가다듬는데 소요 되는 3일이 경과한 10월 9일에 본격적인 공격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전쟁 수행의 주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3) 2024.6.1, ChatGPT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 동원시기” 검색

나. 이스라엘의 예비군제도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조직되며 <표 14>와 같이 제1예비역은 동원예비군으로 국방의 주력이 되며, 제2예비역은 후방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표 14> 이스라엘의 병역제도

구 분		연 령	임무 및 기능	비 고
가드나		14~17세 (남·여)	준군사훈련 유사시 전투근무지원	전시 연락, 통신, 간호, 보급 분야 보조역할
현역 (상비군)		18~21 (남32월,여24월)	예비군 동원전까지 억제, 평시응징보복, 예비군 훈련	평시, 예비군 관리/지원
예 비 군	제1예비역	남 21~39세 여 20~34세	동원예비군으로 국방의 주력부대	공수, 기갑, 기계화부대, 돌격공격부대 등
	제2예비역	남 40~44세 여 35~38세	후방지역 방어임무	보병여단, 지원병과
민방위대		45~54세(남자)	경계, 치안, 재해복구	지역/직장단위 편성

출처: 국방부,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제도』(2017), p.204.

예비군 복무기간은 남자는 44세까지 여성은 38세까지 복무한다. 여성예비군의 복무부대 및 수행 임무는 남자와 차등이 없다. 다만 임신 또는 출산, 육아 부양 시 예비군 의무가 해제되나 필요시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전체 예비군의 10% 정도이다.

예비군 부대편성은 <표 15>와 같이 Cadre system을 적용하여³⁴⁾ 현역부대와 혼성 편성 또는 예비군 위주의 부대편성 등을 적용하게 된다.

<표 15> 정규사단에서 예비군 부대 동원지정 모델

상비여단	예비군여단	지역여단(A)	지역여단(B)	지역여단(C)
'가' 대대	① 대대	현역대대	① 대대	① 대대
'나' 대대	② 대대	② 대대	현역대대	②대대
'다' 대대	③ 대대	③ 대대	③ 대대	현역대대

34) 주요 직무에 상근하는 장교 및 사병으로 구성된 부대단위로 기간 편성된 단위부대를 말한다.(장 병욱, 『국방논집』, 제22호, 1993.)

예비군 편성의 특징은 최초 예비군부대 지정 후 거의 변화 없이 같은 부대에 고정배치하고, 현역 시절부터 약 7~15년 동안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평생 전우처럼 결속을 유지하게 되므로 이는 전투력 발휘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중대장 이상 예비군부대 지휘관들은 소집되는 기간 외에도 평시 소속 대원들과 자주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접촉을 유지하므로 지휘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결속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대대장은 연간 50~100일 동안 부대업무에 관여하는 미군의 비상근 복무(Part time)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³⁵⁾

예비군의 진급은 전 계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소령·중령은 예비군 경력으로, 대령은 소정의 시험 합격 시 진급을 하게 되며 신분별 진급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다. 이스라엘 예비군제도 평가

이스라엘의 총동원제도 특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역자원(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체제이며, 상비군은 억제전력으로 서 평시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시 예비군 동원에 대비한 준비태세 구축과 동원 집행 임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중·대대장 등 주요 직위자는 연간 50~100일 동안 미국의 비상근예비군과 같은 형태로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군의 경우에도 남군과 동일한 형태로 예비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예비군 진급을 전 계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책별 보수교육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즉, 상비군과 동일한 형태의 진급체계 구축을 통해 부족 계급과 병과의 자원을 확보하고 개인의 명예 욕구를 충족하며, 보직의 상승적 변화와 경제적인 혜택까지도 고양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3. 싱가포르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싱가포르는 남아시아 말라카해협의 해양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586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징병제를 채택하면서 전역자 전원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등 한국과 예비군제도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35) 이스라엘 예비군 복무법, IDF 국방조직 편성 및 지휘체제, 이스라엘 개황(이스라엘 외교부 홈페이지)

가. 상비예비군제도와 예비군 운용

싱가포르는 국민 징병제와 상비예비군제도(Operational Ready National Servicemen)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비예비군제도는 2년간 현역으로 의무복무 후 10년간 상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예비군훈련은 연간 6~14일간(최대 40일)의 동원훈련에 참가하며 예비군 복무 종료 연령은 사병 40세, 장교는 50세까지이다. 싱가포르의 상비예비군 규모는 <표 16>과 같이 총병력의 약 80%인 31만 명 수준으로 유사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 16> 싱가포르의 상비군과 예비군 전력배합 현황

구 분	계	상비군	예비군
계	385,000(100%)	72,500(18.8%)	312,500(81.2%)
육 군	80,000	50,000	30,000
해 군	14,000	9,000	5,000
공 군	21,000	13,500	7,500

출처: 국방부,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제도』(2017), p.34.

예비군은 <표 17>과 같이 현역과 예비군을 배합한 혼성부대의 형태로 운용한다. 예비군의 동원지정은 현역 복무 2년을 마치고 예비군부대에 대대단위로 편성 되는데, 병사의 경우 10년 동안 소속과 보직이 고정되며 간부의 경우도 진급 등의 사유 외에는 가급적 소속과 보직을 고정하여 운용한다.

<표 17> 육군 사단별 예비군 편성 “예”

구 분	A사단	B사단	C사단
현역 / 예비군	40% / 60%	30% / 70%	10% / 90%
예 하 부 대	현역 1개 여단, 예비군 2개 여단		예비군 여단 3개

출처: 구원근 외, “싱가포르 예비군제도 사례를 통해 본 예비전력 발전연구”, 『군사연구』, 148집 p.383.

나. 싱가포르 예비군제도 평가

싱가포르의 예비군은 상비군과 동일한 위상을 가진 국방의 주력이며, 총체전력의 일부로써 운용된다. 따라서 예비군에게도 현역과 동일한 장비 및 물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예비군 복무는 현역복무의 연장선에서 병역의 의무와 동일하게 관리

하고 있다. 아울러 복무에 합당한 보상과 복지제도를 갖추어 예비군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들은 그들의 복무를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자긍심을 견지하고 있다.

4. 현대전에서 예비병력과 민간인력 운용사례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작전명 Z'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양국 모두 개전 초기 투입되었던 상비병력의 대다수는 예비병력으로 대체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세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력까지 자의반 타의반 전쟁에 가담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쟁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에 소요되는 장비와 물자는 물론 병력까지 점차 고갈되어 전쟁 수행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여 병력(인력)을 살펴보면, 전쟁 이전 정규군 규모는 21만 명 수준이었으나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2022년 1월 영토방위군을 우크라이나군의 정식 군사 직제에 반영하고 총 25개의 향토여단과 의용군(시민지원군)을 모집하여 2022년 2월 11일 예비군 및 의용군 수는 총 200만 명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전쟁 개시 하루 전인 2월 23일 동원령을 선포하여 최초 3.6만 명을 동원하였으며,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총동원하여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다. 즉, 상비전력은 초기대응전력으로 운용되었으며,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예비군이 주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³⁶⁾

2024년 8월 현재 2년 6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사상자 규모는 약 25만 명으로 개전초기 전투에 투입되었던 정규군의 상당수는 전사하거나 피해를 입고 전선으로부터 이탈된 상태이며, 개전 이후 충원된 예비병력과 민간인력에 의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러시아의 경우 개전초기에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비병력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전쟁 개시 7개월이

36) 정진섭, “우크라이나 사태 시사점과 국가동원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2023 안보연구시리즈, 제5-5호),

경과한 2022년 9월 21일에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여 30만 명을 동원하여 장기전을 치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지속적인 병력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민간인력과 기업이 전쟁 지속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여성을 포함한 남녀노소가 작전지속지원임무는 물론 전투 임무에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강대국을 상대로 장기전을 치르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전쟁 초기에 주요 축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1세기의 전쟁은 첨단과학기술전과 단기 속전속결전이 될 것이라는 달리 재래전 양상의 소모전이 길어지면서 예비전력이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전력이 되고 있으며, 병력 부족이 불가피한 한국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예비군 운용사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이다. 2024년 6월 현재 8개월을 경과하는 동안 양국의 누적 사망자 수 4만여 명, 부상자 8만 5천여 명의 대규모 인명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쟁을 예비군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과거 1~4 중동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예비군을 주력으로 하여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 하마스의 무력 침공 이후 이스라엘은 상비군에 의한 반격으로 대응하면서 10월 7일과 8일 사이에 36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총동원령을 발령하였다.³⁷⁾ 이후 이스라엘군은 동원 병력이 전열을 가다듬는데 소요되는 3일이 경과한 10월 9일에 본격적인 공격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전쟁 수행의 주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자 전쟁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중동전쟁으로 확전이 예상되면서 이스라엘 예비군의 장기적 수행 능력에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³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일원인 하마스군은 “이즈 앳딘 알카사 여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1년에 설립되어 팔레스타인 해방과 이슬람국가 수립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을 펼치는 조직으로 로켓 공격, 자살 폭탄테러, 납치, 매복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즈 앳딘 알카삼 여단은 미국, 유

37) 2024.6.1, ChatGPT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 동원시기” 검색

38) 매일경제, “중동 전쟁 확전 위기 속 피로 누적되는 이스라엘 예비군”(2024.8.6)

렵연합,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는 테러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상비 정규군의 성격보다는 민간 테러 조직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투원을 충원하는 민간 주도 전투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역시 전쟁이 길어지면서 예비병력과 민간인력이 장기전을 주도하고 있다.

5. 소 결론

앞에서 3개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를 살펴보았는데 3개국 모두 자국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배합을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방위충분성을 갖춘 총체전력의 주 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을 육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병력의 감축이 불가피한 한국군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비병력 감축의 전력 공백을 상쇄할 수 있는 대체전력으로서 예비군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3개국은 예비군을 상비병력의 보조전력이 아닌 동반전력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가지고 현역과 동일한 전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국군조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동원 이후 현역 부대의 편제 직위에 편성되어야만 국군으로 인정받는 구조이다.

둘째,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적정 배합 비율을 재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예비군 규모를 재산정하여 역할과 임무에 맞게 정예화된 전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구성 비율은 약 6:4이며, 이스라엘은 약 3:7, 싱가포르의 경우 약 2:8의 비율로 전력을 구성하고 유사시 즉각 동원하여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군도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혁신과 연계하여 미래 국군의 총 병력 규모와 예비군 배합 비율을 설정하고, 예비군 임무와 역할에 맞는 임무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셋째, 부대 유형을 상비군부대와 예비군부대로 구분하고 예비군부대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평시 운영인력을 준상비군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즉, 미군의 연방 예비군 및 주방위군과 같이 평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주요 직위자는 임무에 따라 full-time으로, 그 외 병력은 part-time 근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간부자원의 확충과 정예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유사시 확장부대의 주요 직위자를 평시복무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경우에

도 별도의 간부교육과 진급 보수교육을 통해 상비군 간부와 동일한 수준의 임무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부족한 예비군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발전이 필요하다. 부족한 예비군의 범주에는 예비군 총규모 면에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특정 신분과 직위에서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신분별 복무 연령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진급제도를 통해 상급 직위의 예비군 부족 해소는 물론, 전반적인 예비군 복무기간을 늘려 직업성을 보장하면서 예비군 복무의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달성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같이 민간인력과 조직을 예비군으로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병력자원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동원소요를 줄이고 국가총력전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V. 한국군의 예비병력 운용 실태

본 장에서는 2장(인구감소 문제), 3장(국방인력 소요와 보충 문제), 4장(외국의 예비병력 운용사례) 등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한국군의 예비병력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예비군 운용개념 측면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이스라엘의 ‘총동원체제’, 싱가포르의 ‘상비예비군제도’ 등의 특징은 예비군을 상비군의 동반전력이자 주전력으로 인식하고 상비병력 부족의 약점을 상쇄하는 전력으로 예비군을 육성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병역자원 부족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도 미래 예비군의 역할과 운용개념 정립이 미흡하다. 인구감소의 여파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미래 예비병력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미래 예비군에게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편성하여,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

특히, 예비군 편성과 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 왔고 최근 들어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을 결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동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예비전력 내실화 차원에서 예비군 총 규모는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하고, 예비군훈련을 6년 차에서 5년 차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다.³⁹⁾ 또한,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2019~2030)에는 장기적으로 동원예비군은 1~3년 차로 편성하고 4~5년 차는 대기예비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신개념의 예비군 재설계 방안” 연구보고서(정철우 등)에는 지역·직장예비군과 동원·지역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일원화 편성·관리하되, 지역예비군 작전소요를 병력동원 소요로 편제화하여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⁴⁰⁾

또한, 2022년 국방부 “미래 예비군제도를 대비한 예비군개념 정립 연구(정진섭 등)”에서는 예비군을 동원예비군과 대기예비군으로 편성하되, 동원예비군은 부대 증·창설 및 손실보충 예비군에 지역방위작전에 동원되는 예비군까지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군을 대기예비군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군의 복무 연차는 현행 8년 차까지를 유지하되, 1~5년 차는 동원예비군, 6~8년 차는 대기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평시 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전시 동원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9) 국방부 정책연구, “미래 예비군제도를 대비한 예비군개념 정립 연구”, 2022.10., p.51.

40) KIDA, “신개념의 예비군 재설계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21.

이 외에도 각종 학술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대체로 유사한 내용들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예비군 편성 및 복무제도 관련 정책 / 선행연구 자료

구 분	연구결과
국방부 동원정책발표 (201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전력 내실화 차원에서 예비군 총 규모는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 • 예비군훈련을 6년 차에서 5년 차까지 단계적 조정
예비전력정책서 (2019~ 2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예비군(1~3년차) • 대기예비군(4~5년차)
육군비전 2030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비예비군과 대기예비군으로 편성
KIDA(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동원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일원화 편성 • 지역예비군 작전소요를 병력동원 소요로 편제화하여 흡수
국방부 정책보고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예비군과 대기예비군으로 구분 • 동원예비군(1~5년차): 전시 부대확장+지역예비군+손실보충 • 대기예비군(6~8년차): 훈련 미대상 / 전시 대비

또한, 「국방개혁 2.0」에서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편성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4년 차에서 1~3년 차로 1년 단축하고, '지역예비군'은 4~5년 차로 연차를 조정하며, 6~8년 차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대기예비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수 차례의 정책발표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편성과 복무제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는 결국 예비군 자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예비군의 역할과 총전력에서 예비군이 차지하는 전력 비율 설정, 예비군 소요 재산정, 예비군 복무 연차 설정, 부대 유형별 예비군 편성 및 운용개념 등을 정립하여야 한다.

2. 미래 예비병력 운용계획의 부재

본 연구의 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래 예비군자원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40년경에는 8년 차까지 유지하더라도 160만 명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소하는 예비군자원을 어떤 작전 소요에 얼마만큼 할당하여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비병력 운용계획의 재설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미래 상비병력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병력만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복무제도 재정립과 이와 연계한 시기별 연차별 가용 예비군 규모를 판단하고 부대확장예비군, 지역방위예비군, 손실보충예비군, 대기예비군 등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업이다. 아울러 미래 예비병력 운용계획은 군구조 및 병력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대 유형별 상비군과 예비군의 배합 비율과 이에 따른 비상근예비군 편성 등 제반 문제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교, 부사관, 병 등 신분별 계급별 소요를 판단하고 부족한 예비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간부예비군 수급 측면

총 예비병력의 감소도 문제지만 미래 첨단과학기술군을 이끌어 갈 전문(기술)인력인 간부예비군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병력자원을 분석할 때 전체 자원 수에 매몰되어 간부의 신분별 계급별 현황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비군자원을 신분(장교, 부사관, 병)과 계급(위관, 영관 등)별로 구분하여 가용자원을 분석해 보면 특정 신분과 계급에서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초급간부의 지원율 하락과 이탈률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간부예비군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비병력의 간부 비중은 40%(20만 명) 수준이나 예비역 간부는 계급별 정년 도래 등에 따른 퇴역조치 등으로 인해 전체 예비군자원의 9% 수준이고, 특히, 장기복무 간부인 영관장교와 상·원사 계층은 약 0.5%에 불과하여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영관장교 및 상·원사 계층의 동원지정 현황은 <표 23>과 같이 동일소요 대비 지정률은 중령 49%, 소령 80.2%, 원사 68.3%, 상사 93.5% 수준이나, 계급별 소요에 맞는 지정률은 중령 34.8%, 소령 41.2%, 원사 15.4%, 상사 9.6% 등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령이 수행해야 할 직위를 소령이나 대위가 수행하는 비율이 14.2%에 이르고 전시에도 가용자원 부족으로 공석인 비율이 51%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시 소요 예비군 간부 중 위관장교와 하사, 중사 등 초급간부는 대

체적으로 소요를 충족하고 있으나 영관장교와 상사, 원사는 소요에 비해 예비군 편성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최근 지원율 하락으로 초급간부의 확보율이 저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영관장교 및 상·원사 계층의 동원지정 현황

구 분	중령	소령	원사	상사
소요대비 지정	49%	80.2%	68.3%	93.5%
소요계급 지정	34.8%	41.2%	15.4%	9.6%
하위계급 지정	14.2%	39%	53%	83.9%

출처: 정진섭, “전투형 육군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혁신방안”, ‘23년 육군력 포럼 발표 자료(2023.11.29)

4. 여성예비군 편성과 운용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여군은 2012년 8,200명(간부 4.3%), 2020년 13,500명(간부 7.4%), 2022년 17,000명 수준(간부 8.8%)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향후 중기계획 안의 여군 획득 인원과 진출관리체계를 유지한다면 2040년 여군 규모는 4.7만 명으로 간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군의 예비역 편입은 군인사법 제41조(퇴역)의 규정⁴¹⁾에 의하여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군 전역자의 예비역 선택 비율은 20년 미만 복무자는 15.8%, 20년 이상 복무자는 35.5%로 남군의 예비역 편입률 100%와 크게 대비된다.

문제는 여군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간부예비군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현재와 같이 예비역 편입을 선택으로 할 경우, 여군이 증가할수록 가용 간부예비군 자원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군의 예비군 편입을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41) 군인사법 제41조(퇴역)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2011년 개정)

5. 예비군 진급제도

우리 군의 예비군제도에서 또 하나 문제점은 예비군 자체 조직 내에서 우수한 인원을 육성하고 진급시켜 부족한 상위직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 예비군 간부 진급 규정을 보면 <표 20>과 같이 하사에서 중령까지 가능하며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진급 기회를 부여한다. 진급 이후 복무기간은 해당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표 20> 계급별,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

구 분	하사→중사	중사→상사	소위→중위	중위→대위	대위→소령	소령→중령
최저복무기간 (현역+예비역)	하사로서 7년	중사로서 12년	소위로서 2년	중위로서 6년	대위로서 7년	소령으로서 7년
연 령	만40세 이하	만45세 이하	만40세 이하	만40세 이하	만42세 이하	만45세 이하

출처: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477호) 별표 19

현행 예비역간부 진급제도는 가장 소요가 많은 병장에서 하사 계급으로의 진급이 제한되고, 차상급 계급까지 1회에 한하여 진급이 허용되는 등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6. 비상근(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비상근예비군제도는 병력감축으로 상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평시부터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를 시작으로 점차 그 대상부대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비상근예비군제도는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개선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전시 증·창설부대의 동원속도 단축과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이 여러 평가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를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한사항도 도출되었다. 2022년 육본 정책연구보고서⁴²⁾에 따르면 비상근예비군 복무자의 직업보장과 복무 여건상 문제로 우수인력의 모집과 유지가 제한되는 문제와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하는 부대의 관련 업무와 교육훈련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상근예비군 운용 규모면에서도 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함으로써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장기 소요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선을 먼저 정하는 것은 예산의 논리에 정책을 역으로 끼워 맞추는 듯한 감이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 부대에 상근예비군(AGR) 9만여 명(11.8%)과 비상근예비군(부대편성예비군인 TPU) 54만여 명(70.9%)을 편성하여 상비병력 편성 없이도 상비군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군은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전시 확장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평시복무(비상근)예비군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대비가 미흡하며, 특히 평시복무예비군으로 활용 가능한 간부예비군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7. 지원예비군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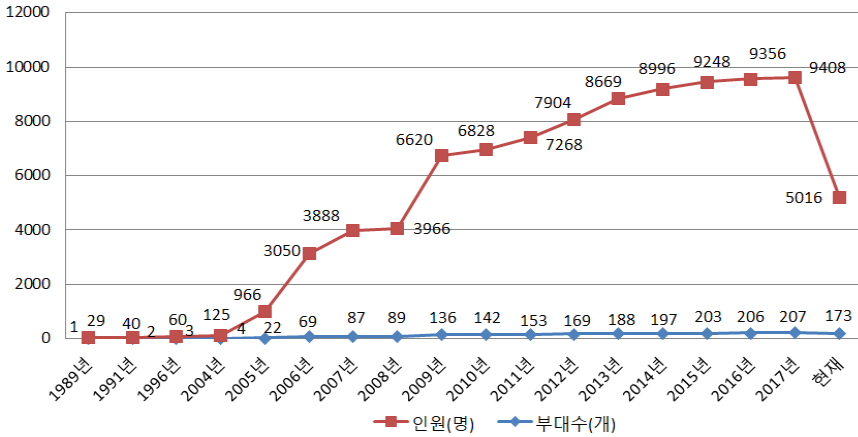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의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여기에 예비군자원마저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용 병역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미 병역의무를 필하고 퇴역한 민간인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력을 국방인력으로 활용하는 ‘지원예비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의 지원예비군제도는 미래 국방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지원예비군들만으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한 것은 1989년 4월 25일에 창설된 백령도 ‘여성예비군소대’가 최초이며, 이후 2011년에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특전예비군부대’가 창설되어 지원예비군부대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예비군은 <그림 14>의 현황과 같이 2017년에는 전국에 207개 소대 9,40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일부 상한 연령이 도래한 지원자를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신규 자원의 유입이 감소되면서 일부 부대는 해체되고 부대별로 편성 자원이 감소하여 2023년 1월 기준으로 여성예비군부대는 173개 소대 5,016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42) 광정근 외,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비상근예비군 확대운용 및 훈련체계 정립에 관한연구”, 2022년 육군본부정책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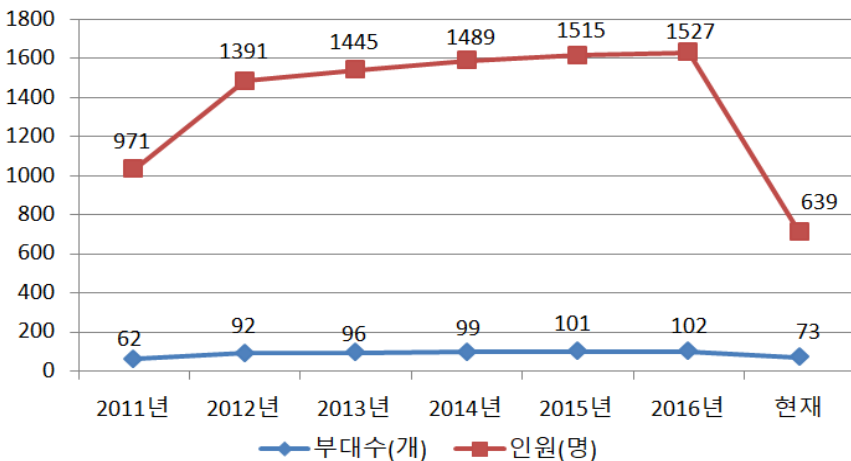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여성예비군 편성 현황



출처: 「예비군 50년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특전예비군은 국방부 지침(2011. 4. 7) ‘특전예비군 부대편성 지침 하달’에 근거하여 2011년 9월 17일 특전전우회가 주축이 되어 7개 중대 100여 명의 규모로 최초 창설되었고, 다음 해인 2012년까지 92개 부대 1,391명으로 증가되었다. 이후 2016년 최대 규모인 102개 부대 1,527명까지 확대된 이후 최근 급격히 그 규모가 감소하여 2023년 1월 현재 73개 부대 639명만 남아 있다. 특전예비군부대의 연도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 연도별 특전예비군 편성 현황



출처: 「예비군 50년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 지원예비군제도는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부대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예비군과 시민군(지원예비군)으로 편성된 영토방위군에 의해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교훈 삼아 현역 병력과 예비군자원 감축 문제를 지원예비군 확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8. 소 결론

우리 군의 병력자원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으로 소요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미래 한반도에서의 전쟁 양상도 첨단전쟁과 재래식 전쟁이 공존하는 상황이 예상되며 적정 수준의 병역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우리 군의 예비병력 운용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①예비군 복무제도의 재정립 미흡, ②군구조 개편과 연계된 소요산정과 예비병력 운용계획의 부재, ③장기복무 간부예비군 절대 부족, ④여군 증가에 따른 간부예비군 자원 부족 심화, ⑤간부예비군 진급제도 부실, ⑥비상근예비군 복무제도 미정착, ⑦민간 인력과 조직의 체계적인 활용 미흡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 예비전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예비군을 국군의 일원으로 ‘국군조직’에 반영하여 정확한 소요를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간부예비군 확충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간부에 대한 예비군 복무기간 확대와 진급제도의 활성화, 퇴역 후 재복무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예비군 활용 확대에 대한 문제점 개선도 시급하다. 여군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간부예비군 편성이 부족해지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넷째, 평시복무예비군제도의 정착이다. 현재의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명칭을 바로잡고 증·창설부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평시 부대 운영의 주 전력’으로서 준 상비군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인력과 조직을 지원예비군으로 편입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병력자원 부족으로 상비군을 편성하기 어려운 후방지역과 전투근무지원분야에

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대체하는 전력으로서 능력과 자발성을 갖춘 인원과 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국방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한 미래 국방인력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병역자원 부족 현황을 산출하고 예비군 소요를 판단하여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40년 기준 상비군 규모가 35만 명 이하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현역복무를 마친 전역자에 의존하는 예비군의 경우에도 소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특히 간부예비군의 부족문제는 앞으로 인구절벽시대를 맞는 우리 군이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현 병역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상비병력 급감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예비병력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예비군 운용개념 정립

미래 예비병력의 확충방안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소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군 복무유형과 부대 유형별 예비군 편성 기준, 예비군 편성 연차 설정 등 운용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예비군 복무유형 재설정

미래 한국군의 예비군 복무유형은 <표 21>과 같이 동원예비군, 대기예비군, 재복무예비군 등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동원예비군은 유사시 부대확장과 손실 보충에 대비하여 편성되는 예비군으로 평시복무예비군과 전시 동원예비군으로 구분한다. 평시복무예비군은 연중 full-time (365일)으로 복무하는 상근예비군과 180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비상근예비군을 포함하고, 전시 동원예비군은 동원령 선포 이후 부대확장 또는 지역 방위작전 등을 위해 동원하거나 개전 이후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 자원으로 동원하여 활용하는 예비군을 의미한다.

대기예비군은 동원예비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예비군 등으로 편성하며, 사전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유사시 추가적인

동원소요에 대비하는 예비군으로 평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기예비군은 본인 희망시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복무가 가능하다.

〈표 21〉 미래 예비군 복무유형 재설정(안)

구 분		내 용	
동원 예비군	평시복무 예비군	상근예비군	예비전력부대에 상근(full-time)복무하며, 예비군훈련, 관리, 운용, 계획 등에 운용되는 핵심 기간요원
		비상근예비군	예비전력부대에 180일 이내 복무하며 유사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요원
	전시 동원 예비군	유사시 동원령 선포 이후 예비전력부대 확장을 위해 동원되는 예비군으로 평시에는 소정의 예비군훈련 실시. 부대확장 및 손실보충을 위한 동원예비군과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동원예비군으로 구성	
대기예비군		사전 동원지정하지 않고,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으며, 우발상황 발생시 추가적인 동원에 대비하는 예비군. 희망시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복무 가능	
재복무예비군		예비군 의무복무 만료 후 재복무를 희망하여 동원예비군에 편입된 예비군으로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복무 가능	

출처: 연구자가 작성

재복무예비군은 예비군복무 의무를 완료하고 퇴역한 인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평시복무예비군 등으로 재복무하는 예비군이다. 미국의 ADOS(Active Duty Operational Support) 또는 밀텍(MT: Military Technicians)과 같이 계약을 통해 예비군으로 추가 복무하는 방안도 간부예비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요직위의 예비군 간부자원을 추가로 확충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대 유형별 예비군 편성 개념 정립

미래 상비병력의 규모가 35만 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동원사단과 같이 전시 창설되는 부대와 지역방위사단에까지 현역 병력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가용한 현역 병력은 상비부대 위주로 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임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지역방위부대와 전시 증·창설하는 예비전력부대는 전원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에도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하는 상비군은 100% 현역으로 편성하고, 상비군을 지원하는 작전지속지원부대(연방예비군)와 주방위군은 100%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한국군의 부대 유형은 <표 22>와 같이 상비부대, 예비전력부대, 지역방위부대 등으로 구분하고, 상비병력과 예비군의 배분 기준을 설정하여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 22> 부대 유형별 가용전력(예비군) 편성 방안

부대 유형	역 할	부대 유형	가용전력 편성 개념
상비부대	평시 경계 및 신속대응전력	상비사단 등	현역 100% 편성
예비전력부대	전시 증원전력	전시 창설부대	예비군 100% 편성 (주요직위자 평시복무예비군 편성)
지역방위부대	전·평시 지역안정	지역방위사단 지역예비군부대	신속대응전력은 현역편성, 기타 전력은 예비군으로 편성 (주요직위자 평시복무예비군 편성)

출처: 연구자가 작성

먼저, 상비부대는 100% 현역으로 편성한다. 전시 부대확장을 위한 예비군 동원 소요는 반영하지 않으며, 필요시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부족 병력을 보강한다. 단지 전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집 또는 동원예비군으로 보충한다.

예비전력부대는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전방군단의 동원포병단 등 전시 창설하여 상비부대를 증원하거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하며, 현역 병력 부족을 고려하여 100%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예비전력부대 중 개전 초기 확장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은 평시부터 준비태세 유지가 중요하므로 주요 직위자는 평시복무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지역방위부대는 전·평시 지역안정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방위사단과 지역예비군부대 등을 말하며, 적의 침투 도발 등 군사적 위협과 테러·재해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부대이다. 따라서 지역방위사단과 여단의 기동타격대, 화생방 신속대응팀, 대테러부대 등 평시에도 지역안정작전을 수행하는 신속대응전력은 현역으로 편성하고 사·여단 지휘관과 참모를 포함한 주력은 예비군으로 편성하되, 주요 직위자는 평시복무예비군을 편성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다. 예비군 복무 연차 설정

예비군제도를 검토하면서 빠지지 않고 논의되어왔던 문제가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 검토한 예비군 복무 연차 단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예비전력 기본계획서」(2019~2033)에는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서 5년으로 단축하고 1~3년 차는 동원예비군, 4~5년 차는 대기예비군으로 편성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⁴³⁾ 「국방개혁 4.0」 세부 추진계획에는 현행 8년 차를 유지하면서 동원예비군 5년과 대기예비군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비군 복무기간을 작전 소요에 기반하여 판단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예비군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경우 상비병력 감축의 여파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예비군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상비병력 부족을 예비병력으로 보충한다’는 기본 개념을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비병력 확충 문제는 공급과 소요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예비군 공급 규모는 연간 편성 가능한 예비군 수와 복무 연차에 따라 결정된다. 예비병력을 확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비군 복무 연차를 늘리는 것이지만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최적의 복무 연차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예비군 복무 연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편성 가능한 예비군 규모와 예비군 소요 판단이 필요하다. 연간 편성 가능한 예비군 수는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병 14만 명, 간부 1.8만 명 등 총 15.8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산정할 예비군 소요는 미래 국방인력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려우나 선행연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개략적인 규모를 판단해 보면 <표 23>과 같이 2040년 기준 동원예비군 67만 명, 대기예비군 47만 명 등 총 114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 미래 예비군 소요(추정)

구분	계	동원예비군			대기예비군	
		소계	전방동원부대	지역방위부대 손실보충		
규모	114만명	67만명	15만명	25만명	27만명	47만명
비고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포병단 등	지역방위사단 지역예비군부대		

출처: 연구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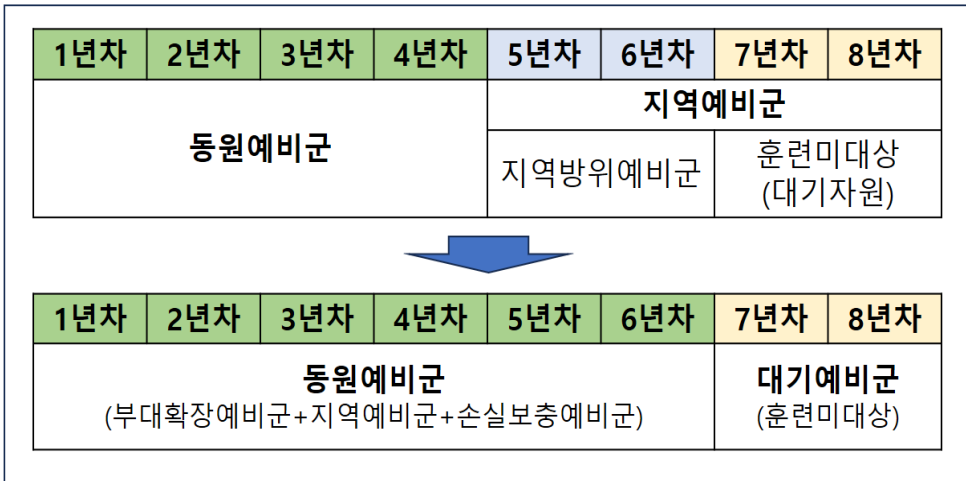
43) 국방부, 「예비전력 기본계획서(가칭)」(2019~2033), p.11.

이상에서 분석한 연간 편성 가능한 예비군 수와 소요에 기반하여 예비군 유형별 복무 연차를 산정해 보면 동원예비군은 5개 연차($67만 \div 15.8만 = 4.24 \approx 5$)와 대기예비군 3개 연차($47만 \div 15.8만 = 2.97 \approx 3$) 등 총 8개 연차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려할 점은 동원예비군을 5개 연차로 편성한다고 해서 모든 예비군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원예비군 중 병사는 5년 차 자원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간부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충원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모든 예비군자원이 크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군 복무 연차를 판단할 때는 소요에 정확히 맞추기보다는 간부예비군의 추가 확보와 지역별 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편성 연차를 여유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예비군 복무기간은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대로 8년 차까지를 유지하며, 동원예비군(부대확장예비군과 지역방위예비군, 손실보충예비군 망라)은 6년 차까지로 편성하고, 대기예비군은 동원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7~8년 차로 편성하는 방안을 정립하였다.⁴⁴⁾

<그림 16> 예비군 복무 연차 편성 방안



44) ‘부대확장예비군’이라 함은 전시부대계획에 의거 동원령 선포 이후 증·창설 부대를 충원하는 동원예비군을 말하며, ‘지역방위예비군’은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예비군부대를 충원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손실보충예비군은 모든 유형 부대의 전시 손실병력을 보충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1~6년 가용자원으로 지역예비군을 우선 편성하고, 부대확장예비군과 손실보충예비군 소요는 대도시 등 자원이 충분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2. 간부예비군 확충방안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간부 부족 문제는 현역, 예비역 할 것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역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저조하고, 중·장기 복무 간부의 이탈률도 심각하다. 현역 간부의 부족 문제는 예비군 간부의 부족 문제로 직결되며, 자원이 충분하던 시대에 정립한 예비군제도의 존속은 간부예비군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래 간부예비군 확충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는 ①간부예비군 복무체계 개선, ②여군의 전역 후 예비군 복무 의무화, ③예비군 진급제도 발전, ④현역과 예비군 혼합 복무제도의 도입, ⑤예비군 재복무제도 도입 등이다.

가. 간부예비군 복무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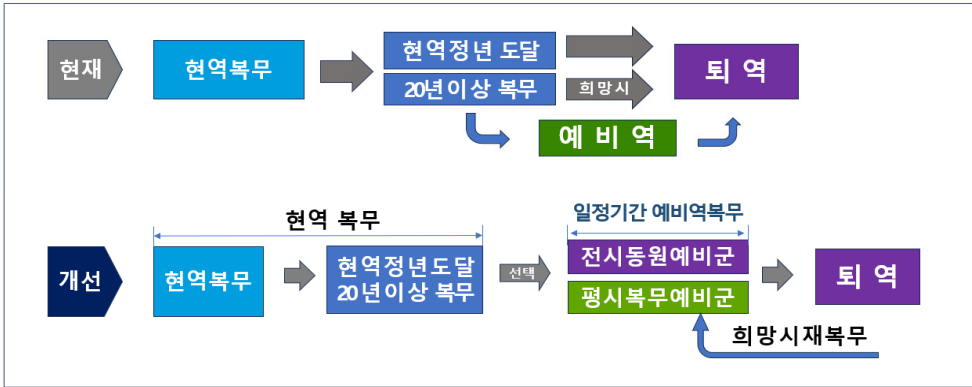
현 간부예비군 제도의 맹점 중 하나는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간부가 현역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 퇴역이 되고 정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근무 후 전역시 퇴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관장교와 부사관(상·원사) 예비군 부족의 직접적인 동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격자원의 동원지정률이 영관장교는 30~40%, 부사관(상·원사)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장기복무했다는 이유로 영관장교와 부사관을 전역과 동시에 예비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병사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초급간부는 계급정년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간부예비군의 확보와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볼 때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간부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은 반드시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복무간부의 군 복무유형은 <그림 17>과 같이 현역 복무와 예비역 복무로 나누고, 현역 복무가 끝나면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퇴역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즉, 현역 복무가 끝나면 동원예비군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예비역 복무가 끝나면 ‘퇴역’하되 본인 희망시 평시복무예비군으로 재복무가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복무 간부의 예비역 복무기간은 사회적 기준과 예비역 병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세 이하, 6년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60세의 근거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림 17〉 장기복무 간부의 예비군 복무 모델(안)



출처: 충남대산학협력단, “예비전력 제도·법령 발전방향”(‘23년 예비전력혁신 세미나), p.18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제19조(정년)⁴⁵⁾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것을 따른 것으로 60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인용한 것이며, ‘6년 이내’의 근거는 예비군 편성을 8년 차까지로 하되 1~6년 차를 동원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사실상 전시 동원과 훈련 의무를 부과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기복무 간부의 실제 예비군 편성 나이와 기간을 산정해 보면 〈표 24〉와 같이 소·중령과 상·원사의 경우 전역 후 6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하며, 대령과 원사의 경우 근로자 정년 60세를 고려하여 만기 전역 후 4년과 5년을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표 24〉 간부예비군 복무제도 개선에 따른 예비군 복무 정년과 기간(안)

구 분	장교			부사관	
	소령	중령	대령	상사	원사
현 재	50세	53세	56세	53세	55세
정년(기간)	56세(6년)	59세(6년)	60세(4년)	59세(6년)	60세(5년)

출처: 연구자 작성

45)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군 의무복무를 마치고 근로자 정년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역이 된 간부(소령, 중령, 상사 등)의 경우 희망 시 예비역으로 재복무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간부예비군 자원 규모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군 정년(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본인 희망시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예비군 복무가 의무인 동시에 권리(재취업의 기회)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 여군 전역자 예비역 복무 의무화

국방 분야 여성인력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여성의 예비역 복무도 남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과학기술군으로의 발전은 신체능력보다 인지능력과 정확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즉, 첨단기술과 장비의 등장으로 무인화, 자동화가 촉진되어 인간에게 요구되는 특성도 신체적 특성이 아닌 인지적 능력이 중요하므로⁴⁶⁾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기술과 인지능력에 기반하여 여군도 실질적인 전투능력 발휘가 가능하여 예비전력 분야의 여성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외국군에서도 정확성과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직책에 여군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스라엘의 경우 아이언돔사령부의 여군 비율이 55~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반면에 우리 군의 여성인력 확대 정책을 보면 2024년 현재 8% 수준에서 2027년에는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2040년 경에는 2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 군인사법 제41조(퇴역)에는 여군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역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어, 여군 간부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간부예비군 가용자원이 감소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병역자원 감소와 여군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예비군 편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먼저, 현행 법령의 개정 없이 운영의 묘를 살려 여군의 예비군 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초 여군 선발 시 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여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예비군 복무 선택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즉, 예비역 선택

46) Billing, D., Fordy, G., Friedl, K., & Hasselstrøm, H. 2021. The implications of emerging technology on military human performance research priorities.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24(10),947-953.

47) 충남대산학협력단, “예비전력 제도·법령 발전방향”(‘23년 예비전력혁신 세미나), p.26.

시기를 제대 직전이 아니라 여군 선발 시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성예비군 편입을 확대하는 것이다.⁴⁸⁾

두 번째 방안은 법령 개정을 통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해당 신분과 계급에 상응한 예비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방안이다. 즉, 예비군 복무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하여 여군 비율 증가에 따른 예비군자원 감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장차 예비역 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령 개정을 통해 여군도 남군과 동일하게 예비군 복무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신과 육아 기간에는 예비군 복무(훈련, 동원 등)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본절 ‘라’항의 ‘현역과 예비군 혼합 복무제도’를 여군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예비군 진급제도 발전

진급이란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상위계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진급 선발을 통해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며, 진급 대상자의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한다. 폐쇄형 임용제도를 쓰고 있는 군 조직에서 진급은 상위계급 충원을 위한 유일한 방식이며, 특히 예비군 진급제도는 부족한 계급의 간부를 확충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운용으로 부족한 간부 예비군을 충원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족한 병과와 직책의 자원을 확보하고 개인의 명예 욕구를 충족하며, 보직의 상승적 변화와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를 양양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예비역 진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급 대상 계급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장교와 부사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진급 대상을 예비역 병장까지 확대하여 병장 중에도 희망자는 하사로 진급이 가능토록 하고⁴⁹⁾, 장교의 경우에도 진급 계급을 장군까지 확대하여야 한

48) 위 논문, p.27.

49) 예비역 병장에서 예비역 하사로 진급할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이 연장되어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훈련 기간은 병사와 동일하게 6년 차 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또한, 20년 이상 현역 복무 후 퇴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전환 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예비역 진급자의 활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하향 조정하여 상위계급 동원자원으로 활용할 기회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현행 예비역 계급별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이 현 계급에서 6~7년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면이 있는데 현역 복무에 추가하여 예비군 복무까지를 고려한 최저 복무기간을 재설정하여 진급자를 증가시키되 진급자 교육훈련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표 25〉 예비역 진급 범위와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재설정 방안

현 계급	병장	하사	중사	상사	부사관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진급계급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최저예비군 복무기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4년	3년	3년
진급계급 정년	46세	51세	59세	60세	50세	51세	56세	59세	60세

출처: 연구자가 작성

셋째, 예비역 진급 기회를 현행 예비역 기간 중 1회에서 2~3회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서 예비역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전 계급 진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병은 부사관으로 부사관은 장교로 신분 전환까지 가능한 전향적인 진급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전 계급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급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예비군 간부 진급제도와 병행하여 발전시켜야 할 사안은 진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처우 개선 문제이다. 계급별 최저 예비군 복무기간이 경과한 희망자를 선발하여 전문교육과정에서 계급과 직책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평가 결과 합격자에 한해서 상위 계급으로 진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래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현역에 준한 각종 복지혜택과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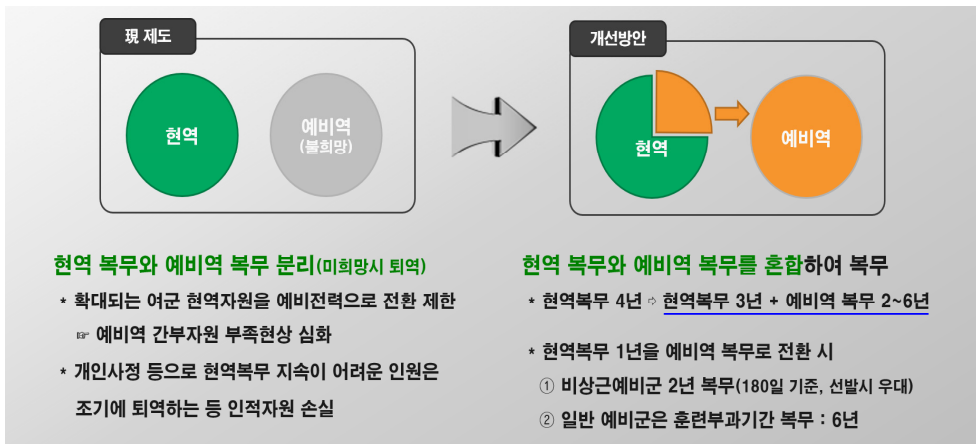
라. 현역과 예비역 혼합 복무제도 도입

미래 사회에서는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AI, 자율주행, 로봇 등의 보편화로 잉여 인력이 증가하고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등 사회의 근로여건이 변화되면서 우수인력을 군에서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간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4~6년 같이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부담을 느껴 지원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우리 군도 미군과 같이 현역복무와 예비군복무를 통합한 총량제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의 취향과 사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현역과 예비역 혼합 복무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우수한 간부를 전문 예비군으로 육성하여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여군의 경우 <그림 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역 복무기간을 줄이는 대신 예비역으로 현역 복무기간에 상응한 기간을 복무하게 함으로써 예비역 간부자원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군의 현역 복무를 1년 줄이는 대신 비상근예비군 2년을 근무하게 한다든지, 전시 동원지정예비군으로 6년간 예비군훈련을 받게 하는 방안이다.

남군의 경우에도 현역과 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해당 병과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계하여 편성함으로써 우수한 예비병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사안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킬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림 18> 여군의 현역복무 + 예비역 혼합복무 방안



현역 복무와 예비역 복무 분리(미회망시 퇴역)

- 확대되는 여군 현역자원을 예비전력으로 전환 제한
↳ 예비역 간부자원 부족현상 심화
- 개인사정 등으로 현역복무 지속이 어려운 인원은 조기에 퇴역하는 등 인적자원 손실

현역 복무와 예비역 복무를 혼합하여 복무

- 현역복무 4년 → 현역복무 3년 + 예비역 복무 2~6년
- 현역복무 1년을 예비역 복무로 전환 시
 - ① 비상근예비군 2년 복무(180일 기준, 선발시 우대)
 - ② 일반 예비군은 훈련부과기간 복무 : 6년

출처: 충남대산학협력단, “예비전력 제도·법령 발전방향”(‘23년 예비전력혁신 세미나), p.30.

마. 퇴역예비군 재복무제도 도입

예비병력 확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퇴역예비군의 재복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 과학기술군으로의 발전은 신체능력보다 인지능력과 정확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이며, 평균 수명의 증가로 퇴역 시기로 설정한 60세 이후에도 지휘관, 참모 등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충분하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공공부분에서도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평시복무예비군(상근예비군, 비상근예비군)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전시 동원예비군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역자의 지원을 받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 퇴역자의 재복무 연령은 직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65세까지로 확대하고⁵⁰⁾, 공신력 있는 재복무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니어 아미’와 같은 자발적 복무를 희망하는 건강한 인력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평시복무예비군제도 정착

가. 평시복무예비군 유형 정립

인구감소에 따라 병력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현역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비상근예비군제도를 2014년부터 시범 운영하여 왔으며 다년간 분석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현재도 시험 운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상근예비군제도는 미국의 선발예비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시킨 제도이나 상비병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제도 도입 시기에 국방부에서는 명칭을 ‘평시복무예비군’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예비군 직업화와 확대 운용을 우려한 관련 부처의 반대와 예산 등의 문제로 ‘비상근예비군’으로 명칭이 조정된 바 있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소수의 인원(장기 100명, 단기 4300명 등)만을 할당하여 지금까지 시범 운용만 계속하고 있어 미래 상

50)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지원 대상)에서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 상한 연령의 한계를 두지 않고 있으나 노인 연령의 기준인 65세까지를 재복무 연령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논의를 거쳐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병력 감축을 상쇄하여 국방력을 보강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래 상비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방위 충분성을 갖춘 적정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근예비군'을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명칭을 바로잡고 예비전력부대의 평시 대비태세를 담당하는 주요 전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즉,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포병단 등 개전 초기 창설하여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 지역방위사단 등 예비역에 의해 운용되는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요 직위자를 '평시복무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편제에 반영하고 국군조직정원에 반영하는 등 준상비군으로 육성·운용하여야 한다.⁵¹⁾

평시복무예비군의 유형은 '상근예비군'과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상근예비군은 미군의 '상근예비군(Active Guard Reserve)'과 같은 개념으로 예비전력부대와 지역방위부대에서 full-time으로 근무하며, 예비군훈련, 관리, 운용, 계획 등에 운용되는 기간요원으로 지휘관과 핵심 참모 등으로 편성한다.

비상근예비군은 180일 이내에서 근무하는 예비군으로 부대 임무 및 직위에 따라 다양한 근무 기간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시복무예비군은 준상비군으로 우수자원은 진급을 통해 상위계급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등 우리 군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운용하여야 한다.

나. 부대유형별 평시복무예비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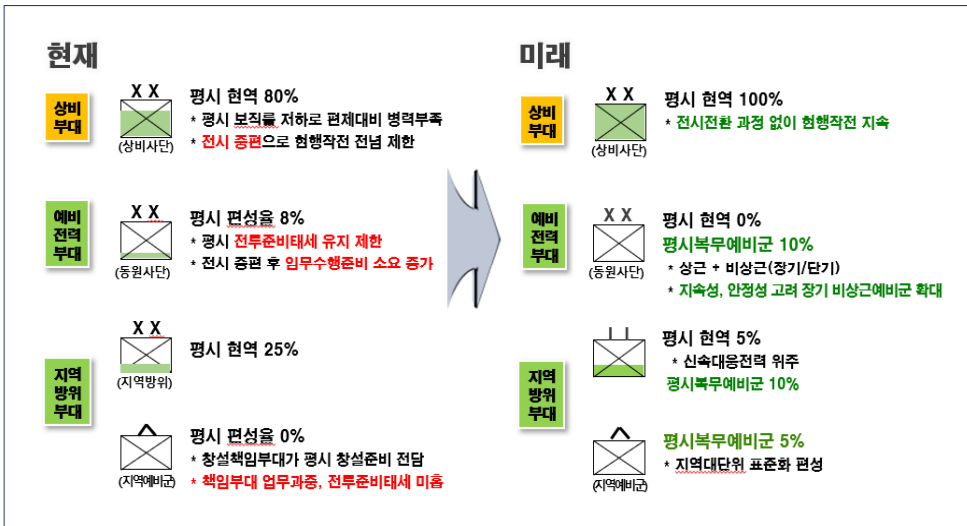
우리 군의 부대유형을 예비전력 운용 측면에서 상비부대와 예비전력부대, 지역방위부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으며, 부대 유형별 평시복무예비군 운용개념은 <그림 19>와 같다.

먼저 상비사단은 현재 평시 편성율이 80% 수준으로 전시 동원병력을 충원하여 완편하는 체제이나 미래에는 평시부터 100% 현역으로 편성하여 전시 전환 과정 없이 현행작전을 수행토록 완전 편성을 보장한다.

동원사단은 평시 현역 편성율이 8% 수준인 것을 미래에는 평시복무예비군만으로(10% 이상)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부대로 개편하며, 이 외에도 개전초기에 창설하여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방군단의 동원포병단 등 작전지원부대와 작전

51) 국군조직에 반영하는 평시복무예비군의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자는 상근예비군과 장기 비상근예비군(180일 근무)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점차 대상과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발간되는 미 국방예산서에 각 군별 예비군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정원은 763,600명으로 연방예비군과 주방위군에 편성된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9〉 부대유형별 평시복무예비군 운용 방안



출처: 연구자가 작성

지속지원부대 중 주요부대는 적정 수준(5~10%)의 평시복무예비군을 편성하여 동원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유사시 임무에 대비한다.

지역방위부대(사·여단)는 신속대응전력인 기동대, 화생방신속대응팀, 대테러부대 등은 현역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전시 대비전력의 핵심직위자는 평시복무예비군으로 편성하며, 지역예비군부대는 권역단위 정형화된 부대로 개편하여 평시복무예비군으로 자원관리와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이처럼 평시복무예비군을 국군의 일원으로 준상비군화 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성과 사회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병력이 상비병력 부족을 대체하는 실효성 있는 전력’이라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평시복무예비군 적정 규모

미래(2040년) 국방조직에 반영할 평시복무예비군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미래 부대구조 개편 방안과 평시복무예비군을 편성할 부대의 선정, 선정한 부대의 평시 현역 편성률 설정 등 많은 기본 전제와 가정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자가 2023년 육군 정책연구에서 산정한 결과를 보면 육군 기준 약 6만

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⁵²⁾ 그러나 이 연구에서 판단한 평시복무예비군 소요 6만 명은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포병단 등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의 평시복무예비군 비율을 완편 대비 20%를 적용한 것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면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재정립한 비상근예비군 평시 편성 비율 10%를 적용할 경우 그 규모는 약 4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래 평시복무예비군 적정 규모는 4~5만 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미래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부대구조 개편과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평시복무예비군 규모 재판단이 필요하다.

4. 민간인력과 조직의 활용 확대

민간인력(지원예비군)과 조직을 상비병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는 상비병력과 예비병력 감축에 따른 대체전력으로서 부족한 상비·예비병력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민간인력과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자원의 활용으로 전시 동원소요를 줄임으로써 예비병력 절약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먼저, 미래 부족한 예비병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의 민간인력과 조직의 활용 방안은 특히 후방지역의 지역방위작전에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미래 병역자원 부족으로 가용한 상비병력은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상비군 부대에 우선 할당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방위부대에 할당할 수 있는 상비병력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전·평시 지역방위작전은 예비군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는 1개 시·군·구에 1개 지역예비군중대도 편성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예비군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내 가용한 민간인력을 지원예비군으로 편입하고, 가용한 업체, 협회, 동호회 등 민간조직을 지원예비군부대(조직)로 편성하여 적극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2)곽정근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비상근예비군 확대 운용 및 훈련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육군본부정책연구보고서(2023. 9. 21.)

〈표 26〉 전장기능별·부대유형별 지원예비군부대 편성 방안

구 분		세부 편성 방안
정보	드론정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또는 동호회 단위로 부대 편성 • 열상·주간감시장비 활용
	사이버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보안업체를 모체로 부대편성 •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편성 • 지역내 보안업체 지정, 통제운영
화력	드론공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협회 또는 동호회 단위로 부대 편성 • 공격용 드론 활용(민수용을 개조)
	대드론방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협회 또는 동호회 단위로 부대 편성 • 안티 드론·드론 건 활용(민수용 개조 또는 군용 편제)
	대전차공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서바이벌게임 동호회 등록회원 단위로 부대 편성 • 적 전자 격멸용 휴대용 대전차화기 편제
기동	기동수색팀 (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모터사이클 또는 산악바이크부대 편성 •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협회 또는 동호회 단위부대 편성 • 임무수행 가능한 장비 휴대기준 정립 * 네비게이션, 정보분석장비, 응급구조킷, 드론 부착장치 등
	특전예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 • 중대: 특별자치시·시·군·구 단위
작전 지속 지원	수송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화물 운송업체 단위로 운전기사와 장비를 동시에 편성 • 지역내 수송업체 지정, 통제운영
	구호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등록된 응급구조업체에 소속된 인원과 장비로 편성 *구급차, 응급구조장비,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등 • 지역내 환자 수송업체 지정, 통제운영
	홍보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제작사, 영상편집업체를 모체로 편성 * 영상촬영 및 편집 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 • 지역내 홍보업체 지정, 통제운영
	여성예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지역대 직할부대로 편성(보급, 급식, 구호 등)

출처: 연구자가 작성

민간 자산을 활용한 지원예비군 부대는 〈표 26〉과 같이 전장기능별, 부대유형별로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즉, 지역내 가용한 업체, 협회, 동호회 조직을 활용하여 정보, 기동, 화력, 작전지속지원 등 기능별 지원예비군부대를 전투모듈화하여 편성하고, 예비군부대 또는 지역방위사단 등에서 상황에 따라 편조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대들은 모든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임무,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동원하여 운영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외의 적 주요 공격축선에서는 ‘서바이벌 동호회’를 주축으로 ‘대전차 공격팀’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감시와 정찰을 위해 드론정찰팀 등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시 동원소요 슬림화를 통해 보충 소요를 줄임으로써 예비병력 절약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미래 동원병력의 부족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가용한 정예 자원을 전투부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창설부대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동원소요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 군 구조는 국방개혁을 통해 구조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지만 아직도 재래전에 기반한 대규모 창설부대가 유지되고 있는 등 동원예비군 공급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증·창설부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한다든지,⁵³⁾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에 전시 작전지속지원 임무를 맡긴다든지 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확대함으로써 동원소요를 줄이면서 경제적인 군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뿐만 아니라 시니어 아미, 주니어 ROTC 등 자원(自願) 인력을 ‘지원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즉, 군 복무경험, 사회경력(전문성), 신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하거나 증·창설부대의 동원 직위 편제에 반영하고 평시복무예비군제도와 연계하여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민간 인력과 자원을 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한 유인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여성과 특전예비군을 지원예비군으로 편성해 온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하여 예비군복무 의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사명감에 의존하고 별도의 유인책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예비군과 같이 민간인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에 대한 소집 및 훈련 수당, 장비의 사용료 지급을 포함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법규 및 방침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3) 예를 들어 전시 창설하는 160여 개의 동원보충대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4) 정일성, “전시 동원소요 슬림화를 위한 민간시스템 활용방안 연구”, 예비전력논총, 2023, p.99.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인구절벽으로 촉발된 국방인력 부족 문제를 예비병력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군으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상비병력 수준을 기존 60여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였으나 인구절벽 시대의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2040년경에는 35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예비전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고, 그 동안 제시된 「국방개혁2.0」 「국방혁신4.0」 어디에도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간부예비군(영관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 등) 부족 문제와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증창설 준비태세 수준의 약화 등은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원이 충분하던 시절의 양적 관리 위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을 상비군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주요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제시한 주요 군사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상비군과 예비군을 통합하는 총체전력을 구성하되, 평시에는 적정 수준의 상비전력을 유지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초전에 대비하면서 유사시에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적시에 동원하여 운용하는 군사력 건설 및 운용 정책은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직면한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상비병력을 50만 명 감축을 완료한 이후 인구감소를 고려한 미래 국방인력운영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미래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 예비병력의 확충방안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소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군 복무유형과 부대 유형별 예비군 편성 기준, 예비군 편성 연차 설정 등 운용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비군 운용개념을 정립하였다.

예비군 복무유형은 동원예비군, 대기예비군, 재복무예비군 등 3가지 유형을 정립하였다. 미래 부대 유형은 상비부대와 예비전력부대, 지역방위부대 등으로 구분하고, 현역과 예비군 편성 비율을 상비부대는 100% 현역으로, 예비전력부대는

100% 예비군으로 편성하되 지휘관 참모 등 주요 직위자는 평시복무예비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정립하였다. 지역방위부대는 예비군 위주로 편성하되 신속대응전력은 현역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군 복무 연차는 자원감소를 고려하여 8년 차까지로 유지하되 1~6년 차를 동원예비군, 7~8년 차를 대기예비군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정립하였다. 즉, 예비병력 자원은 감소하고 병력 소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복무 연차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예비군 복무 연차는 현재의 연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미래 첨단과학기술군을 이끌어 갈 간부예비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는 간부예비군 복무체계 개선과 여군 전역자 예비역복무 의무화, 예비군 진급제도 발전, 현역과 예비역 혼합 복무제도 도입, 퇴역예비군의 재복무제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간부예비군 확충을 위해서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간부도 일정 기간(60세 이전, 6년) 의무적으로 예비역이나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복무하며, 퇴역자도 희망 시 재복무토록 한다. 아울러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해당 신분과 계급에 상응한 예비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여성의 예비군 복무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하여 여군의 비율 증가에 따른 예비군자원 감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현역 복무기간의 일부를 예비역 복무로 대체하는 등 유연한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족 계급과 병과의 자원을 확보하고 개인의 명예 욕구를 충족하며, 보직의 상승적 변화와 재취업이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인 혜택까지도 고양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군 진급 범위를 병장-하사부터 장군까지 확대하고 능력에 따라 2~3단계 진급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평시복무예비군제도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상비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방위 충분성을 갖춘 적정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근예비군'을 '평시복무예비군'으로 명칭부터 바로잡고 예비전력부대를 운영하는 주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시복무예비군의 적정 규모는 4~5만 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평시복무예비군의 유형은 상근예비군과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하고, 상근예비군은 미군의 '상근예비군(AGR)'과 같은 개념으로 예비전력부대와 지역방위부대의 기간요원으로 현역과 동일하게 365일 full-time으로 근무하며 예비군 관리 및 운용, 훈련 및 각종 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근예비군은 현행대로 180일 이내에서 근무하되 부대유형과 직위에 따라 근무 일수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평시복무예비군을 국군조직의 일원으로 편제에 반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총력전 수행 체제 구축과 상비·예비병력 부족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민간인력과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방위작전에 상비병력 할당이 제한되고 인구소멸로 가용 예비군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인력과 조직을 활용하여 기능별 지원예비군부대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불확실한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예비병력이라는 국방인력의 한 축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4개월의 짧은 연구기간과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보편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이므로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재정리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보강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현역과 예비역을 통합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인구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특히, 청년인구의 부족으로 민간과 군 간의 인력확보 경쟁 심화됨에 따라 군의 간부 인력확보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하여 국방인력을 운용하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역과 예비군을 통합한 국방인력 구조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즉, 부대 유형별 현역과 예비역의 운용개념을 정립하여 상비부대는 100% 현역으로, 예비전력부대는 100% 예비역으로, 지역방위부대는 신속대응전력만 현역으로 편성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대는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군을 국군의 조직에 포함시키고 예비군을 현역의 보조전력이 아니라 동반전력이자 주전력 개념으로 인식하여 관련 법령과 교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비군 가용자원을 고려한 전시부대계획 조정

예비군 가용자원이 점차 감소하여 현행 250만 명에서 2040년에는 16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간부 중 특정 신분과 계급은 소요의 30%도 채우

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군의 전시부대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상당수 부대가 동원 완료와 동시에 ‘전투력복원 대상부대’로 분류되어 수 개 부대를 통합해야만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 가용 예비군자원 규모를 고려하여 전시부대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000개의 동원보충대대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재조정한다든지, 전방군단을 지원하는 작전지원부대와 인사·군수부대 등 작전지속지원부대의 전시 부대확장계획을 미래 가용 예비군 공급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용한 예비군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동원소요 슬림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상근예비군제도의 발전

상비병력 부족으로 전시에 확장할 부대를 예비병력으로 편성할 경우 개전초기 동원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의 동원(부대확장) 및 전시대비태세 유지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현 비상근예비군제도는 부대의 핵심 직위는 현역이 보직되는 것을 전제로 보조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장기비상근예비군(180일)과 단기비상근예비군(30일)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현역병력 부족으로 예비전력부대(동원사단 등)와 지역방위부대의 지휘관을 포함한 모든 직위를 예비군만으로 편성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군의 ‘상근예비군(Active Guard Reserve)’과 동일하게 365일 full-time으로 근무하는 평시복무 상근예비군 직위를 신설하여 현역과 동일한 수준(준 상비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라. 국방인력 풀(pool)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은 물론 예비군자원이 감소하고, 미래 과학기술군을 운용할 전문 기술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현역과 예비군, 군무원으로 한정된 국방인력 수급 정책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모든 인력을 국방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비병력의 확충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비역 진급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여성예비군의 예비군복무 의무화, 현역과 예비역을 혼합한 형태의 복무형태 도입, 시니어 아미와 같은 퇴역 군인의 재복무제도 도입, 지원예비군의 확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지역예비군부대 개편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멸 위기 지자체의 경우 예비군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1개의 예비군중대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수도권외의 신도시 지역에는 1개 중대 예비군 규모가 2천 명을 초과하는 극심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예비군부대도 지역방위사단 개편과 연계하여 권역 단위로 통합 재편성을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예비군을 개편 예비군부대의 주요 전력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3.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2022년도 이후의 병역자원 정체 시기와 20세 남아 인구가 최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까지의 국방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병력 부족 문제를 다루다 보니 보충해야 할 대상 인원 등 구체적인 현황을 산정할 수 없었다. 아울러 예비병력 규모 면에서도 미래 예비군 복무 연차와 예비전력부대 구조 개편 방안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해야 할 예비군 규모를 한정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래 상비병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국방인력 자원 수급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병력과 민간인력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해법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 예비군 규모를 판단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연구이다. 미래 국군의 총전력 규모에서 현역과 예비군의 전력배합 비율을 설정하고 부대확장예비군, 지역방위예비군, 손실보충예비군, 대기예비군 등 기능별 예비군 규모와 신분별, 계급별 예비군 소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예비군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전시 동원소요 최적화(슬림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 한국군의 동원계획은 재래식 전쟁에 기반하여 과도하게 동원소요가 설정된 면이 있다. 그러나 미래전 양상의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민간 시스템의 발전 등 안보 환경 변화는 기존 동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대규모 전시부대 확장계획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역과 예비역의 혼합 복무방안의 연구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현역 복무

후 예비역 복무를 하는 경직된 제도를 현역복무와 예비군복무를 통합한 총량제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현역과 예비역 혼합 복무제도'의 도입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군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킬 가치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정부기관 자료]

- 국방부, 『국방개혁 2.0』, 국방부, 2018.
- 국방부, 「국방혁신 4.0」 팸플릿, 2023.
- 국방부,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제도』, 2017.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2021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 국방부, 「예비전력 기본계획서(가칭)」(2019~2033)
- 국방부, 「예비군 50년사」, 2018.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 추계: 2022~2072년”, 2023.12.
- KIDA, “D-MAPSS”, 2023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강소영 외, 『2023 국방정책 환경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3.
- 곽정근 외,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비상근예비군 확대운용 및 훈련체계 정립에 관한연구”, 육군본부정책연구보고서, 2022.
- 구원근 외, “싱가포르 예비군제도 사례를 통해 본 예비전력 발전연구”, 『군사연구』, 148집, 2019.
- 김영성,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여군인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4권 2호, 2023.
- 이용-채광원, “미래 육군 병력동원 적정 소요 연구”, 2018.
- 이필중, 『군사동원론』(서울: 국방대학교, 2003)
- 이학기 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방안 연구”(기본연구 18-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 배용인, “병역자원 보족에 따른 병력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방안”, 서울안보포럼 세미나 자료, 2024.
- 이은정, “여군 확대 추계 분석과 정책방향”, 『국방논단』, 22-10, 2022.
- 정진섭 등, “미래 예비군제도를 대비한 예비군개념 정립 연구”, 국방부 연구보고서, 2022.
- 정진섭, “우크라이나 사태 시사점과 국가동원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방대학교 국가

- 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연구시리즈, 제5-5호, 2023.
- 정진섭, “전투형 육군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혁신방안”, ‘23년 육군력 포럼 발표 자료, 2023.
- 정진섭, “미래 예비군개념 정립 연구”, 국방부 정책연구, 2022.
- 조관호, “미래 국방환경 전망: 병력운영을 중심으로,” 「모병제: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2021 국방학술세미나 자료집, 2021.
- 조관호, “병역자원 감소시대 국방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3.
- 조관호,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_상비병력 충원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21.
- 충남대산학협력단, “예비전력 제도·법령 발전방향”, ‘23년 예비전력혁신세미나 자료, 2023.
- KIDA,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21-34.
-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_상비병력 충원을 중심으로”, 2021.
- KIDA, 『통일한국의 동원체제와 예비전력 운용 연구』, 2016.

[법령, 기타]

- 국군조직법, 법률 제10821호(2011. 7. 14).
- 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2024. 1. 16)
- 병역법, 법률 제20191호(2024. 2. 6)
-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477호)
- 군 인력관리훈령(훈령 999호, 2014. 12.)
- 연합뉴스, “김정은, ‘한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 2024.1.16.
- 조선일보, “허리 나간 軍… 작년에만 간부 9481명 떠나”, 2024.6.6.
- 김인한, “‘육군 부사관이 모자라요’ 정원 63% 부족...특전사만 채웠다”, 『머니투데이』, 2024.4.23.
- 매일경제, “중동 전쟁 확산 위기 속 피로 누적되는 이스라엘 예비군”, 2024.8.6
- ChatGPT 검색,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 동원시기“, 2024.6.1.

제2장

국민정신(안보의식) 동원체계 강화방안

경상국립대학교 박균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방정배
경상국립대학교 이원봉

- I. 연구 목적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 III. 현대전의 특징과 안보의식
- IV. 국민안보의식 수준과 안보교육 실태
- V. 주요 선진국의 국민안보의식 함양 사례 및 시사점
- VI.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
- VII. 결 론

요 약

본 연구의 주제는 “국민정신(안보의식) 동원체계 강화 방안”이다.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총력전으로 전개되는 현대전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원활한 동원체제 구축은 전쟁 승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평상시 국민안보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국민안보의식 함양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최근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한 새로운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 주요 선진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 범국가적 차원의 안보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국민안보의식과 안보교육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갤럽 등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안보의식 수준은 높지 않으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가별 ‘자국 연루 전쟁 발발시 참전의사’에 대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는 45개 국가 중 26위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리고 학교, 현역 장병, 예비군, 민방위대, 공직자, 일반시민의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도 현역 장병과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교육시간 편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국민안보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시민권 경로 3단계, 싱가포르의 ‘총력방어의 날’, 미국의 시민교육을 통한 국가 정체성 강화, 이스라엘의 ‘셀라흐 교육’ 등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 선진국들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동원태세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안하였다.

- ① 안보교육의 법적 근거 확립 및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이다. 현재 국민 안보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는 〈통일교육지원법〉, 〈통합방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안보교육은 통일과 안보가 균형 있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을 〈통일안보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거나,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보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조정실의 ‘범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법령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기존의 법령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 및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어서 시행령을 보완한 후에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 ② 소관부처의 명확화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통일·안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국가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를 맡는 방안,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소관 부처를 맡는 방안,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통일안보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③ 안보 및 안보교육을 위한 대전략 수립 방안이다. 현대전에서 국가안보는 온 국민이 총력으로 대응하는 총력전으로 수행되며, 이를 위해 국가안보는 ‘총력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을 지향하고, 안보교육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지향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 ④ 민(民)-관(官)-학(學)-군(軍)의 종합적인 안보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다. 안보교육은 어느 한두 부서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보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분야별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소관 부처의 명확화와 국민안보교육의 기획·시행·지원·평가 체계 정립, 안보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 통일안보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 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학교 안보교육 강화, 안보현장과 스토리를 연계한 ‘기억 여행’, 게임을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안보교육, 국가기념행사와 연계된 애국심 함양, 통일안보교육 전담교사 양성 및 운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軍) 차원에서는 안보교육 교재의 보편성 확보, 국민안보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연계한 안보현장 체험 확대, 안보전문강사 자격증 제도 운용, 예비군 안보교육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민방위교육시 안보교육 확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날’ 발전, 민방위대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국가 기념행사와 연계한 시민안보교육, 국가보훈문화와 연계한 시민안보교육, 박물관·기념관·거리·공원 등에 호국 및 독립 영웅 명칭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⑤ 국민안보의식 평가 및 조사체계의 발전이다. 국민안보의식 조사시 선호도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국민 가치의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도덕판단역량 측정도구(KMCT) KC-지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방대 범국민안보의식 조사체계를 활용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언론 공개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I. 연구 목적

현대전은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총력전 등으로 불리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비정규전 전술, 테러와 범죄 행위 등을 동시적이고 적절하게 융합하는 전쟁방식을 말한다.¹⁾ 인지전은 상대국가, 정부, 사회 및 개인들이 의도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정보를 조작, 왜곡 및 선동하고 상대

방의 인지과정을 조작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형성하는 전쟁방식을 의미한다.²⁾ 즉 현대전은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 등의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자국민을 단결시키고, 상대국가의 전쟁의지를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전은 단순히 물리적 군사력의 우열에 의해서만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단결력과 국제적 지지 등의 비군사적 요소가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투는 군인이 수행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수행하는”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현대 하이브리드전과 인지전, 총력전의 정수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집요한 여론전과 심리전 공격에 맞서 대통령으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된 의지로 뚝뚝 뭉쳐 싸웠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에 맞서 수도를 지켜내고 2년 이상 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동원태세는 자발적이고 적시적인 인적, 물적 동원을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안보의식이 결여된 러시아 국민들은 동원령이 내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으며³⁾, 이로 인해 적시적인 동원이 제한되어 신속한 군사작전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이러한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총력전의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과 화생방 무기, 특수전 병력, 드론공격,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전쟁 초기 극도의 심리적 공포와 혼란, 후방지역 교란 등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에서 조직적인 선전 선동 및 여론전과 심리전을 전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⁴⁾ 이는 전쟁 초기 인적, 물적 동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갈수록 병력 자원이 감소하여 예비전력의 역할 비중이

1) Frank G. Hoffman(2009), “Hybrid vs. compound war. The Janus choice: Defining today’s multifaceted conflict”, Armed Forces Journal - Military Strategy, 1-7.
 2) 김진호·최영찬(2023),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 인지전 발전 방향: 인지전 개념, 전개 양상, 그리고 전략적 대응”, 『국방정책연구』, 39(3): 93-132.
 3) 박균열·이영·방정배(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국가안보”, 『인문사회 21』, 13(6), 4989-5000.
 4) 방정배(20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 미디어 활용과 시사점”, 『정신전략연구』, 76, 69-102.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동원과 지원은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의 복합적인 공격과 교묘한 여론전 및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고 온 국민이 총력 대응하여 전쟁 초기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평상시 확고한 국민안보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안보의식 관련 여러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4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자국 전쟁 발발 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46%)이 ‘기꺼이 싸우겠다’고 답했고, 54%는 ‘답변 유보’ 또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다.⁵⁾ 이는 45개 국가 중에 26위로서 평균(52%) 이하의 기록이며, 전쟁 위험이 높은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안보의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진단하고 총력안보 차원에서 국민 동원태세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고, 대상별 국민 안보교육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국민안보의식 함양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유사시 우리나라 동원태세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5) 갤럽(2023), “자국 연루 전쟁 발발 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63>(검색일: 2024. 7. 20).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1.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국민안보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국민안보의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변화 추이를 추적하기 위한 연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에서 1989년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대북인식과 통일의식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⁶⁾가 있다. 안보의식과 안보교육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박균열(2017)⁷⁾은 도덕적역량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하여 통일·안보의식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였고, 독고순·김규현(2013)⁸⁾은 나라사랑교육을 중심으로 국민안보교육 성과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병조(2023)⁹⁾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비추어 본 한국인의 국가 안보의식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대상별 국민안보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안성호(2010), 김성영(2010), 손상용(2019)은 청소년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박균열(2008), 차우규(2016), 박효종(2011), 차승만·이현숙(2012)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안보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안보의식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¹⁰⁾ 또한 김규남(2013), 박영호·이정훈(2017), 박종탁(202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나라사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최순원·양승봉(2024)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3), 『2023통일의식조사』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8665>(2024. 7. 15 검색).

7) 박균열(2017),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국방연구』, 60(3): 67-92.

8) 독고순·김규현(2013), “국민 안보교육 성과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군의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9(3): 195-224.

9) 김병조(2023), “포괄적 안보 개념에 비추어 본 한국인의 국가안보의식 분석”, 『국방논총』, 31(1): 1-30.

10) 김성영(2010), “청소년의 보훈의식과 나라사랑 정신함양 방안”, 『한국보훈논총』, 9(1) 145-178; 손상용(2019), “ASSURE 모형을 이용한 국가 안보교육 개선방안: 증강현실을 이용한 청소년 6·25전쟁 교수설계를 사례로”, 『정신전력연구』, 56, 109-156; 박균열(2008), “학생들의 안보의식 연구: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1(3), 173-195; 차우규(2016),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나라사랑 교육자료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보고서; 박효종(2011), “초·중·고 교과서의 나라사랑 교육내용 분석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보고서; 차승만·이현숙(2012), “초·중·고 교과서 안보내용 분석과 국가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논총』, 11(3): 71-98.

안보교육의 효과에 대한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송명진(2018)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여성의 안보의식을 분석하고 제고 방안을 연구하였다.¹²⁾ 라미경(2021)은 안보체험관 운영 비교를 통해 나라사랑 교육 발전방안을 연구하였고, 최용성(2010)은 국민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6·25전쟁 전적지 벨트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¹³⁾

셋째, 국민안보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양동안 등(2011)은 국민안보의식 실태와 문제점,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안보의식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김구섭 등(2011)은 국민안보의식 실태를 진단하고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처방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⁴⁾ 또한 정길호(2016)는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안보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안보교육의 본질과 목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병문(2017)은 안보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군과 연계된 협력적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보훈제도의 강화, 교육내용 신설 및 보완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⁵⁾

지금까지 국민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국민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가 시기적으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발한 2010년 이후에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보교육이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약화되었다. 따라서 변화된 대내외 안보환경에 맞춰 새로운 안보의식 함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외국의 국민안보의식 제고 프로그램

-
- 11) 김구남(2013),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 연구- 대학생 통일안보 대토론회 및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융합보안 논문지』, 13(6): 99-106; 박영호·이정훈(2017), “대학생 보훈의식과 나라사랑의식의 활성화 방안”, 『사회융합연구』, 1(1): 11-21; 박종탁(2023), “안보교육이 대학생들의 병역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7(5): 251-270; 최순원·양승봉(2024): “예비군 안보교육의 효과 증진방안 연구 - 장병 정신전력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 『정신전력연구』, (76): 37-65.
 - 12) 송명진(2018), “여성 안보의식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라미경(2021), “안보체험관 운영실태 비교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방안 모색”, 『한국과 세계』, 3(2): 79-112; 최용성(2010), “국민 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6·25전쟁적지 벨트 조성방안”, 『한국보훈논총』, 9(1): 123-144.
 - 14) 양동안·강길진·강옥경(2011), “국가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보고서; 김구섭 편저(2011), 『국민안보의식 진단과 처방』, 한국국방연구원.
 - 15) 정길호(2016), “국민행복을 담보하는 국가안보교육 강화방안”, 201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건국대학교; 김병문(2017), “한국 안보교육의 활성화 방안: 안보개념과 안보교육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6(3), 9-34.

에 대한 사례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의 국민안보의식 강화 프로그램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권의 변화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범국가적 차원의 안보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실효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정부-학교-군대-민간의 통합된 안보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방법, 콘텐츠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관련분야 전문가 인터뷰, 주요 선진국가의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유사시 국민의 동원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2. 안보의식 관련 법령적 근거

국민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방위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근거를 헌법과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이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이므로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1998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 제2조 1항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되었다. 즉, 통일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안보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합법적 과정이다.

또한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 제3조 1항에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하며, 제5조 2항에서 “지역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6항에서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구체화하여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민방위기

본법>제25조 1항에 “매월 15일을 민방위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주민은 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매월 민방위훈련에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3. 연구범위

- 가. 시간적 범위: 국민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진단은 기존의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궐련에서 실시한 2023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나. 대상별 범위: 국민 안보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군대, 예비군, 민방위대, 학교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대상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 다. 국가적 범위: 대한민국과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국민안보교육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보의식 발현 사례는 전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총화단결 할 수 있었으며, 국민안보의식이 전시 동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한국의 안보의식과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안보교육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안보교육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우수사례와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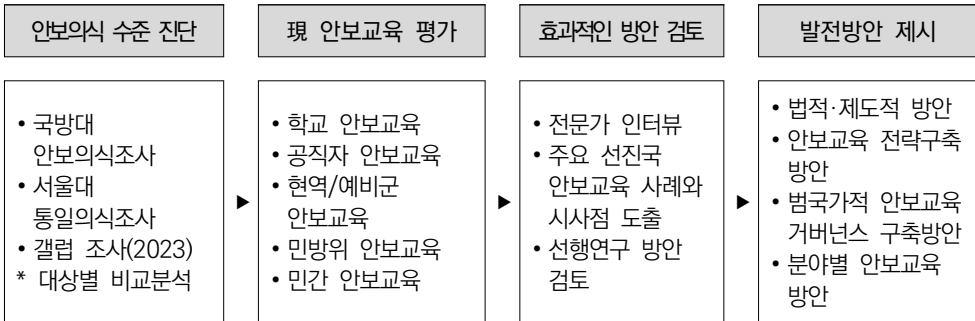
이를 위한 본 연구는 대상별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대상별 안보의식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로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을 연구할 것이다. 2023년도 안보의식 조사,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기존의 논문과 연구보고서, 외국의 안보의식 제고 프

로그랩 검토를 위한 외국의 논문, 인터넷 자료, 보도기사 등을 참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정부관료, 군인, 학교교사, 민방위담당자 등 안보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 분석틀



Ⅲ. 현대전의 특징과 안보의식

1. 현대전의 특징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현대전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대전의 특징은 하이브리드전과 인지전, 총력전의 개념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전과 인지전은 현대전이 군사적 수단 중심의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 방식에서 벗어나 테러, 사이버전, 여론전, 정보심리전 등과 같은 비군사적인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현대의 융·복합전쟁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하이브리드전

먼저,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개념이다. 이 용어는 적어도 2005년 초에 나타났으며 이후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한 전략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¹⁶⁾ 그 이후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현대 및 미래 전쟁에 대한 논의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다.¹⁷⁾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의 대중화는

2007년 미국의 군사 이론가 프랭크 호프만(Frank Hoffman)이 그의 유명한 저서인 '21세기의 갈등(Conflict in the 21st Century)'에서 정규전과 비정규전 사이의 일반적이고 받아들여지는 선형 구분을 넘어서는 전장 환경의 진화를 개념화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됐다.¹⁸⁾ 그는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재래식 무기, 비정규 전술, 테러리즘 및 범죄 행위를 맞춤형으로 혼합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모든 위협”으로 정의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을 재개념화 하려는 최초의 포괄적 시도는 NATO가 2010년 ‘이중전략 명령 캡스톤 개념(Bi-Strategic Command Capstone Concept)’에서 이루어졌다. 이 문서에서 “하이브리드 위협은 재래식 수단과 비전통적 수단을 동시에 적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적이 가하는 위협”으로 정의되었다.¹⁹⁾ 즉, 하이브리드전은 군사적 수단과 함께 정규전·비정규전, 테러와 범죄행위, 인지전·정보전·사이버전 등을 융·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전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지전

다음으로 인지전(cognitive war)의 개념이다. 인간의 마음을 공략 대상으로 보고 군사작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바로 인지전이다.²⁰⁾ 즉 인지전은 “상대국이 또는 국민의 인지체계 및 과정에 개입, 조작하여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파괴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²¹⁾을 말한다. 인지전의 표적은 대중의 신뢰(trust)이고 그 신뢰를 공격하기 위해 기존 선전(propaganda)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이를 위해 ‘인지조작’ 활동을 통해 ‘인지우세(mind superiority)’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적대세력의 인지

16) 방정배, 앞의 논문.

17) Damien Van Puyvelde(2015), “Hybrid War-does it even exist?”, NATO Review. <https://www.nato.int/docu/review/2015/Also-in-2015/hybrid-modern-future-warfare-russia-ukraine/EN/> (2023. 7. 18 검색).

18) F. Hoffman(2007),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fare, Arlington, V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ttps://www.potomacinstitute.org/images/stories/publications/potomac_hybridwar_0108.pdf (2023. 7. 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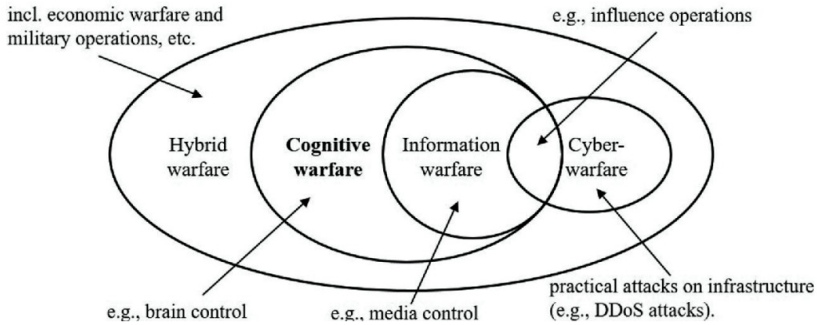
19) NATO(2010), *BI-SC Input to a New Capstone Concept for the Military Contribution to Countering Hybrid Threats*, Brussels: NATO. http://www.act.nato.int/images/stories/events/2010/20100826_bi-sc_cht.pdf (2023. 7. 18 검색).

20) 합동군사대학교(2022), 『인지전(cognitive war)』(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1) 설인효·배학영(2023),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66(2): 75-110.

기능을 공격함으로써 평시 여론 형성으로부터 전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²²⁾ 인지전은 정보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사이버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림 2>과 같이 하이브리드전과 인지전, 정보전, 사이버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인지전·정보전·사이버전의 영역



출처: Tzu-Chieh Hung & Tzu-Wei Hung, “중국의 인지 작동 방식: 대만의 허위정보 방지 전쟁에 대한 최전선 관점”,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7(4), 2022.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에 힘입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초연결되는 작전 환경에서 인지전은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메시지는 인지영역에서 공세 및 방호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했다.²³⁾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지를 공격하여 우호적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한 차례의 충성도 없이 크림반도를 합병했다.²⁴⁾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물리적 수단이 우세한 러시아가 단시간 내 승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인지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여론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러시아는 전쟁 초반 전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크

22) 허광환(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한반도 미래전에 주는 함의 - 군중 속의 전쟁과 다영역(Multi-Domain) 유·무인 복합전 -”, 『한국군사』, 13: 57-88.

23) 이종일(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인지전 차원의 북한 대남적화전력 대응을 중심으로 -”, 『정신전력연구』, (75): 285-319.

24) 김상현(2022), “인지전의 공격 양상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32(4): 21-50.

라이나를 지배하는 인상'을 주며, 우크라이나의 항전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²⁵⁾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군대 등 국가의 모든 요소를 결합하여 총력 대응했다.

다. 총력전

2차 대전 이후 일반화된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대전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 바로 총력전(total war)의 개념이다. 1793년 나폴레옹이 국민개병제를 도입하고 국민총동원령 선포한 것이 국가총력전 개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프랑스 조르지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수상이 의회 연설에서 “전쟁은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면서 총력전을 언급하였다. 총력전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에 달하였다.²⁶⁾ 총력전의 개념은 1935년 독일의 에리히 폰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 장군의 저서 『총력전(Totale Kriege)』에서 구체화되어 현재까지도 중요한 전쟁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총력전의 특징²⁷⁾은 첫째, 혁신적 무기 발전과 함께 전쟁 참가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둘째, 무력전 수행을 위해 국가가 총력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셋째, 무력전 이외 영역에서 전쟁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넷째, 전투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강한 정신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평시부터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모든 국가, 부문 간 전쟁준비 및 수행을 위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화기와 탄약 등의 대량생산 및 사용 등이 전쟁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및 미래의 전쟁 모습은 더욱 발달된 정보기술과 첨단화된 무기체계의 성격으로 인해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총력전이며 국력이 결집된 경제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⁸⁾ 이러한 국가총력전의 양상은 2022년 2월 24일

25) 송태은(2022),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내러티브·플랫폼·세 모으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62(3): 213-255.

26) 박계호(2022),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국방대 세미나.

27) 모리마츠 토시오(森松俊夫)(1983), 『총력전 연구』(동경: 백제사); 박계호(2012),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경기 성남: 북코리아).

28) 정진섭·강용구(2021), “예비전력 정예화와 연계한 국가비상대비체계 발전 방향”, 『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2021 안보연구시리즈 7(5), 145-221.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잘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은 젤렌스키의 전쟁지도 아래 외교,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국력의 요소들이 동원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²⁹⁾ 따라서 현대전은 군사적 자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과 국가 경제력의 집중이 필요한 총력전 태세를 요구하고 있어 유사시 국민의 자발적인 전쟁 참여와 예비전력의 효율적 동원집행이 전쟁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2. 전쟁과 국민의 전쟁의지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이 어떠한 유형의 상비전력 건설보다 소중한 안보적 자산이며 그 국가의 생존과 역사를 담보하는 무형전력의 핵심요소이다.³⁰⁾ 중국의 고대 병법가인 손자(孫子)는 『손자병법』 제1편 始計에서 ‘故經之以五事, 校之以計, 而索其情, 一日道, 二日天...’라고 하였다. 또한 ‘道者 令民與上同意也 故可與之死 可與之生 而不畏危’ 즉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근본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세세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그 첫째가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면, 국민들은 위정자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쟁에서는 어떤 위험일지라고 극복하여 승리하려는 것으로서³¹⁾ 이는 곧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전쟁의지’라 할 수 있다.

프러시아의 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국민의 의지’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삼위일체론(Trinity)을 주장하면서 제1극(국민)과 제2극(군대), 제3극(정부)이 일체를 이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제1극인 국민이 바로 ‘국민의 의지’ 또는 국민안보의식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³²⁾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 장군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힌덴부르크

29) 박계호(2022), 앞의 논문.

30) 정길호, 앞의 논문.

31) 김광수(2012), 『손자병법』(서울: 책 세상), 21~24; 이기택·이선규(2013),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군사』, 88, p.256에서 재인용.

32) 박계호(2012),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서울: 북코리아); 이기택·이선규, 위의 논문 p.256에서 재인용.

(Paul von Hindenburg) 장군의 참모와 육군의 참모차장(병참감 겸무) 및 참모총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독일군의 전쟁을 수행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35년 『국가총력전(Der Totale Kriege)』을 집필하였다. 여기서 그는 국가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경제력, 총수 등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정신적 단결’은 국민의 정신력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서 생존 투쟁에 필요한 단결력을 국민과 군에 부여하고, 국민의 존망을 위하여 전쟁에서 최후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였다.³³⁾ 여기서 ‘국민의 정신적 단결’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국민의 전쟁의지 또는 국민안보의식과 연관된다.

일본인 다카하시 하지메(高橋 甫)는 1953년 『현대총력전』을 집필하면서 역시 국민의 의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였다. 그는 현대전에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으로 무력과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사상전력이 바로 국민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 정신력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국민의 의지’와 연계되는 부분이다.³⁴⁾

합동기본교리는 현대전이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됨을 감안하여 국가총력방위(國家總力防衛)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 총력 방위를 위해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⁵⁾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전쟁의지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 랜드연구소(RAND)의 연구결과³⁶⁾는 주목할만 하다. 2018년 랜드연구소는 미 육군에 전쟁의지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담은 두 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미군의 군사교리에서 전투의지와 관련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는데, 전투의지를 강조한 시기에는 전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전했다는 것이다. 랜드연구소는 “전쟁 의지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은 단순히 한 군대가 다른 군대를 파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과 거의 모든 전

33) 루덴도르프(1972), 최석 옮김, 『국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pp:35~37; 이기택·이선규(2013), 앞의 논문, p.25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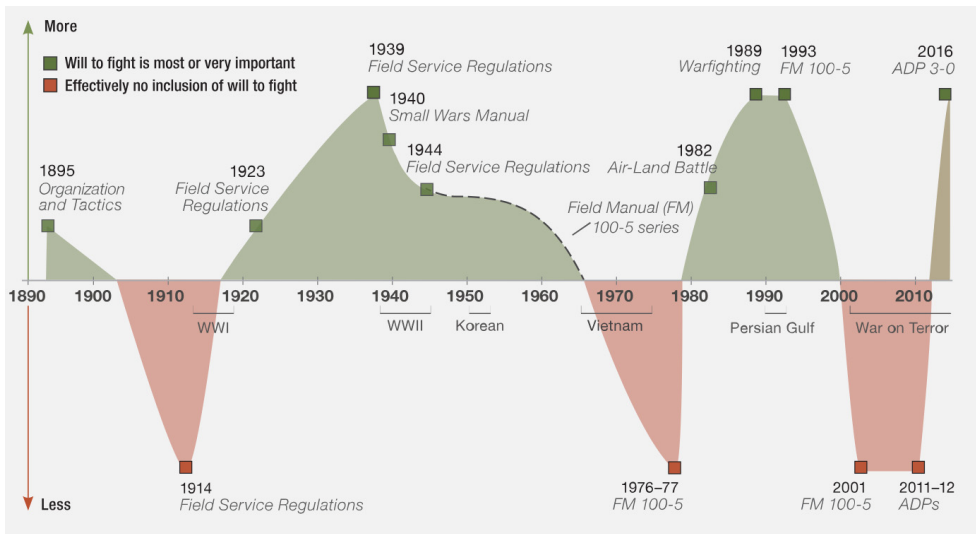
34) 다카하시 하지메(1975),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옮김, 『현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pp:87~92; 이기택·이선규(2013), 앞의 논문, p.257에서 재인용.

35) 합동참모본부(2002), 『합동기본교리』 (대전: 육군인쇄창), p.34; 이기택·이선규(2013), 앞의 논문, p.257에서 재인용.

36) Ben Connable et al.(2019), “Will to Fight Returning to the Human Fundamentals of War”, RAND, https://www.rand.org/pubs/research_briefs/RB10040.html(2024.8. 10. 검색).

투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는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전쟁의지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전쟁의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림 3〉 미군의 군사교리에서 전투의지를 강조하는 시기별 특징



출처: 미국 랜드연구소

이처럼 약소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국민의 전쟁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900여 회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역사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전자수(自戰自守)와 호국정신, 상무정신, 의병정신 등으로 무장한 구국 민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현재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를 맞아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원에 응하는 전 국민적인 항전 의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³⁷⁾ 중동의 이슬람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히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물리적인 군사력보다는 국민의 동원 의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의 동원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에 왕도는 없다. 어릴 때부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에게 안보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

37) 정진섭(2023), “우크라이나 사태 시사점과 국가동원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2023안보연구시리즈 제5-5호. 국방대학교 안정보장연구소.

민의 잠재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현대전에서 국민안보의식과 동원태세 구축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총력전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현대전은 정규전과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비정규전,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에서 차지하는 민간의 요소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전투는 군인이 수행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수행’하는 총력전을 펼쳐야만 한다. 군에 대한 민간 지원, 민방위대, 사회적 탄력성, 정보 및 심리적 방어, 중요 인프라 보호는 현대 총력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의 항전의지, 전투정신, 사회의 회복탄력성이 전쟁에서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³⁸⁾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세계 2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에 맞서 22위인 우크라이나³⁹⁾가 2년 이상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전쟁의지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단합하고 동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다양한 민간 조직과 개인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드론부대, 사이버부대, 국제군단을 결성한 민간 전투부대 등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민간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직접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전투지원 활동을 하는 국민의 활약상이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총력전의 중심에 민간 인력들이 있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한 축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이에 반해 러시아 국민의 동원 의지는 취약하기 그지없어 전쟁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예비군들이 국가의 동원령에 불응하여 해외로 도피하거나, 동원된 병력들도 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⁴¹⁾,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38) Giorgi Shaishmelashvili(2023), “Total defense: The strategy on how to defeat strong”, PMC Research Center Policy Paper, <https://pmcg-i.com/publication/total-defense-the-strategy-on-how-to-defeat-strong/> (2024. 7. 18 검색).

39) 매년 부대의 수, 국방비, 병참능력, 지리 등 60여 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재래식 군사력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인 ‘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로 평가되었다. <https://www.globalfirepower.com/global-ranks-previous.php> (2024. 7. 18 검색) 참고.

40) 정진섭, 앞의 논문.

41) 석경민(2022.3.20), “푸틴 최대 적은 러시아에 있다, 4월 징집 앞두고 도망친 그들”, 『중앙일보』

최수와 용병까지 고용⁴²⁾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히 우월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전쟁 의지를 결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동원전력의 주체자는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지원과 공감 없다면 동원전력의 질적인 동원준비태세의 발전과 자발적인 동원속도의 증가, 훈련참여 의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지는 국가총력전 수행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의지를 결집시켜 전 국민이 전쟁목적에 공감하고 전쟁목적을 달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지가 전시에 결집될 수 있는 것은 평시에 국가안보와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국가동원절차에 대한 이해 등 국가안보의식이 갖춰져야 한다.⁴³⁾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이념적으로 양분된 한국 사회에서 흐트러진 국민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전시에 전쟁 의지와 자발적인 동원 의지를 결집시키는 문제는 유형적인 군사력 강화 이상의 중요한 문제라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⁴⁴⁾ 더구나 급격한 자원감소로 점차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규군에 편성된 군인만으로 전승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사시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 인력과 자산을 총력전 수행에 최대한 동원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상시 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민안보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706> (2024. 7. 25 검색); 장재은(2024.8.20.), ““휴가 뒤 귀대하면 바보”...러시아, 탈영·병역기피 5만명 추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0118700009?input=1195m> (2024. 7. 18 검색).

42) 강영진(2024.6.11.), “남성 최수 수만 명 동원한 러시아, 여성 최수도 징집”, 『뉴스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1_0002767629&cID=10101&pID=10100 (2024. 7. 20 검색).

43) 권삼(2022), “동원전력의 실효성 제고 방안”, 예비전력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사점, 국방대학교 세미나.

44) 정진섭, 앞의 논문.

IV. 국민안보의식 수준과 안보교육 실태

1. 안보의식과 안보교육의 상관성

안보의식은 안보와 의식이 결합된 용어로서, 안보에 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말한다. 안보라 함은 안전보장의 준말로써 통상 국가·사회·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를 유지·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⁴⁵⁾ 인터넷 국어사전은 안보의식을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식”⁴⁶⁾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이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신념, 의지,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형성하는 방식과 그 내용의 總和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보는 눈 또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안보의식이라 함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념, 의지, 가치관이나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안보의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협의의 안보의식으로 ‘국내·외 모든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며, 스스로가 안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의지’를 말한다. 둘째, 광의의 안보의식으로 ‘국가안보의 개념과 국가안보 관련 제요소 및 정책에 대해 갖는 견해의 총칭’이다.⁴⁷⁾ 이러한 안보의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정, 학교, 군대, 직장, 사회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 학교와 군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과 직장, 사회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⁸⁾ 따라서 학교, 군대,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국가안보에 대한 신념, 의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국민 안보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45) 김구섭(2011),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서울: 한국국방연구원).

46) 인터넷 국어사전.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C%95%88%EB%B3%B4%EC%9D%98%EC%8B%9D&from=tsearch>

47) 최영진(2013), “민주화 이후 한국 안보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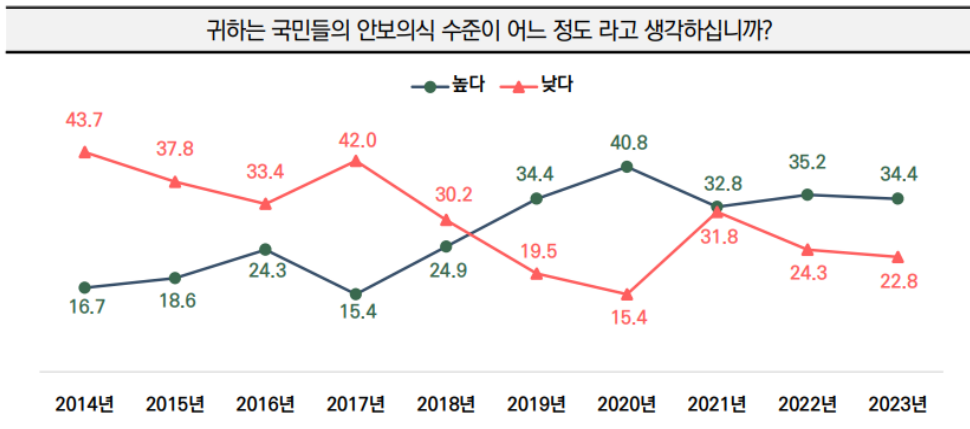
48) 정길호, 앞의 논문.

2. 국민안보의식 수준 진단

안보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대, 국방대, 언론 등 여러 기관에서 국민안보의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안보의식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이다. 많은 지표들 중에서 국민안보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서 국민 스스로가 안보의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쟁이 발발하면 참전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의 범국민안보의식 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안보의식의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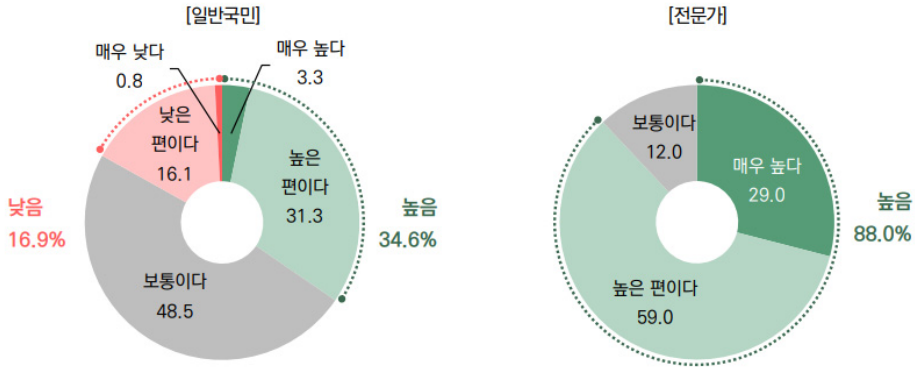
먼저,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안보의식에 대한 평가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 중에 국민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23년 34.4%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는 응답(22.8%)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2/3는 국민안보의식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가들의 설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안보전문가들은 88%가 스스로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국민안보의식에 대해서는 32%만이 높다고 응답하여 국민안보의식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그림 4> 국민안보의식 수준 설문 결과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범국민안보의식 조사』

〈그림 5〉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범국민안보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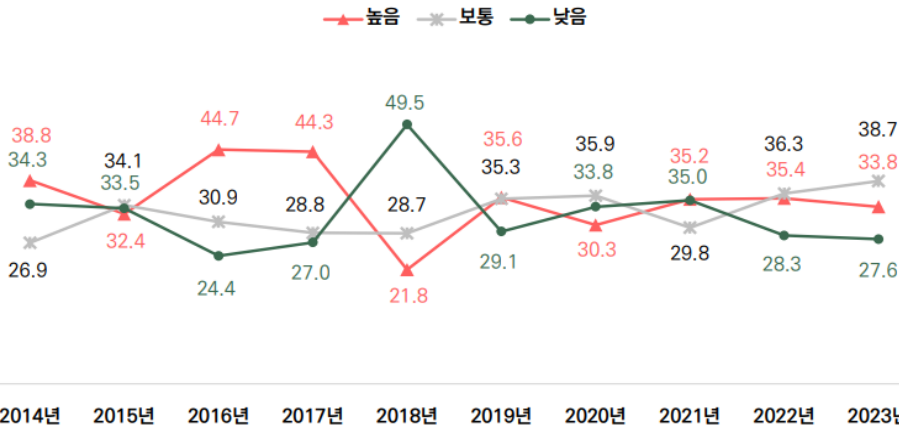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의 33.8%만이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낮다고 평가하였다.⁴⁹⁾ 이는 2023년 데일리안정례조사에서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⁵⁰⁾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 48.3%가 북한의 기습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7.4%는 낮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대국과 대치하는 분단 국가 국민으로서 안보불감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49) 국방대학교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통이다’ 척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고 보통이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데이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보의식이 비교적 높은 ‘군인/경찰/소방’ 직업군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0%인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66%라는 점에서 ‘보통이다’의 척도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50) 데일리안정례조사에서는 ‘보통이다’ 대신에 ‘잘 모르겠다’는 척도를 사용하여 가능성 여부를 보다 분명하게 묻고 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14.8%, ‘어느 정도 있다’ 33.4%, ‘거의 없다’ 32%, ‘전혀 없다’ 15.4%, ‘모르겠다’ 4.4%로서 침공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48.3%, 없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정례조사 결과보고서 (2023.10.17.)” 참조.

〈그림 6〉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조사

(단위 : %)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범국민안보의식 조사』

마지막으로, 전쟁 발발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진단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전쟁이 발발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47.6%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2023년 갤럽이 국가별 ‘자국 연루 전쟁 발발 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를 묻는 설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1〉 ‘전쟁 발발시 싸울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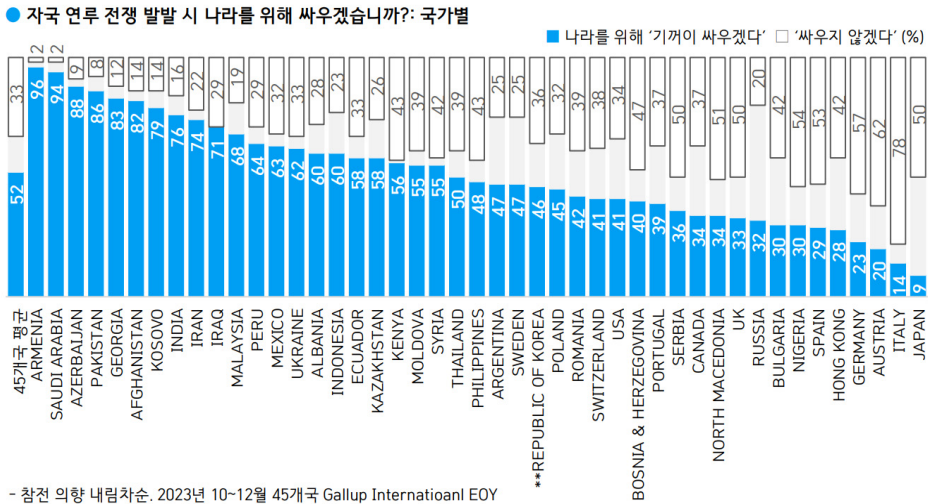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반대
응답율	7.3%	40.3%	38.8%	15.5%	1.1%

출처: 국방대학교, 「2023 범국민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갤럽에서 국가별 ‘자국 연루 전쟁 발발시 참전의 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은 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46%만이 ‘기꺼이 싸우겠다’고 응답했고, 36%는 ‘싸우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45개 국가 중에서 26위의 낮은 수준으로서 전체 평균인 5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참전 의사를 밝힌 비율이 남성은 61%인데 비해 여성은 32%로 낮았으며, 주로 군복무를 마친 인구가 다수 포함된 19~29세 남성에서 가장 높은 71%의 참전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또래의 19~29세 여성의 37%와 비교할 때 두 배의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0대와 60대 이상에서 46%, 36%로 참전

의사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여성과 50대 이후의 세대에 대한 안보교육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7〉 '자국 연루 전쟁 발발시 참전의사' 여론조사 결과(갤럽)



- 참전 의향 내림차순. 2023년 10~12월 45개국 Gallup Internatioanl EOY
 - 한국은 2023년 11월 2일~12월 4일 면접조사(CAPI). 한국갤럽 www.gallup.co.kr

출처: 한국갤럽 www.gallup.co.kr

또한,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국방대학교의 「2020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반드시 응소하겠다'는 예비군의 비율(13.7%)이 '상황에 따라 응소하겠다(23.8%)', '절대로 응소하지 않겠다(6%)'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 예비군의 자발적 동원 응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은 바 있다.

〈표 2〉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응소 여부 조사

	예비군			예비군이 아님
	반드시 응소하겠다	상황에 따라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로 응소하지 않겠다	
응답율	14.3%	23%	5.8%	51.9%

출처: 국방대학교, 「2020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국민들의 이러한 안보의식 수준은 실제 민방공 대피훈련에서도 낮은 참여율로 나타났다. 2023년 8월에 정부 주관으로 6년 만에 실시된 민방공훈련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⁵¹⁾ 이러한 현장을 취재한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안보불감증을 지적하였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드물게 공습 훈련을 했지만 많은 시민이 이를 무시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사람들은 대피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통신은 “완장을 찬 공무원들이 거리에서 벗어나도록 요청했음에도 사람들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대피소 등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시민들도 커피를 흘쩍이는가 하면 ‘에어컨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이었다” 등 무관심한 시민들의 태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도 민방위훈련에 무관심한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6년 만에 첫 민방위훈련을 실시했지만 둔감함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 20대 대학생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껏 많이 발사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해 시민들의 안보불감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3. 건국 이후 시기별 국민안보교육 실태 분석

국민안보교육은 건국이후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과 화해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일교육과 함께 추진되어 왔으며, 시기별로 그 비중을 달리해 왔다. 즉, 시대와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안보교육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 채 서로 다르게 접근되고 시행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안보교육 추진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공(멸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평화통일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⁵²⁾

가. 반공(멸공)교육

반공(멸공)교육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40년 이상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안보교육이다.⁵³⁾ 이러한 양태는 북한에서 실시해 온 대남 교육과 비교해

51) 박효선(2023.8.24.), “외신도 지적한 한국 ‘안보불감증’… ‘민방위 사이렌도 무시’”,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7835> (2024. 7. 20 검색).

52) 박찬석(2002),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4(1): 139-160; 박균열·성현영·방정배(2024), “통일교육의 정의, 목표, 이념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윤리교육연구』, (72): 197-225.

볼 때 서로 닳은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냉전시대 남한의 ‘반공교육’과 북한의 ‘반미교육’은 서로의 입장만 다를 뿐 겉으로 드러난 교육방법이나 양식은 닳은꼴의 이념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냉전체제 하에서 남한과 북한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핏줄, 한 민족을 강조하고 상대편을 한겨레로 포용하면서도 각 진영의 정권 차원에서는 서로를 민족의 원수로 악마화하는 교육을 추진해 왔다.⁵⁵⁾ 남한은 북한을 ‘뿔 달린 북괴 공산집단’으로, 북한은 남한을 ‘야수의 발톱을 가진 미제 승냥이들의 주구(走狗)’라는 공격적인 담론을 전개함으로써 적대적인 이념교육의 전형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는 경쟁적인 정권을 서로 적대시하면서도 하나의 겨레, 하나의 민족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강한 민족적인 의무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공(멸공)교육은 국민들에게 분단 상황을 명확히 이해시키는 성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의 특성이나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등 시대 상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⁵⁶⁾

나. 통일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 해방 이후 40여 년 만에 반공 및 멸공 위주의 안보교육이 바뀐 것이다. 특히 1987년 당시의 한국 사회는 6월 항쟁과 ‘민주화선언’⁵⁷⁾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시민 교육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통일교육도 활성화되면서 북한을 적대적인 대결의 관점에서 통일을 이룩해야 할 민족의 동반자로 설정하게 되었다.⁵⁸⁾ 이러한 분위기는 학교교육에서 잘 드러났다. 199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

53) 심연수(2006), “통일대비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倫理研究』, 62(1): 245-264.

54) 강진웅(2018), “남북한의 이념교육 비교: 반공교육과 반미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235-252.

55) R. R. Grinker(1998), *Korea and its Future: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56)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 (충북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강구삼·채수은(20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탐구: 교육 분야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2): 211-240.

57) ‘6·29민주화선언’: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29일 집권당 민주정의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전격 발표한 선언. 이 선언 이후 그해 말 개헌을 통해 한국 대통령 제도는 오늘날의 직선제, 5년 단임으로 정착되었다.

58) 강진웅(2018), 앞의 논문, p.244.

과서⁵⁹⁾에 명시적인 반공 이야기가 사라진 대신, ‘우리동포’, ‘우리말’, ‘평화통일의 길’과 같은 적대적 이미지를 벗어난 통일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단원들이 등장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자 체제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는 안보 우위의 통일교육이 전개되었다.⁶¹⁾ 이는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도 1999년과 2002년에 발발한 제1·2차연평해전, 2008년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2010년의 천안함 침몰,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으로 대치와 갈등이 반복되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안보교육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⁶²⁾ 즉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에 따른 감상적인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안보교육과 동시에 통일에 따르는 비용과 통합의 문제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은 2000년대부터 등장하였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통일 관련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도 주요 요인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북미 핵 협상 추진과 교착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은 평화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맞추어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지기도 했다.⁶³⁾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형성되었던 우호적 분위기가 북미협상 결렬 이후 소강상태에 이

59) 교육부(1993), 국정교과서 『도덕』(5학년), p.150.

60) 예컨대 1993년 국민학교(1996년 3월 1일에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5학년 도덕 교과서 ‘우리언어’의 단원에 보면 다음의 내용이 실려있다. “남북한의 언어가 각기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같은 한글을 쓰고 있으며,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서로 이해하기는 큰 장애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어린이와 마음껏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하여는, 하루빨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가 하나 둘 이루어지면 통일의 길은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61) 함규진(2015),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초등학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7(1): 83-105.

62) 예컨대 2014년의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는 “나라를 지키면서 통일을 이루자”라는 글에서 천안함 사건과 함께 ‘동성이네 반에서 일어난 일’의 예시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보고 이들을 도울 것을 말한 동석이의 주장과 통일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 상철이의 주장에 대한 토론이 지시되기도 했다.

63) 김종군(2019), “코리언 평화 공동체를 위한 통합서사의 기능”, 『통일인문학』, 77: 5-36; 강구섭·채수은, 앞의 논문, p. 212.

르기도 했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편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통일교육에서도 ‘평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다.⁶⁴⁾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너무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안보의 문제가 희석되고 안보교육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평화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통일교육지원법(제2조)에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천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의 국민안보교육은 통일과 안보의 주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균형 있고 조화롭게 다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4. 현재의 대상별 안보교육 실태

가. 학교 안보교육 실태

학교교육에서 안보교육은 주로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과목인 사회과에서 일부 다루어져 왔다. 현재 학교의 안보교육은 안보교육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곧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안보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⁶⁵⁾ 학교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⁶⁶⁾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에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안보교육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제2조(정의)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다. 통일의 가치관과 태도를 ‘자유

64)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서 발간”, 「보도자료」(2023. 3. 14). 대표적인 사례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하는 “통일교육 지침서”이다.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의 핵심 길잡이가 되는 지침서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내놓았다. 이 책의 내용 중 장절의 제목을 보면 I.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II. 평화·통일교육의 중점방향, III.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IV. 평화·통일교육의 방법 등 각각의 장마다 모두 ‘평화’라는 용어를 어색하리만큼 특별히 삽입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후 2023년 3월에 국립통일교육원에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는데, 여기서는 각 장마다 들어있었던 ‘평화’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했다.

65) 김구섭, 앞의 책.

66) 「통일교육지원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에 바탕을 두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 시 건전한 안보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서 “정부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보교육이 포함된 학교 통일교육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지침서가 거의 매년 발간되어 왔다. 학교 통일교육지침서에는 도덕 교과를 포함한 학교 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부터는 기존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구분하여 발간되었던 통일교육지침서가 통합용으로 발간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⁶⁷⁾이 발간되었는데, 이때부터는 매년 발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개편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⁶⁸⁾을 발간하였다. 정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는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 안보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에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가 반영되어 있고, 교육 중점방향에서도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서는 ‘북한 군사’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 교육청의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안보교육 관련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정세, 남북관계 등 북한 및 주변국 안보위협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2023년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1개 시·도교육청에는 여전히 ‘안보교육’ 내용이 미반영 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통일교육 기본계획과 달리 ‘건

67) 국립통일교육원(2023),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주)늘플러스).

68) 국립통일교육원(2023),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주)늘플러스).

〈표 3〉 각 교육청 '2023 학교 통일교육기본계획'에 안보교육 반영

교육청	안보교육 반영 여부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추진현황 - 학교통일교육계획 수립 및 통일교육주간 운영 목적: 통일 안보교육 활성화 - 통일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주요내용: 체험을 통한 통일 안보 교육 의지 제고 -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 지원 목적: 통일환경의 객관적 이해 인식을 통해 통일 안보교육 전문성 제고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 목표: 건전한 안보관 정립 * 안보교육 내용 없음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나라사랑 통일교육 기본 계획 - 목적: 건전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통일교육 실천 -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 지원: 통일 및 안보 주제 관련 현장체험 및 탐구 조사 -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건전한 안보의식 함양 - 나라사랑 안보 역사체험교육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통일교육 운영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평화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안) * 안보교육 내용 없음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나라사랑 통일교육 추진 계획 - 목표: 보편적이고 균형있는 가치관을 지향하는 나라사랑 통일 역량 함양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통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초중고 통일교육 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지원 계획 - 목적: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한 균형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 - 추진과제: 교육과정 연계 통일, 안보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통일 안보 주제 융합 소통 토론수업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통일교육 기본 계획(안) - 추진목적: 건전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통일교육 실천 - 학교별 특색 있는 '통일교육주간' 운영: 나라사랑 안보 역사 체험교육 참여 등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학교통일교육 기본 계획 - 통일교육 목표: 건전한 안보관 정립 * 안보교육 내용 없음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평화 통일교육 운영 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학교 평화 통일교육 운영 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평화 통일교육 기본 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경남 평화 통일교육 계획 * 안보교육 내용 없음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안) -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건전한 안보관 정립 * 안보교육내용은 없으나 2022년과 달리 '나라사랑교육' 내용 추가

출처: 이태규 의원 보도자료, “학교통일교육계획에 11개 시 도교육청은 안보교육 미수립”(2023.10.11.)에서 정리.

69) 이태규 의원 보도자료, “학교통일교육계획에 11개 시 도교육청은 안보교육 미수립”(2023.10.11.).

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추진 목적에 담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세부추진계획에서 ‘안보교육 활성화’ 등을 명시하여 안보와 평화의 균형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는 2023 통일교육계획에서 2022년과는 달리 ‘나라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편적이고 균형있는 가치관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이와는 달리, 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물론 부산, 충북, 경북 등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도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의 경우 통일교육 목표에 ‘건전한 안보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에는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계획과 달리 2023 통일교육 계획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을 통일교육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세부내용에서 ‘안보교육’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 통일교육은 ‘안보’관련 내용이 결여된 ‘통일’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학교교과에서 통일교육 시수가 매우 부족하여 통일교육은 물론, 안보교육을 반영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기관의 통일교육 반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안보관 형성을 위한 교육시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⁷⁰⁾ 2022년 통일부에서 발표한 ‘2022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초·중등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통일교육을 실시한 시간”에 대한 질문에 “1시간~2시간”이라는 답변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⁷¹⁾ “최근 1년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을 실시한 시간”에도 “1시간~2시간”이란 답변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⁷²⁾ 이러한 결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한 통일교육 시수인 초등학교 4시간, 중학교 약 7~8시간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사들도 통일교육 실행이 어려운 이유로 44.5%가 “교육과정의 시수 부족”을 선택하여 가장 높

70) 조영희·김훈희(2023), “국가안보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법」 개선방안 연구 -초·중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56: 459-486.

71) 홍중호·김민규·김창민·김정수(2022), 『2022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72) 위의 책.

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교사들도 통일교육 시수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이 약화된 원인 중의 하나가 과거 대북 포용정책 및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교육의 방향이 ‘안보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의 전이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⁷³⁾ 과거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은 안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었다. 통일과 안보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의 초점이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통일교육에서 다루는 안보는 통일을 위한 전초단계로 현재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민족적 동질성과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⁷⁴⁾ 따라서 실효성 있는 안보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안보교육과 관련된 전담부서가 없고 인력 또한 충분치 못한 점도 교육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안보교육과 관련된 전담부서와 담당자가 없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담부서 역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들을 겸직하고 있어 통일교육과 관련된 업무조차 효율이 높지 않다.⁷⁵⁾ 학교에서도 정식교과 과정이 아닌 이러한 분야들에 비중을 높이 두지 않다 보니 실제 교육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나. 현역 장병 안보교육 실태

현역장병 안보교육은 ‘정신전력교육’의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관 교육, 북한정권·북한군이 우리 군의 적(敵)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 전투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군인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⁷⁶⁾ 신병교육은 5주 과정을 기준으로 26시간 이상 시행되며, 부대 정신전력교육은 일일, 주간, 반기 단위로 주기적·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주간정신전력교육은 연간 36주 이상 시행되며, 주당 3시간씩 실시되고 있

73) 차승만·이현숙, 앞의 논문.

74) 고성진·박효선(2014), “군과 연계한 학교 안보교육 강화방안”, 『한국위기 관리논집』, 10(6): 89-119.

75) 이광현(2013), “중학교 안보교육 강화방안 연구 -군의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76) 육군본부(2024), “2024년 정훈공보 업무수행 지시”, 육지시 제24-9001호.

다.77) 또한 반기 단위로 3박 4일간의 집중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하여 입대 이후부터 전역 시까지 3회를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전력교육은 국방부에서 5년 주기로 제작하여 하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매주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기본교재를 활용하여 전군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일일정신전력교육은 취침 전후 10분 이내로 국방FM 「명상의 시간」을 청취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주간정신전력교육은 국방TV에서 방영하는 「강군인사이드」 시청 후 발표·토의식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국방일보 「시사안보」 주제에 대한 발표·토의식 교육과 문화단결활동을 시행한다. 반기집중정신전력교육은 현장체험과 참여형·행동화 교육방법으로 진행되며, 국방부에서 민간전문강사와 북한이탈주민 초빙교육이 독립중대 이상 부대에 연 1회씩 지원한다.

이처럼 군대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므로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을 가장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보교육의 개념과 체계, 콘텐츠 구성 및 교육방법 등에서 타기관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 안보교육 시스템을 국민안보교육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안보교육은 군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으로서 국민안보교육으로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념적 우월성, 적개심 고취를 위한 대적관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군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이지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하기에는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78) 이를 위해서는 안보교육이 체제와 이념 중심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되도록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보교육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국방일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군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안보교육의 내용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보편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더구나 2024년에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현역군인과 군무원

77) 주간정신전력교육은 기본과제 1시간, 시사안보 1시간, 문화단결활동 1시간으로 편성된다.

78) 김태훈(2024.8.13.), [단독] "군 교재로 국민 안보 교육"…정부 문건 입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6175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위주로 집필진이 구성되어 교재의 객관성과 보편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⁷⁹⁾

셋째, 안보교육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과거 국방부에서 학교 안보교육을 지원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군의 안보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방정신전력원은 국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증진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그러나 현대 하이브리드전과 총력전의 시대에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결력이 전쟁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방정신전력원이 안보교육의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군의 안보교육이 예비군 안보교육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정신전력교육 전문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 예비군 안보교육 교안을 민간에 위탁하여 제작해왔으며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국방정신전력원은 배제되어 왔다.⁸⁰⁾ 또한 현역 장병들을 위한 안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이 예비군 안보교육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정신전력교육 담당부서인 정훈계통과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예비군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 예비군 안보교육 실태

예비군 안보교육이 시작된 것은 남북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70년대부터이다.⁸¹⁾ 그리고 안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운용하여 시행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상급부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해당부대 지휘관(연·대대장)에 의해 영상교육과 강의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2009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5개 향토사단을 대상으로 예비역 장군들이 담당하게 되었다.⁸²⁾ 201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에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안보교육을 반영⁸³⁾하

79) 오예지(2023.12.28), “독도가 영토분쟁지역? 군 교재 집필·감수 누가 했나”, 『MBN』. <https://www.mbn.co.kr/news/politics/4990217> (2024. 7. 18 검색).

80) 최순원·양승봉, 앞의 논문.

81) 위의 논문

82) 국방부(2009.4.15.), “예비역 장군, 예비군 안보교육에 앞장선다”, 국방부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344429> (2024. 7. 20 검색).

고 전문강사교육 1시간, 지휘관 교육 1시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명시하였다.

예비군 안보교육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전문강사교육에 대한 문제점⁸⁴⁾이 노정되었고, 2019년도에는 주적개념 삭제 등으로 인해 예비군 안보교육의 부실로 인한 논란⁸⁵⁾이 제기되었다. 이후에 교육자료는 군에서 제작, 배포한 교재를 활용하고, 내용의 적합성은 각군 및 국직부대장 책임하에 검토하고, 안보강사 단체 선정시 외부 전문가를 50%이상 편성하며, 전문강사 교육시 훈련부대 관계관이 입회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 교육방식은 표준 교안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전문강사 및 지휘관이 교관으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은 영상시청 후 팀별로 문제를 풀어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예비군 안보교육은 외부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외부의 전문강사 단체 및 표준교안(동영상)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지만, 예비군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예비역 장군으로 구성된 단체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선정되면서 높은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전문강사의 능력 및 자질 문제, 정치 편향적 발언 등의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 교육 전에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강사들은 교통편이 좋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만 선호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부대들은 강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⁸⁶⁾

또한, 외주 제작한 국방부의 표준교안을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강사들에 의한 일방적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젊은 MZ세대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역과 예비역은 병사 기준으로 나이 차가 10년 이하인 동일세대임을 고려할 때, 현역 장병들에 대한 정신전력교육이 외부의 전문강사를 활용

83)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시행 2012. 2. 8.] [국방부훈령 제1392호, 2012. 2. 8., 일부개정]

84) 박용하(2011), “‘김대중·노무현 당선은 北때문’…보수단체는 예비군 교육 중”, 『경향신문』; 김한식(2013), “안보교육 발미로 국가기관 전방위로 대선 개입”, 『news1』.

85) 강주현(2019), “주적 사라진 대한민국 군대…국방의무 목적 잃은 청년들”, 『스카이에일리』; 구특교(2019), “장병 훈련에 빠트리는 안보교육”, 『동아일보』.

86) 최순원·양승봉, 앞의 논문.

한 ‘실감·체감·공감’형 교육⁸⁷⁾으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군 안보 교육의 방식과 콘텐츠의 개선이 요구된다.

라. 민방위대 안보교육 실태

민방위 교육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계획수립 및 지침을 하달하며, 지자체 별로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시행되고 있다.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⁸⁸⁾ 대부분의 대원들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대는 정부의 통제하에 합법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은 1~2년 차 대원은 소집교육 각 4시간, 3~4년 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각 2시간, 5년 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사이버교육 매년 1시간을 수강하게 된다.⁸⁹⁾

<표 4> 2024년 민방위 교육 시간 및 내용

연 차	시 간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1~2년차	4시간	민방위제도, 응급처치, 화재안전, 화생방방호	소집교육 참여형교육
3~4년차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과목: 민방위 제도,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응급처치, 화재대피요령 선택과목: 민방위 제도 전반, 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테러·비상사태·풍수해·대설·지진 및 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경보발령, 대피소 찾기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4년도 민방위업무지침”

87) 현역 장병들을 위한 정신전력교육은 전담강사와 전문강사 2명이 한 팀이 되어 강의와 공연(노래 및 연주), 퀴즈 게임 등을 재미있게 구성하여 ‘실감·체감·공감형 융합식 강의’를 실시하여 장병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

88)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8522호], (시행 2022. 12. 1.).

89)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는 5년 차까지 소집교육을 진행하였으나, 팬데믹 기간 중에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2023년부터 1~2년 차 대원들만 소집교육을 받고 있다.

민방위 교육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달한 민방위업무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며, 지자체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민방위 소집교육은 민방위기본(1H), 응급처치(1H), 화재안전(1H), 지진·화생방방호(1H) 과목이 편성된다. 이 중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은 민방위기본 과목과 화생방방호 과목이다. 그런데 「2024민방위표준교재」⁹⁰⁾에 제시된 교육내용을 보면, 민방위기본 과목에서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45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인 0.02%가 편성되어 있다. ‘변화하는 주변환경’이라는 주제로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화생방방호’ 과목에서도 북한의 화생방 위협을 다루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화생방의 일반적인 소개와 화생방 상황시 대피요령 및 방독면 착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년 차 이상부터 실시되는 사이버교육에서도 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민방위교육에서 안보 관련 교육이 거의 편성되지 않은 것은 민방위기본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민방위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⁹¹⁾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적 재난뿐만 아니라 전시나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대가 운영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도 ‘민방위사태’의 범위를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로 규정하고 있어 민방위 활동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교육이 안보 관련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채, 재난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9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제작한 민방위표준교재는 민방위 강사들이 개인 교안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2024), 『2024민방위표준교재(민방위소양)』 참조. <https://www.ndti.go.kr/client/board/board.do?boardno=201&no=16749> (2024. 7. 20 검색).

91)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8522호], (시행 2022. 12. 1.)

마. 공직자 안보교육 실태

공직자 안보교육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 및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이후 대통령 지시(2010.12.21. 국무회의시) “민방위교육이나 학교교육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매년 공무원 안보교육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2012년에는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를 발간 배포하여 공직자 안보교육에 활용하였다.⁹²⁾ 그리고 2014년 6월에 국무조정실에서 하달한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⁹³⁾에 근거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공직자 안보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지침’⁹⁴⁾을 각 기관에 전파하여 안보교육의 목표와 추진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연 1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안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모든 공직자는 연간 1시간 이상 안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방법은 안보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및 안보현장 방문 등 체험교육, 사례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각 기관은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실적과 소속 공무원들의 안보교육 이수결과를 종합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나 8월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안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집합교육이나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사이버교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 안보교육은 행안부에서 매년 새로운 안보상황을 반영하여 교육 지침을 하달하고 기관별 연 1회, 개인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공직자 안보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안보교육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및 운용하고, 을지연습과 연계한 집합교육 및 체험식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등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2) 국민안전처(2015), “공직자 안보교육”, 『국가 비상대비 민방위저널』, 40: 12~13.

93) 국무조정실(2014.6),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

94) 행정안전부(2024),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지침”

바. 일반시민 안보교육 실태

그동안 안보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만 책임을 갖고 접근한다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⁹⁵⁾ 그러나 하이브리드전과 인지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전에서 안보문제는 비단 중앙정부에서만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도 관심 가져야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통일교육과 연계되어 일부 지자체나 지역통일교육단체가 안보문제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통일부와 국가보훈부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⁹⁶⁾ 제6조 3항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를 근거로 하여 ‘건전한 안보관 확립’이 포함된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주체이지만, ‘통일’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안보’ 관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기본법」⁹⁷⁾ 제22조 3항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에 근거하여 학생이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보전문가 특강, 전적지 순례, 안보체험프로그램 운영, 연수과정 운영 등을 통해 나라사랑교육을 시행해 왔다. 특히, 국방부는 2011년부터 민간학교에 대해 ‘나라사랑 마음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적극적으로 안보교육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⁹⁸⁾으로 인하여 2017년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은 폐지되었다.⁹⁹⁾ 현재는 ‘나라사랑 리더십 새싹 캠프’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프로그램과 지역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융합한 지역형 보훈문화제 등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¹⁰⁰⁾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안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안보 관련 단체나 지역사회 통일교육기관 등의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양한 교육

95) 김병문, 앞의 논문.

96)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

97)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98)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2017년 5월에는 국가보훈처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여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되었다.

99) 윤근학(2017.11.17), “‘색깔론’ 나라사랑교육 강의, 7년 만에 전격 폐지”, 『오마이뉴스』.

100) 국가보훈부(2024), “2024 국가보훈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대상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료를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보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단체에 편중된 안보교육이 진행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에 쉽게 휘말려 들고 결국 국론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염려가 있다.¹⁰¹⁾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일반시민 안보교육은 주로 6·25전승행사, 호국보훈행사, 국군의 날, 지상군페스티벌 등과 같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안보 및 호국보훈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념식과 같은 호국보훈행사가 전국적인 단위보다 중앙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¹⁰²⁾하여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안보 문제에 근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일반시민들이 안보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일안보교육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과 자발적인 참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안보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의 발전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 달기’이다. 그러나 최근 국경일에도 불구하고 수백 세대 아파트 가운데 태극기가 걸린 가정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국경일 태극기 제양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³⁾ 이는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극우 보수성향의 일명 ‘태극기부대’ 집회활동¹⁰⁴⁾에 따른 태극기 이미지 변화를 물었더니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35%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1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¹⁰⁵⁾ 따라서 시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특정 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101) 김병문(2017), 앞의 논문.

102) 김성영, 앞의 논문.

103) 김지훈(2024.3.1.), “3·1절 연휴 우르르 일본으로… 태극기는 전멸”,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48894&code=61121111&cp=nv>

104) 2020년 광복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도화선으로 지목된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 당시 이른바 ‘태극기부대’가 앞장섰던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극우성향의 정당이 태극기를 내세워 당원 모집에 나섰던 것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5) 정찬(2022.9.21.), “태극기 이미지 ‘긍정적’ 85%, ‘태극기부대’ 때문에 부정적 변화35%”, 폴리뉴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909>

V. 주요 선진국의 국민안보의식 함양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선진국의 국민안보의식 함양 사례

가.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1997년 의무 병역을 폐지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국방과 국가안보의 필수 개념을 소개하는 시민교육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미래의 시민인 학생들이 국가의 방위와 국가안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징병제의 종식은 시민, 국방, 국가안보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¹⁰⁶⁾ 즉, 안보교육을 시민교육과 연계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시민권 경로 제도’를 운용하여 시민들의 국방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군과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⁰⁷⁾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평시에는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로 양성함으로써 유사시에 국가를 위한 헌신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요컨대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하며, 그 방법으로 평시에 군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사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⁰⁸⁾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권 경로’ 제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국방교육’, 2단계 ‘인구조사’, 3단계 ‘국방 및 시민의 날(JDC)’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6) Tristan Lecoq, “Teaching about defence” <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en/revue/teaching-about-defence>

107) 길병욱·나미경·나태중·박재필(2014), “나라사랑 안보체험 및 교육시설 건립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용역연구 최종보고서.

108) 라미경, 앞의 논문.

〈표 5〉 프랑스의 ‘시민권 경로’ 제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활동	국방교육	인구조사	국방 및 시민의 날(JDC)
시기	초중등 및 대학교	16세	16~25세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과교육 • 국민저항 및 추방대회 •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 • 추모관광 • 국방학급제도 • 국방사관후보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불문, 거주지 행정 관서에서 의무적으로 인구조사 연명부에 등록 • JDC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조사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소집교육(1일) 참석 • 교육내용/프랑스어 평가 • 소집교육수료증 수여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수료증 필수)

출처: 기존 연구자료, 프랑스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1) ‘시민권 경로’ 1단계: 국방교육

시민권 경로의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에 의해 실시되는 국방교육이다.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은 국가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된 국방을 주제로 한 특정 교육을 받는다. 프랑스 청소년은 프랑스 교육부에서 계획하는 학교교육, 군대-청소년 위원회(CAJ)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방어 정신, 헌신 및 시민 정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군대, 청소년 및 시민권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 사회 문제 및 유산을 통해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문화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다.¹⁰⁹⁾

• 국방안보 관련 교과교육

프랑스의 학교에서 국방에 관한 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중학교 3학년은 1시간이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국방과 관련된 과목에 대해 알리는 데 있다. 이 사명은 역사, 지리, 도덕 및 시민교육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이버 방어를 포함한 오늘날의 국가 및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국방정책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국방의 일반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유럽(OSCE 등) 및 세계

109)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eveiller-a-lesprit-defense> (2024. 7. 18 검색).

(UN, NATO 등)의 기관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일부 학교는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과 때로는 재향 군인이 참여하여 이러한 과정을 보완한다. 고등학교는 2학년에 4-5시간 동안 프랑스군의 역사, 국방의 원칙,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¹¹⁰⁾

- 국민 저항 및 추방대회(concours national de la résistance et de la déportation, CNRD)

매년 국방부가 교육부, 국가보훈처, 추모재단 등과 함께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국민 저항 및 추방 대회(CNRD)’를 시행한다. 1961년에 창설된 이 대회는 레지스탕스의 영웅과 순교자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기억을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영속시키고 동시에 군대와 청년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년 전국 2,000개 이상의 학교, 해외 프랑스 학교 및 프랑스 사회동화기구(EPIDE)에서 온 4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여 개인 또는 그룹 작품을 발표한다.¹¹¹⁾

-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 (Les trophées «Héritiers de Mémoire»)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는 2016년 5월 20일 제정된 ‘청소년, 국방 및 국가안보 간의 연계 개발’ 의정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국방교육 프로젝트이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한다.¹¹²⁾ 이 행사의 목적은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각 지역이 학교 현장에서 전국 학생들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주제는 1870년 이후 현대 갈등의 기억, 군대와 청소년의 연계(군부대 방문, 국방 유산 등) 등과 관련하여 매년 새로운 주제가 부여되며, 개인이나 학교는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주제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매년 600개 이상의 기억의 계승자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현대 분쟁의 기억, 국방교육 또는 군대 유산과 관련된 작품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중에서 매년 3개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국방부 웹사이트

110) 김병욱·나미경·나태중·박재필, 앞의 논문.

111)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eveiller-a-lesprit-defense\(2024. 8. 10 검색\).](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eveiller-a-lesprit-defense(2024. 8. 10 검색).)

112) [https://www.info-militaire.fr/information-familles-militaires/loffre-jeunesse \(2024. 8. 10 검색\).](https://www.info-militaire.fr/information-familles-militaires/loffre-jeunesse (2024. 8. 10 검색).)

이트에서 방송된다. 다학제적 접근 방식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이든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그림 8〉 2024년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 시상식



• 추모 관광 (Le tourisme pédagogique de mémoire)

추모 관광은 국가, 특히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젊은 세대에게 기념 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시민교육이자 역사적 증거의 보존과 영토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이기도 하다.¹¹³⁾ 프랑스 국방부는 전쟁 관련 묘지, 국가적인 추모 장소, 국립 박물관, 전통 박물관 및 기타 기념 장소 등 프랑스와 해외에서 매우 풍부한 역사 및 기념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운영자인 국방부가 추모 관광을 위해 일하는 지역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협력하고 있다. 국방부와 관광담당부는 2004년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여 추모 관광을 구축했다. 국방부에는 앵발리드(les Invalides)의 아르메 박물관(Musée de l'Armée), 르 부르제(Le Bourget)의 레스파스 박물관(Musée de l'Air et de l'Espace), 트로카데로(Trocadéro)의 국립 해양 박물관(Musée National de la Marine)·브레스트(Brest)·포르 루이(Port-Louis)·로슈포르(Rochefort)·툴롱(Toulon)의 4개 항구 부속 박물관 등 3개의 국립 박물관이 있다. '프랑스 박물관'이라는 명칭의 혜택을 받는 이 3개의 공공시설은 연

113) <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fr/revue/le-tourisme-de-memoire-un-enjeu-national> (2024. 8. 10 검색).

〈그림 9〉 국방학급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들¹¹⁵⁾



• 국방사관 후보생 제도 (Cadets de la défense)

주변 학교와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군대의 센터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국방사관 후보생은 국가교육과 군대 간의 파트너십 시스템이다. 군대의 국방사관 후보생 센터는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시민, 스포츠 및 재미있는 활동을 조직한다. 후보생들은 주변 파트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 및 자원 봉사 교사의 감독을 받는다. 33개의 후보생 센터가 229개 학교와 협력하여 1,0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23%가 우선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있다. 33개의 후보생 센터 중 17개는 육군, 4개는 프랑스 해군, 5개는 공군 및 우주군, 7개는 국방부 및 서비스에 소속되어 있다.¹¹⁶⁾

115)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eveiller-lesprit-defense/enseignement-defense> (2024. 8. 10 검색).

116)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eveiller-a-lesprit-defense> (2024. 8. 10 검색).

2) ‘시민권 경로’ 2단계: 인구조사

모든 국민은 일정한 연령(16세)이 되면 의무적으로 인구조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남녀를 불문하고 16세가 되면 거주지 행정관서의 연명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가위기에 대비한 사전조치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젊은이들로 하여금 국가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시민권 경로’ 3단계: 국방 및 시민의 날 (JDC)

시민권 경로의 3단계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프랑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방 및 시민의 날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 JDC)’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JDC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날이다.¹¹⁷⁾ 16~25세의 모든 프랑스 남녀를 대상으로 전국에 산재된 250개 소의 안보소집교육장에서 1일 간의 안보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을 통해 국방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개인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국방의 원칙과 중요성, 군 생활에 대한 사전 소개, 프랑스어(모국어) 수준 테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군의 현역 간부와 예비군들로 교관을 편성하여 교육을 진행한다.¹¹⁸⁾ 국방 관련 교육내용은 각각 1시간짜리 3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듈 1은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방어의 필요성’, 모듈 2는 ‘최적의 대응: 우리의 방어체계’, 모듈 3은 ‘해야 할 역할: 시민 참여’로 구성된다.¹¹⁹⁾

1일 안보소집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소집교육 필증을 배부하는데, 이는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대입, 공무원, 운전면허 등)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공적인 증명서류가 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¹²⁰⁾ 프랑스 시민권 경로 제도는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나라사랑정신을 유

117) Par Léa Boluze(2023.12.8.),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 principe et déroulement”, <https://www.capital.fr/economie-politique/journee-defense-citoyennete-1390001> (2024. 8. 10 검색).

118) 길병욱·나미경·나태중·박재필, 앞의 논문.

119) Par Léa Boluze(2023.12.8.),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 principe et déroulement”, <https://www.capital.fr/economie-politique/journee-defense-citoyennete-1390001>(2024. 8. 10 검색).

120) 한용섭(2005), 『프랑스 국방개혁 2015분석』 (서울: 국방대학교).

자·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프랑스라는 국가의 이름 아래 결속시키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0〉 국방 및 시민권의 날 (JDC) 교육 장면¹²¹⁾



나. 싱가포르

1) 학교에서의 국가교육(National Education)

1996년에 싱가포르 교육부는 국가적 결속을 도모하고 학생과 젊은 싱가포르인들 사이에 국가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교육(National Education)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1997년 5월 17일 당시 부총리 리셴룽(Lee Hsien Loong)에 의해 국가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가교육은 ‘젊은이들을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으로 사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권 교육 계획’이다. 이러한 가치에는 애국심, 충성심, 국가 수호 의지가 포함된다.¹²²⁾ 국가교육의 명시된 목표는 ‘국가적 결속력, 생존 본능,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교육의 주요 목표는 6가지 메시지에 요약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다섯 번째 메시지에 국방, 즉 총력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²³⁾

121) <https://www.estrepublicain.fr/actualite/2020/01/20/journee-defense-et-citoyennete-mieux-armer-les-jeunes-pour-l-avenir>(2024. 7. 10 검색); https://www.lamontagne.fr/clermont-ferrand-63000/actualites/une-centaine-de-jeunes-hier-dans-les-locaux-du-92e-ri-pour-la-journee-defense-et-citoyennete_1733903/ (2024. 8. 200 검색).

122) <https://www.nlb.gov.sg/main/article-detail?cmsuuiid=44fa0306-ddfe-41bc-8bde-8778ff198640> (2024. 8. 18 검색).

123) 국가교육의 6가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는 우리의 조국이다. 여기는 우리가 속한 곳이다. 2. 우리는 인종적, 종교적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3. 우리는 능력주의를 지지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4. 싱가포르에 생계를 빚진 사람은 없다. 5. 우리는 스스로 싱가포르를 방어

특히, 싱가포르의 국가교육은 교과수업 이외의 체험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매일 국기계양식과 충성맹세(또는 서약), 주요 국가기관 방문, 국가의 핵심 연례행사 기념활동 등이 있다. 특히, 핵심 연례행사 기념활동은 총력방어의 날, 국제우정의 날, 인종화합의 날, 국경일의 네 가지 기념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총력방어의 날은 1942년 싱가포르가 일본에 함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15일에 개최된다. 이날, 학교에서 열리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싱가포르는 방어할 수 있고 방어할 가치가 있으며 싱가포르 국민 스스로가 싱가포르 방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제 우정의 날은 2학기 셋째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기념한다. 이날은 싱가포르와 이웃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날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람들 간의 우정과 협력의 정신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월 21일 인종 화합의 날은 1964년 이날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인종 폭동을 기념하는 날로, 학생들에게 사회적 분열은 사회를 약화시키며, 인종과 종교는 항상 싱가포르 사회의 잠재적 단층선이 될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날은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로서 국가의 성공을 되돌아보고 축하하는 날이다. 8월 9일 국경일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주권 국가로 부상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¹²⁴⁾

또한 학생들은 총력방어에 대한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총력방어 전략 카드 게임인 ‘도시의 수호자[ardians of the City II(GOTC II)]’를 통해 대화형 게임학습을 진행한다. 싱가포르의 위협과 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개발하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카드 게임은 학습을 강화하고 국가교육 및 총력방어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년 학교 간 총력방어 관련 애니메이션 및 스토리보드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디지털 애니메이션 클럽을 제작하여 총력방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해야 한다. 6.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124) Research Office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2022), “National Education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in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https://www.legco.gov.hk/research-publications/english/2022fs07-national-education-and-national-security-education-in-singapore-and-the-united-states-20221018-e.pdf> (2024. 7. 15 검색).

〈그림 11〉 도시의 수호자[Guardians of the City II(GOTC II)]게임



이와 함께 총력방어 배지 프로그램(Total Defence Badge Programme)을 시행하는데, 이는 중학교의 제복입은 그룹(Uniformed Groups, UG)¹²⁵⁾을 대상으로 총력방어(Total Defence)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UG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매년 30,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련의 재미있는 실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총력방어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싱가포르 방위에 대한 헌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⁶⁾ 이를 통해 중학교 UG 생도들이 UG는 물론, 학교 및 커뮤니티 내에서 총력방어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드 배지를 획득하려면 생도는 후배 생도를 위한 총력방어 수업을 설계 및 실시하거나, 커뮤니티 전반에 도움이 되는 총력방어 관련 실천 가치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행해야 한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레벨로 나뉜다. 모든 학생들은 Cadet Proficiency Badge Scheme에 따라 Total Defence Proficiency Badge를 취득하기 위해 3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UG 생도들이 총력방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총력방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브론즈, 실버 및 골드 배지를 획득하면서 총력방어의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고안된 수업 방식이다.

125) 싱가포르는 중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인격을 지도하고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9개의 제복 그룹(UG)을 운영하고 있다. UG는 소녀여단, 소년여단, 국립생도군단, 적십자 청소년, 스카우트, 소녀가이드, 세인트 존 브리케이드, 국민방위생도군단, 경찰사관후보생의 그룹이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괴외활동(co-curricular activity, CCA)는 모든 학생이 교육의 일부로 수행해야 하는 비학업 활동으로서 중학교에서는 필수이다. 중학생들은 클럽 및 동아리, 체육 스포츠, 제복 그룹(UG), 시각 및 공연 예술의 4가지 범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26) <https://cpbs.stjohn.org.sg/cpb-handbook-guidelines/group-1-welfare-service/total-defence-tdf111> (2024. 8. 20 검색).

〈표 6〉 제복입은 그룹(UG)의 ‘총력방어 배지 프로그램’

레벨	브론즈 레벨	실버레벨	골드레벨
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력방어에 대한 요약 • 총력방어 전략카드게임 • 새로운 카드 디자인 발표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력방어 내용 이해 • 친구에게 총력방어 전략카드게임 가르치기 • 활동성과 분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니어를 위한 총력방어 수업설계/실시 • 지역사회 총력방어 활동 계획/실행 • 활동성과 분석 제출

2)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방어의 날’

총력방어의 날(Total Defense Day)은 1942년 일본이 싱가포르를 함락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15일에 전국적으로 개최되며, 싱가포르의 총력방어에 있어 시민들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1984년에 도입된 ‘총력방어(Total Defense)’의 개념은 강력하고 안전하며 응집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싱가포르인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싱가포르 사회 전체의 국방개념이다. 처음에 총력방어는 군사방위, 민방위, 경제방위, 사회방위, 심리방위 등 5개 기둥으로 구성되었으나, 2019년에 디지털 방위(Digital Defense)가 여섯 번째 기둥으로 추가되어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증가하는 위협을 부각시켰다.

총력방어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 민방위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시민들은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총력방어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국방과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총력방어의 날은 국방부가 주관하여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주최한다. 국방부는 총력방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방위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운영한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이날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요활동은 군사퍼레이드 참석, 재향군인단체에서의 봉사활동, 군사박물관 방문, 애국영화 연속상영, 국기계양행사 등이다.

특히, 2024년은 총력방어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총력방어의 날과 연계하여 전 국민적으로 ‘SG Ready’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비상 상황을 경험하기 위한 식량·전기·물 공급 중단, 디지털 연결의 중단, 민방위 대비훈련 등이 실시되었다.¹²⁷⁾ 특히, 학생들은 전력 중단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선풍기나 조명 없이 수업을 경험

127) <https://www.sg101.gov.sg/resources/resource-packages/tdresources/>(2024. 7. 10 검색).

〈표 7〉 시민들이 총력방어의 날을 기념하는 주요활동(예)¹²⁸⁾

주요활동	활동내용
군사 퍼레이드 참석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총력방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참석하도록 함
재향군인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	재향군인 단체나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하루를 보냄
군사 박물관 방문	군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군대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특별 이벤트나 전시회를 개최함.
애국영화 연속 상영	친구와 가족을 모아 애국영화(다큐멘터리 포함)를 즐김.
국기게양행사	국기를 게양하여 국가와 군대에 대한 자부심과 지지를 보여주고, 지역사회의 단합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웃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함.

했으며, 음식 봉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즉석 식품을 먹었다. 이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가 어떻게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 수준의 도시 국가로 변모했는지 알아보고 국가가 직면한 제약과 위협을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했다.¹²⁹⁾

〈그림 12〉 Total Defence Day 2024 캠페인 포스터 및 비상식량 소개¹³⁰⁾



128) [https://www.holidaycalendar.io/holiday/total-defense-day\(2024. 8. 20 검색\).](https://www.holidaycalendar.io/holiday/total-defense-day(2024. 8. 20 검색).)

129) National Education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in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Research Office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FS07/2022. 1-26. <https://www.legco.gov.hk/research-publications/english/2022fs07-national-education-and-national-security-education-in-singapore-and-the-united-states-20221018-e.pdf> (2024. 7. 15 검색).

130) <https://www.sg101.gov.sg/resources/resource-packages/tdresources/>; <https://www.hci.edu.sg/news-and-events/news/totaldd2024/> (2024. 7. 20 검색).

다. 미국

1) 시민교육을 통한 국가정체성 강화

• 초등 및 중등 교육 - 공식 커리큘럼

미국은 전국적으로 완전히 부과되는 교육 커리큘럼이 없으며 커리큘럼 표준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시민권, 정부, 법률, 시사 및 관련 주제를 다루는 주 전체의 '시민 교육' 커리큘럼에 애국심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시민교육은 일반적으로 공통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정부는 대체로 교육정책과 학교 커리큘럼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지만, 미국의 헌법에 대한 교육은 예외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는 매년 9월 17일에 학생들을 위해 미국 헌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해야 한다. 이날은 헌법의 제정 및 서명을 기념하는 헌법의 날이자 시민권의 날로 지정된다. 그리고 본토 출생 시민과 귀화 시민 모두에게 미국 시민권의 특권과 책임을 존중하고 기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귀화한 시민에게 편지와 시를 낭송하고, 국가를 연주하고, 충성의 맹세를 서약하는 등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귀화식을 개최한다.(서약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외부세력에 의해 발생한 9·11테러에 대해서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사회와 분쟁, 역사적 충격, 영웅 및 서비스, 기념 및 기념주화, 홀로코스트, 9·11의 역사적 영향, 세계무역센터의 역사, 구조영웅 복구 및 정화, 개인(시민)과 9·11, 기념관 만들기, 애도 및 기념, 9·11의 의미를 주제로 설정하여 참여 및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나라를 위한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각급학교 학생들에게는 사례를 통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게 함으로써 유사시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의 이익 실현이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¹³¹⁾

131) 라미경, 앞의 논문.

• 초등 및 중등 교육 - 체험 활동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충성 서약을 낭송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서약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국기는 수업 시간 동안 또는 그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된다. 모든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 행사, 특히 고등학교 간 운동 경기 전에 국가가 연주된다. 이러한 행사는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현충일 등 중요한 연방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기념 공원, 역사적 기념물을 방문할 수 있는 현장 견학도 진행한다. 특히, 재향군인의 날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재향군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이며, 평화와 전쟁 중에 복무했거나 현재 복무 중인 모든 재향군인을 기리기 위해 기념된다. 이날 일부 주에서는 교과서 학습 및 시사 문제에 대한 토론 외에도 시민들의 재향군인의 날 기념활동과 통합하여 참여 학습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봉사 학습은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봉사를 경험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현실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학업능력 및 시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업과 현장학습을 결합한 교육전략이다. 동시에, 이는 학생들에게 강한 성취감을 제공하고 계속 참여하도록 이끄는 시민적 성향을 개발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에 대해 일부 유형의 학점을 제공한다.

또한 국방부가 관리하는 'JROTC(Junior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라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책임 및 특권을 인식하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시민권의 가치, 미국에 대한 봉사, 개인적 책임감 및 성취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인성 개발, 리더십 개발, 시민의식 훈련 등을 목표로 하는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제공하는 스카우트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시민 및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1991년 David L. Boren 국가 안보 교육법의 명령에 따라 시행된 '국가 안보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학부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대학원생을 위한 펠로우십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한 언어 및 지역의 연구 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임무는 미국 연방정부 인력(국가 안보/국방 직위에 근무)을 위한 외국어 및 문화 전문 지식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자금 지원의 대가로 최소 1년 동안 자격을 갖춘 국가 안보 직위에서 일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보상

미국은 명예훈장 수훈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원하면 사관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순직하거나 다친 국가유공자에게는 최고의 예우와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에게도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추모하는 기념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요컨대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은 강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저절로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¹³²⁾ 그리고 재향군인의 날에는 그 지역의 참전 군인들이 학교의 초대를 받아 교실에서 학생들과 자신의 체험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을 가진다.¹³³⁾

라. 이스라엘

수많은 아랍 국가들로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은 생존에 기반을 두고 있다.¹³⁴⁾ 따라서 다양한 국가정책 중에서 안보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국민안보의식도 높아 나라의 중요성과 정체성 교육에 대한 국가교육 체계와 국민적인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 안보교육의 특징은 성서에 나오는 스토리와 잦은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가족과 조상이 가진 스토리를 현장의 장소들과 연결하면서 애국심의 내용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이야기를 듣는 것과 현장에서 체험이 결합하면 감정과 정서를 만들어 내는데 바로 이 감정과 정서가 ‘조국’과 ‘애국심’의 개념을 만든다는 것이다.¹³⁵⁾

132) 길병옥·나미경·나태중·박재필, 앞의 논문.

133)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2010), “TEACHER RESOURCE GUIDE: Veterans Day”. www.va.gov/opa/vetsday/docs/2010TeacherGuide.pdf (2024. 7. 10 검색).

134) Itsik, R. (2020), “Israel’s defence ethos: military service as a turning point”, *Ruch Prawniczy, Ekonomiczny i Socjologiczny* 82(3): 299-310.

135) 국가보훈부(2016.1.4), “‘유대인’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셸라흐’와 ‘가드냐’”. 『나라사랑신문』. <https://www.narasarang.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 (2024. 8. 5 검색).

1) 이스라엘의 단합을 돕는 ‘셸라흐’ 교육

이스라엘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대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셸라흐(Sh'lach)’¹³⁶⁾이다. 셸라흐는 1948년 건국 이후 수십년 간 주변 여러 국가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국민과 국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 건국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체계이다.¹³⁷⁾ ‘셸라흐’는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의 역사를 개인 즉 국민과 연결시켜 국민과 국가의 결속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 땅’의 지리적 특징과 함께 ‘이 땅’의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교실에서의 수업과 체험의 결합을 통해 교육하게 된다.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7~12학년 학생들은 ‘셸라흐’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1주 1시간의 교실 강의를 편성돼 있고 한 달에 6시간, 1년에 2박 3일은 현장 체험교육이 진행된다.¹³⁸⁾ 셸라흐는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으로도 운영된다.¹³⁹⁾

셸라흐를 담당하는 교사는 별도로 운용된다. 셸라흐 교사는 이스라엘 연구 또는 지리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와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교사는 몇 주간의 특별교육 기간을 거쳐야 한다(2021-2021년에는 교육이 약 한 달 반 동안 지속됨).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2명의 교사를 포함하며 1명의 교사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큰 학교에는 5명 이상의 교사로 구성된 팀이 있다.¹⁴⁰⁾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셸라흐’ 과목 운영에만 연간 1억 세켈(한화 약 300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학생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이 약 3,000억 달러(세계 34위)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21% 정도임을 생각하면 이들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집중과 투자는 놀라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정부가

136) 셸라흐(Sh'lach)는 자연(nature), 땅(land), 사회(society)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약자이다. Paula Kahan-Strawczynski, L. Vazan-Sikron(2002), "Evaluation Study of the Continuing Training Program for Young Shelach Leadership", Research Report(RR-386-02). <https://brookdale.jdc.org.il/en/publication/evaluation-study-continuing-training-program-young-shelach-leadership/> (2024. 8. 5 검색).

137) 조영은(2023.2.8.), "이스라엘 단합 돕는 교육시스템 '셸라흐'...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중요성 확인", 『뉴스웍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956> (2024. 8. 10 검색).

138) 국가보훈부, 앞의 신문.

139) 정충신(2023.3.14.), "'국가정체성 교육' 국·영·수보다 중시...'강한 이스라엘' 비결", <https://m.news.nate.com/view/20230314n06173> (2024. 8. 5 검색).

140) <https://he.wikipedia.org/wiki/%D7%A9%D7%9C%22%D7%97> (2024. 8. 5 검색).

이렇게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치적 간섭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애국심의 고양’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목 설계를 하는데 완벽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더욱 튼튼하게 담보하고 있다.¹⁴¹⁾

셸라흐 프로그램은 국가안보를 위한 이론수업에 그치지 않고 역사 탐방, 학생들의 자발적인 교육 기획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주요 역사 현장을 탐방할 때 학생들은 나와 땅, 민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운다. 참관 수업 중 학생들은 “셸라흐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수업에서 배우고 그 역사를 체험활동에서 확인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다”고 말했다.

2) 마사다 요새 등 안보현장 체험활동

현재 이스라엘군에 입대하는 신병들은 신병교육 기간 중에 마사다 요새를 방문하여 그날의 각오를 다지도록 하고 있으며, 장교후보생(사관생도)들은 마사다 요새 현지에서 장교 임관식을 실시하고 있다.¹⁴²⁾ 마사다 요새 체험교육은 군인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학생들도 도보 행군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사다 요새에서의 체험교육을 마친 이스라엘의 학생들이 외치는 “Masada shall not fall again”는 나라의 소중함을 각인시킴으로써 학생 신분일 때는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앞장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재학 중인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포로수용소인 ‘아우슈비츠’ 방문 및 체험활동을 의무화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이 독가스실에서 살해된 현장을 직접 보고 수난의 역사를 배우게 함과 동시에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마사다 요새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부끄러운 역사와 나라를 잃은 민족의 억압받는 현실과 고통을 배움으로써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실수업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교육과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³⁾

141) 국가보훈부, 앞의 신문.

142) 길병욱·나미경·나태중·박재필, 앞의 논문.

143) 길병욱·나미경·나태중·박재필, 앞의 논문.

〈그림 13〉 이스라엘 장병들이 도보행군 후 마사다에서 훈련수료식 진행



3) 군대 체험을 위한 ‘가드나 군사학교’

가드나 군사학교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교육을 위해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기본적 취지는 군대를 미리 체험하기 위한 교육기관인데, 사실상 더 중요한 목적은 왜 군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¹⁴⁴⁾ 학생들은 단순한 의무로 군에 입대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입교하지만, 교육 이후에는 ‘군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교관은 “개인이 이 땅과 어떻게 연계되고 이 땅과 왜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자 노력한다”며 “직설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경험과 기억을 통해 느끼도록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살며 누구도 사회와 단절될 수 없다는 점을 능동적 체험을 통해 알게 하고자 한다”고 교육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이 교육은 4박 5일간의 합숙 훈련으로 실시되는데 전국의 3개 학교에서 전체 고등학교 중 30%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대인 나라사랑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144) 국가보훈부, 앞의 신문.

마. 시사점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 등의 선진국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국가별로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현실과 국민적인 정서, 안보의식 고취 방안들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안보교육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총력안보 차원에서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1984년 총력방어(total defense)를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매년 ‘총력방어의 날’을 시행하여 전 국민이 국방안보 관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는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방위 날’ 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고 유관기관의 행사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총력방어’와 ‘총력방어의 날’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민성 교육 차원에서 국가안보의식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시민권 경로’ 제도를 통해서 인구조사 및 1일간의 안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이수증이 모든 공공기관의 시험과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동체인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자 격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학교의 시민교육 과정에서 안보교육을 시민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안보교육이 별도의 과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안보교육이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교육이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며 핵심이라는 점이다. 학교교육은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의무과정으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셀라흐’를 시행하여 국가 정체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1997년부터 애국심, 충성심, 국가 수호 의지가 포함된 국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역시 1997년 젊은이들에게

국방과 국가안보의 필수 개념을 소개하는 시민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단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교육 시스템 속에서 안보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사현장과 연계된 체험식 안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국가의 수난, 저항 등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 정체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학습활동이다. 프랑스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전쟁 관련 기념관이나 유적지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추모 관광’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마사다, 통곡의 벽, 아우슈비츠 등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잦은 전쟁 속에 만들어진 애국적 스토리를 현장의 장소들과 연결하면서 조국과 애국심의 감정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애국적 스토리와 역사현장이 무수히 많아서 이를 잘 개발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안보교육에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게임과 경연대회를 활용하여 안보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안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총력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총력안보 카드 게임’을 활용하여 학교별 경연대회를 펼치고 있으며, 제복그룹(UG)의 ‘총력방어 배치’ 경연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미술대전’이나 예비군안보교육 동영상 시나리오 공모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여서 국방부와 학교가 연계되어 시행되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게임 및 경연대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가보훈과 연계하여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헌신한 영웅과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들을 존경하고 예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을 단순히 재향군인들만의 기념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재향군인을 위한 행사 및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종 보훈행사 및 재향군인의 날 등을 기념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방부 및 군부대와 연계된 안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국방부이다. 그래서 프랑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국방부 및 군부대와 연계하여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 추모관광, 국방학급 제도 등을 국방부가 주관하여 교육부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민권 경로’의 3단계인 ‘국방 및 시민의 날(JDC)’ 프로그램을 국방부가 계획하여 예비부대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방어의 날’ 활동을 국방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서와 협력 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JROTC 제도나 이스라엘의 ‘가드나 군사학교’ 운영도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방부와 군부대의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덟째, 학교 안보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교사를 운용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학교에서 ‘셀라흐’를 진행할 전담 교사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사전에 한 달 반 정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통일 교육이나 안보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으며, 일부 교사가 겸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점에서 참고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홉째, 각종 기념일과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학생들이 총력방어의 날, 국제우정의 날, 인종화합의 날, 국경일의 네 가지 기념일을 중심으로 총력방어의 중요성과 국가 정체성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기념일과 연계하여 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보의식 발현 사례와 교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노르웨이 싱크탱크인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지역 여론조사 기관 인포 사피언스를 통해 18~55세 우크라이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¹⁴⁵⁾ 이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75%는 전쟁 희생자를 돕기 위해 자원병으로 복무할 의향

145) 자세한 데이터는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블로그 참조. <https://blogs.prio.org/2022/03/will-terror-deter-or-motivate-ukrainian-resistance-survey-evidence-from-besieged-ukraine/> (2024. 10. 2 검색).

이 있다고 답했고, 80%는 우크라이나군에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47%는 요새화된 방어 진지에서 전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49%는 러시아군 또는 친러시아 세력에 대한 공격에서 전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여성과 남성 중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비폭력 저항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 대 81%로 거의 동등했다. 즉 우크라이나 국민 80%가 남녀의 구별 없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저항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2023년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국 연루 전쟁 발발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는가’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62%가 ‘끼꺼이 싸우겠다고’ 응답한 반면, 러시아 국민은 절반에 불과한 32%만이 싸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전쟁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은 전쟁에서 강한 응집력과 참여로 이어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¹⁴⁶⁾

가장 먼저, 저항 의지의 구심점이 된 것은 전쟁의 최고지도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다. 키이우(Kyiv)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위 작전이 거세지자 미국은 그에게 탈출을 제안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미 키이우를 탈출했다고 SNS를 통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하지만 <그림 14>에서 보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 거리에서 자신의 각료들과 함께 끝까지 키이우에 남아 국민들과 항전하겠다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좌절하지 않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146)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국가 응집력과 회복력의 주요 사례로 부각되어 왔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칭송되어 왔으며 그러한 의지의 원천은 이미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또한 이러한 강력한 단결력과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인 국민의 상당 부분이 국외로 도망가거나 국내에 숨어 지내는 방법으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크라이나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조국을 위해 싸우기를 꺼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들에 대한 징집의 어려움으로 2023년 말 기준 우크라이나 군인의 평균 연령은 43세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Sandor Fabian(04.23.24), “The Illusion of Conventional War: Europe Is Learning the Wrong Lessons from the Conflict in Ukraine”, <https://mwi.westpoint.edu/the-illusion-of-conventional-war-europe-is-learning-the-wrong-lessons-from-the-conflict-in-ukraine/> (2024. 10. 2 검색).

〈그림 14〉 젤렌스키 대통령, SNS를 통해 항전의지를 밝히는 동영상¹⁴⁷⁾



또한, 〈그림 15〉와 같이, 젤렌스키는 전선 곳곳을 시찰하며 장병 및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항전을 독려했다. 그는 전투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찾아 장병들의 전투를 독려하고 야전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으며, 장병들을 돕다가 다친 시민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면서 이들에게 경의를 표했고, 이에 부상당한 장병과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위험하고 아픈 현장에서 강력한 전쟁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¹⁴⁸⁾ 전쟁 시작부터 일관되게 입었던 그의 국방색 차림의 복장은 우크라이나 저항정신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

147) <https://www.youtube.com/watch?v=U5e9ryh1Gys>(2024. 10. 2 검색).

148)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9288&cid=60344&categoryId=60344>(2024. 10. 3 검색).

〈그림 15〉 야전병원과 전선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젤렌스키 대통령¹⁴⁹⁾



이와 함께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의 저항정신과 리더십도 빛났다. 키이우의 시장이자 우크라이나의 복싱 영웅인 클리치코(Vitali Klitschko) 시장은 군복 차림으로 키이우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폈고, 〈그림 16〉처럼 직접 기관총 사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함으로써 저항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과거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수도인 키이우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방탄조끼를 입은 채 향전을 독려하여 우크라이나 ‘항전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림 16〉 기관총 사수가 된 키이우 시장과 군복 입은 포로셴코 전 대통령¹⁵⁰⁾



149) https://www.newsis.com/view/NISI20220314_0000950306(2024. 10. 3 검색);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1&no=1128262>(2024. 10. 3 검색).

150) [instagram.com/vitaliyklitschko](https://www.instagram.com/vitaliyklitschko); <https://news.zum.com/articles/74611890>(2024. 10. 3 검색).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총화단결하였고, 물러서지 않는 저항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림 17>에서와 같이, 러시아군 기계화부대의 전진을 맨몸과 농기계로 막아서고, 화염병과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러시아군의 공격에 맞서는 시민들의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림 17> 온몸으로 탱크를 막고 화염병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¹⁵¹⁾



심지어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에서 보는 것처럼, 목총을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 79세 백발 할머니의 모습, ‘민병대’에 자원입대한 미스 우크라이나의 충을 든 모습, 우크라이나 킥복싱·바이애슬론·축구·테니스 등 유명 운동선수들의 자원입대 모습¹⁵²⁾, 전쟁 당일 급히 결혼식을 올리고 자원입대한 신혼부부, 나라를 지키겠다고 혼자서 부대를 찾아온 11살 소년 등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정신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키이우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기술자와 용접공이 노획된 러시아군 장비를 정비하여 우크라이나군으로 보내는 장면, 농민들이 유기된 러시아군의 장갑차 등을 노획하여 우크라이나군에 인계하는 장면, 아조우스탈의 지하에서 2,000여 명의 시민이 며칠째 온갖 폭격과 식량 등의 부족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 등은 왜 우크라이나가 열세한 국력과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격멸하는지를 보여준다.¹⁵³⁾

151) https://www.youtube.com/watch?v=Hqb_GeidFEo(2024. 10. 2 검색);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8601018> (2024. 10. 2 검색).

152) 킥복싱 세계 챔피언을 지낸 우크라이나 킥복싱 선수 세르히 리시우크가 자원입대하여 우크라이나 최전방을 지키다 안타깝게도 지뢰를 밟아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11/26/5U52TANUTFDJJKBYJUZZSZVGMU/ (2024. 10. 2 검색).

153) 박계호, 앞의 논문.

〈그림 18〉 군사훈련을 받는 79세의 할머니(좌)와 자원입대한 미스 우크라이나(우)¹⁵⁴⁾



〈그림 19〉 우크라이나의 킥복싱·바이애슬론·축구·테니스 선수들의 자원입대



〈그림 20〉 자원입대한 신혼부부(좌)와 자원입대를 위해 부대를 찾은 11살 소년(우)¹⁵⁵⁾



15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feb/19/ukraine-capital-is-caught-between-normality-and-horror-in-shadow-of-war-kiev-russia>(2024. 10. 2 검색); <https://dailian.co.kr/news/view/1087861>(2024. 10. 2 검색).

155)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2/02/27/20220227500086> (2024. 10. 2 검색);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322/112474818/9> (2024. 10. 2 검색).

이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민군을 형성하여 군사작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연계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급조 장애물을 구축하여 도시를 요새화했고, 덕분에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공세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도시로 잠입한 러시아 인간정보 활동을 색출하여 러시아군의 정보 획득을 차단하였다. 또한, 정규군에게 보급 지원, 급식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기세와 작전 템포 유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직 판사와 이발사, 경비원 등 전쟁만 아니었다면 동네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을 사람들이 시민군이 돼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 군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드론부대와 IT 부대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¹⁵⁶⁾ 민간 드론부대는 2014년 돈바스 전쟁 이후 민간 드론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고,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지상 부대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접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IT 부대는 정부 주도로 민간의 IT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2024년 2월 27일에 창설하였으며, 이후 국내 및 어나니머스(Anonymous)와 같은 국제 해커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30만 명 이상의 연합부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격퇴 하면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네트워크와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DDoS 공격 등을 수행하는 등 사이버 영역에서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

또한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귀국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고, 전쟁 발발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인 영토방어군(TDF)에는 13만여 명이 자원입대했다.¹⁵⁷⁾

이와는 달리, 러시아는 2022년 9월 21일 부분동원령이 내려지자 이를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젊은이들이 줄지어 국경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귀국 모습과 대비되어 국제적인 뉴스로 떠올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업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는 2022년 9월 25일 러시아를 떠나려는 승용차와 트럭이 조지아, 몽골 등의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16km가량 줄지어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그림 22>와 같이 공개했다. 더구나 9월 22일, 러시아

156) 정진섭, 앞의 논문.

157) <https://v.daum.net/v/20220227195436963> (2024. 10. 2 검색). 본문으로 올리기

〈그림 21〉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국하려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행렬¹⁵⁸⁾



〈그림 22〉 동원령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러시아 차량 행렬¹⁵⁹⁾



38개 도시에서 부분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어져 저녁까지 1,311명이 이상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¹⁶⁰⁾ 체포된 이들 중 최소 502명은 수도 모스크바, 524명은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왔다. 또한 10월 9일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자 3주일 만에 러시아 남성 30만여 명이 카자흐스탄, 핀란드 등의 주변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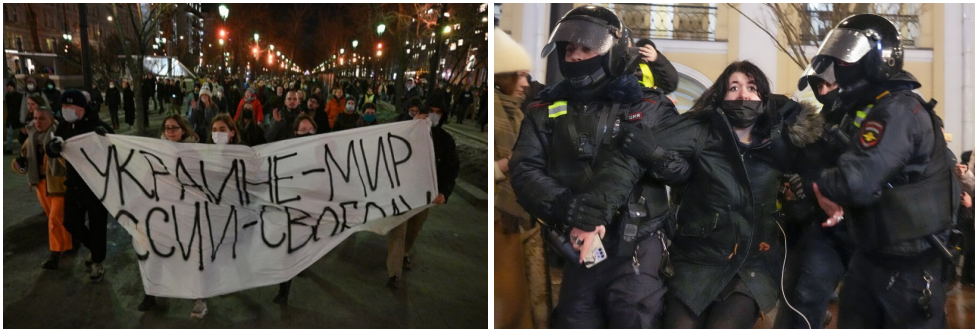
158) <https://m.yna.co.kr/view/IPT20220508000009365>(2024. 10. 2 검색); <https://news.zum.com/articles/74062697>(2024. 10. 2 검색).

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5399?sid=104>(2024. 10. 2 검색);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2/09/29/20220929500001>(2024. 10. 2 검색).

160) 박효재(2022.9.22), “러, 군동원령에 전국 곳곳 반대 시위…“전쟁, TV에서 집안으로 들어왔다”,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9220934001#c2b>(2024. 10. 2 검색).

또한 <그림 23>과 같이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전 여론이 확산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반전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체포에 나섰지만 시위는 러시아 전역으로 번졌다. 2022년 2월 26일 러시아 비정부기구(NGO) 'OVD-인포'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 시위 참가자 3,093명이 체포되는 등 거센 탄압에도 불구하고 6,000명이 넘는 의료계 종사자와 건축가, 엔지니어 3400명, 교사 500명 등이 러시아 정부 비판 서한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가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에 나서야 하는가'란 질문에 18~24세 연령층에서 찬성 답변은 34%에 그쳤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안보의식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위대¹⁶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 국민들에 비해 높은 안보의식 수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략에 대응하여 싸우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점차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 이전인 2012년 우크라이나 조사국은 '영토 보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33%에 그쳤다. 2017년에는 이 수치가 54%로 증가했다. 2020년에도 59%로 계속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우크라이나 사회에 일어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돈바스 지역에서의 반정부 투쟁이 우크라이나 국민

16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7/112067675/1>(2024. 10. 3 검색);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2742.html>(2024. 10. 6 검색).

들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민족의식, 애국심 등 안보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¹⁶²⁾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시행한 학생들에 대한 ‘애국교육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애국주의 교육은 학교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특히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정부에 의해 끈질기게 수행된 과외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청소년 ‘민족애국주의 교육’ 개념은 2009년 말에 채택되었는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애국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2015년 말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대통령의 법령에 따라 새로운 ‘2016-2020 아동 및 청소년의 국가 애국 교육 전략’이 채택되었다. 애국주의 교육의 핵심은 청소년의 ‘민족애국 캠프’와 과외 군사 스포츠 경기를 조직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족애국 캠프’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서 애국 캠프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자금(15,000달러)을 할당한다. 이 캠프는 전술 훈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역사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애국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군사애국주의 게임인 “Jura”(Falcon)가 이 과정의 중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Jura 게임은 4개의 단계가 있으며 ‘전쟁의 깡패’와 ‘불 끄기’, ‘행진 및 노래 경연’, ‘민족 디스코 파티’와 같은 다양한 대회와 이벤트를 포함하는 범 우크라이나 게임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동부 돈바스 반정부 투쟁 등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애국교육 전략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VI. 국민안보의식 강화 방안

1. 법적 근거 확립 및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안보교육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통일교육지원법>이다. 이 법률의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162) Bukkvoll, T., & Steder, F. B. (2023). “War and the Willingness to Resist and Fight in Ukraine. Problems of Post-Communism” 71(3): 245-258. <https://doi.org/10.1080/10758216.2023.2277767> (2024. 8. 2 검색).

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 안보교육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명칭을 <통일교육지원법>으로 명명함으로써 안보교육보다는 통일교육이 더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률의 내용에서도 안보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제시된 ‘건전한 안보관’의 용어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통일교육과 관련된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안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을 반영한 법률의 명칭과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안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의 명칭과 영역의 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은 <표 8>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표 8〉 안보교육의 법적 근거 확립 위한 방안

방안	방안 1	방안 2	방안 3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 수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개정: <통일안보교육지원법> • 조문개정: 안보교육 범위, 내용, 방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개정: 안보교육범위, 내용, 방법 구체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교육의 개념, 범위, 내용, 방법, 주관부서, 강사운영, 예산 등을 구체화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국회심의·의결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재가, 법제처 심의로 개정이 용이함 • 기존의 명칭으로 안보교육의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 구속력이 약함 • 안보교육을 구체화하여 시행하는데 용이함

첫 번째 방안은 법률의 명칭과 영역에 대한 개정이다.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을 <통일안보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고 안보교육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률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는 작업으로서 정치적인 논의와 타협,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만일 여야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안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명칭과 내용의 개정에 성공한다면 국민안보교육을 활성화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 안보교육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

람들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확산시키고, 국민적인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법률의 명칭과 내용의 개정은 필요하지만, 개정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통일안보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대통령 재가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서 개정이 가능하다. 즉, <통일안보교육지원법>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법에서 정의한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 교육영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것은 보다 수월하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을 어떻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보교육의 개념, 범위와 내용, 교육대상과 주관부서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한다면 안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방안은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하달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2014년에 국민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하여 하달한 행정 문서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여전히 이 문서를 근거로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의 안보상황을 바탕으로 수립된 문서로서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재작성하여 하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문서는 안보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서 정부 부처별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보교육과 관련되는 정부부서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안보교육의 개념과 범위, 내용, 방법, 주관부서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안보교육 관련 법령 개정은 정치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기존의 법령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 및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어서 시행령을 보완한 후에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소관 부처의 명확화와 협력체계 강화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전통적·국가적 군사위협이 감소하고, 비전통적·초국가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국가의 비상대비업무 체계가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위주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2008년에 해체되고 국가비상기획업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되었다.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상대비와 민방위는 1개국(비상대비정책국)에 불과할 정도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었다.¹⁶³⁾ 한마디로 말해서 전통적인 군사위협에 대비한 국가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약해졌고, 이러한 기능의 약화는 안보교육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국민안보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과 국무조정실의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2014)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은 주로 통일교육 위주로 통일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은 각각의 부처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보훈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국민 안보교육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교육 협력체계 구축,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방법 개발, 교육시행 실태 감독 및 평가 등 일련의 안보교육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적인 전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보교육을 컨트롤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주관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주관 부서 명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통일·안보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 통일안보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 정부-지자체-학교-군대-시민단체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콘텐츠와 교육 방법의 개발, 감독과 평가 등을 주도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다만, 이러한 형태가 범정부적인 안보교육 컨트롤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구성 인원을 둘러싼 정치적·이념적인 갈등과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통일안보교육의 개념 및 내용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국가비상대비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안보의 전문성을 지닌 부서는 국방부이지만 군사적 임무가 우선인 국방부가 국민안보교육을 주도하

163) 정진섭·강용구, 앞의 논문.

는 것은 국민적인 거부감과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비해 행정안전부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비롯하여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을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반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교육 실태를 감독 및 평가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교육 콘텐츠 및 교육방법의 개발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되, 유관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방안은 안보 및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 안보교육의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효과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관급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동급의 장관급 정부부처를 통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을 <통일안보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통일교육에 안보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공무원, 군대,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통일부장관 직속의 통일교육위원,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 지역 통일교육센터, 72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민간(사)통일교육협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이 확대될 경우, 통일교육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 진영 간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는 지자체와 학교, 민간단체 등이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통일안보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통일안보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방안은 통일안보교육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각각의 주체별로 특성에 맞춰 통일안보교육을 계획하고, 정부 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지역의 안보현장을 개발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안보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정부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에서 필요한 예산, 콘텐츠 및 강사, 시설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안보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공감대가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3. 안보와 안보교육을 위한 대전략 구축

가. 안보에 대한 개념적 접근: ‘총력안보(Total Security)’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에 전통적 안보,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¹⁶⁴⁾ 新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서방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 및 안보정책과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쟁 전에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총력방어 계획과 실행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국방 및 안보전문가들은 ‘총력방어’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되었다.¹⁶⁵⁾ 앞으로 국가의 총력방위체제 개념의 중요성은 부각될 것이며, 국가의 총력방위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것으로 본다.¹⁶⁶⁾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 국민안보교육은 군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총력을 모아 대비하는 ‘총력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방위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통합방위는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6항에 통합방위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에 대한 국민의 안보교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안보교육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총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안보교육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보다 군사적 위협이 훨씬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력방어(total defense)’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총력방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

164) 양승봉(2023),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1(1): 204-221.

165) Giorgi Shaishmelashvili(2023), “Total defense: The strategy on how to defeat strong”, PMC Research Center Policy Paper, <https://pmcg-i.com/publication/total-defense-the-strategy-on-how-to-defeat-strong/> (2024. 7. 3 검색).

166) 권삼(2022), 앞의 논문.

나. 안보교육을 위한 접근 전략: ‘Two-Tract’ 전략

우리나라의 현실적 안보위협은 바로 북한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적 위협이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인 동시에 통일을 이룩해야 할 동족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특수한 존재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안보교육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보교육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전, 북한과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반공교육’, ‘안보교육’이 통일교육보다 우선 순위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보교육은 오히려 안보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실시되어 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¹⁶⁷⁾ 국가에 의해 독점된 안보논리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통일 열망이 높아지면서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안보교육’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려는 ‘통일교육’으로의 전이가 심화되었다.¹⁶⁸⁾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보교육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¹⁶⁹⁾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안보교육이든, 통일교육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더구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로 볼 때, 통일과 안보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이다. 문제는 통일과 안보의 개념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동질감과 협력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안보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충돌과 배제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여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적 충돌과 분열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안보와 통일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과업 완수’라는 측면과 ‘안보태세 구축’이라는 측면은 양립불가능한

167) 김종영·황중호·이규용(2008), “국민안보의식 제고방안”, 『전략논단』, 9: 21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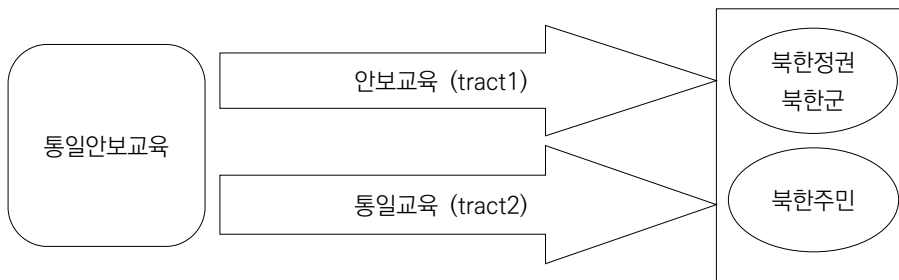
168) 차승만·이현숙, 앞의 논문.

169) 이광현, 앞의 논문.

이중적 과제가 아닌 ‘동시적·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설정한 통일정책에 부합되는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확고한 안보태세의 구축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통일을 위한 기본과제가 안보태세 구축인 것이다.¹⁷⁰⁾ 따라서 분단된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안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존재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교육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전체를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보다는 대상을 나누어 인식하는 ‘분리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즉, <그림 24>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을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투 트랙(Two-tract)’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교육의 방향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현실적 위협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통일교육의 방향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와 통일을 대립적인 이해가 아닌 균형과 융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에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24> 통일안보 교육을 위한 ‘Two-Tract’ 전략



170) 김구섭(1997), “국민안보의식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사회교육을 위한 국민안보의식 구축방안 세미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명칭과 영역을 확장하여 추진해야 한다.¹⁷¹⁾ 통일안보교육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¹⁷²⁾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의 역량을 배양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무력 통일의 의지를 포기하고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부-학교-군-민간의 종합적인 안보거버넌스 구축

국민안보교육은 안보의 주체들인 정부, 지자체, 군대, 학교, 공공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룰 때 보다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안보교육에 있어서 교육 주체 간 지식 및 정보의 공유를 위한 종합적인 안보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각 주체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방법 및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¹⁷³⁾ 따라서 국민안보교육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학교-군-민간’의 종합적인 안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정부-지자체 차원의 발전 방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국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범국민안보교육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국민안보교육을 기획·실행·지원·평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앞에서 제안한 것처럼, 국민안보교육 관련 소관 부처를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소관부서는 국민안보교육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며, 안보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하고, 안보교육 관련 법령 개정, 안보교육 관련 기관과 강사의 운영,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보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관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를 비롯

171) 조영희·김훈희, 앞의 논문.

172) 차승만·이현숙, 앞의 논문.

173) 길병욱·나미경·나태중·박재필, 앞의 논문.

하여 안보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은 학생, 군인 및 예비군, 민방위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지원소요를 도출하고 관련 예산편성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지자체이다. 안보교육은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민간단체 간에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접근이 이뤄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 속에 지역 통일안보교육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통일안보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¹⁷⁴⁾ 즉 지자체와 대학, 통일교육센터, 통일운동 시민단체, 언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통일안보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안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안보현장 발굴 및 벨트화, 안보현장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기념일 및 보훈활동과 연계한 학생과 시민의 참여, 여성 민방위대 확대 및 시민의 민방위날 훈련 참여 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나. 학교 차원의 발전 방안

1)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학교 안보교육 강화

앞장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안보의식 함양 사례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안보교육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교육이 별도의 과목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시민의 책임과 의무로서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교과과정이나 체험학습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는 학교의 공식 커리큘럼 속에 시민교육을 포함하여 국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시민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도 예외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여준 강인한 애국심의 기초는 전쟁 이전에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학교 애국교육¹⁷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8월 사회학 그룹 ‘Rating’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83%가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¹⁷⁶⁾ 이

174) 김병문, 앞의 논문.

175) 우크라이나의 애국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https://caucasusedition.net/conflict-and-militarization-of-non-formal-education-in-ukraine-part-3/> (2024. 7. 4 검색) 참조.

176) Dynamics of the patriotic moods of Ukrainians, 21.08.2019. <https://ratinggroup.ua/>

를 통해 애국심은 시민교육과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으며 그 일부라는 것이 입증되었다.¹⁷⁷⁾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교 안보교육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안보교육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과목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가치로서 시민교육 속에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민교육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접근하게 되면, 안보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치적인 논란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안보현장과 스토리를 연계한 ‘기억 여행’

체험이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으로 오감을 통해 외부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기존의 기억에 새로운 것을 통합하여 경험을 재구성하게 된다. 경험에 의한 자료는 다른 감각과 시각, 감정을 수반하고 기억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활동이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⁸⁾ 따라서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기억 여행’ 또는 ‘추모 여행’이다.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국가 형성과 전쟁, 저항정신을 상징하는 안보현장과 기념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현장에 국가의 중요성과 애국적 영웅 스토리 등을 연계시켜 학생들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 및 보훈기관에서 안보현장과 스토리가 연계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기억 여행 코스로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못지 않게 수많은 외침 속에서 형성된 애국적 안보현장과 저항정신을 보여 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지자체는 이러한 현장들과 관련된 감동적 스토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서 학생들이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체험 공간을

en/research/ukraine/dinamika_patrioticheskikh_nastroeniy_ukraincev_avgust_2019.html (2024. 7. 4 검색).

177) Vanovska, I. (2016), “Patriotism and spirituality at the present stage in ukrainian edu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1): 50-60.

178) 길병욱·나미경·나태중·박재필, 앞의 논문.

조성하는 등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억 여행’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와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보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게임을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안보교육

프랑스의 ‘기억의 계승자 트로피’나 싱가포르의 ‘총력방어 전략 카드’ 게임(Guardians of the City), ‘총력방어 배지’ 프로그램 등은 MZ세대 학생들이 안보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화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¹⁷⁹⁾ 교육방법의 사례들이다. 특히, 프랑스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억의 계승자’ 경연대회는 기억해야 할 주제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우수작품을 다큐멘터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시행하는 총력안보 전략 카드게임의 방식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신전력 강화 보드게임인 ‘지상 최대의 작전’이 좋은 사례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총력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총력안보 게임’ 또는 ‘민방위 게임’ 등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장병 및 예비군, 민방위대원들에게 활용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생들에게도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게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 등에 전국적으로 게임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4) 국가기념행사와 연계된 애국심 함양

싱가포르에서는 국가 기념일 중에 4대 기념일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별로 교장과 교사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3·1절, 6·25전쟁 기념일, 광복절, 국군의 날, 순국선열의 날 등의 기념일은 국가

179) 게이미피케이션은 ‘Game’에 ‘~化(~fication)’가 붙어 생긴 단어로 우리말로 풀어보면 ‘게임화’가 된다. 게임화는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의 중심이 되며 학습 목표를 놀이하듯이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지연(2020), “정신전력교육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적용방안”, 『정신전력연구』, (61): 57-99.

의 소중함을 느끼고 애국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날을 기념하여 태극기 게양, 애국가 제창,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영상 시청, 글짓기, 추모행사, 현장견학, 봉사활동 등의 참여 학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 통일안보교육 전담교사 양성 및 운용

이스라엘은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셀라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셀라흐 전담교사가 1~5명 정도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역사 및 지리와 관련된 학위를 갖춘 인원 중에서 선발되며, 한 달 반의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 통일안보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를 추진할 전담교사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겸직 형태로 운영되어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만, 학교장 및 교사들의 무관심과 전문성 결여, 의지 및 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학교에서 통일안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교사 및 준 전담교사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¹⁸⁰⁾ 이를 위해 통일안보 분야의 학위나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전담교사로 선발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이나 국방정신전력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나 승진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하며, UN군에 참여한 6·25 참전국의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들, 선진국 안보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수시로 안보교육을 위한 해외 연수나 방문 프로그램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¹⁸¹⁾

다. 군(軍) 차원의 발전 방안

1) 안보교육 교재의 보편성 확보

우리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안보교육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자료이다. 사실,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군사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안보교

180) 김병문, 앞의 논문.

181) 안성호(2011), “가정-학교-사회 연계 ‘안보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교육』, (677): 18-24.

육의 내용과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하이브리전의 시대에 국가안보는 더 이상 군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총력안보이다. 따라서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재의 내용을 집필함에 있어서 민주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의 문제를 바라보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책임과 의무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 집필진을 민간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교재를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국민안보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국민안보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은 국가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이다. 프랑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군부대에서 국민안보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방부나 국방정신전력원은 현역장병들의 정신전력 육성을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해 왔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요청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과 보편성, 전문성이 결여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방부 및 국방정신전력원은 장병들의 안보교육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학생, 예비군, 민방위,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국민안보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국방정신전력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통일안보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안보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3) 학교와 연계한 안보현장체험 프로그램 발전

프랑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학교와 군부대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안보교육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안보교육을 위한 현장 학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현장이나 군부대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의 유산,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견 등으로 군대가 민간교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군의 안보

교육을 시민교육과 배치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이 거부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년 육군에서 시행하는 지상군 페스티벌, 6·25전쟁 3대 전승행사, 공군 블랙이글스 시범비행, 해군의 함정 개방행사 등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지역 학교와 연계된 안보현장체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안보전문강사 자격증 제도 운용

국가적으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배경지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장기 복무를 하는 군 장병들은 안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춘 자원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안보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군의 정신전력교육은 동영상과 교재를 바탕으로 토의·발표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전문적인 안보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민간 전문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더라도 안보교육 전문강사로 활약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국방정신전력원)에서는 안보교육 전문강사로 활약하기를 원하는 장병들에게는 군 복무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여 양성하고, 현역 장병들을 위한 교육도 담당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안보전문강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역 후에 학교, 민방위, 예비군, 일반시민 등의 국민 안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5) 예비군 안보교육의 발전

가) 시민으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X'에 'HeJjyeo@He_Jjyeo'가 예비군 안보교육 동영상과 관련하여 “예비군 안보교육 보며 든 생각이지만, K-예비군이니 폴란드 무기 수출 방산업 성장이니 유튜브 국방 영상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만들기보다, 우크라이나군 모병 영상¹⁸²⁾처럼 시민으로서 헌신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

182) 개인에 초점을 맞춘 우크라이나 모병 광고 동영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남동생입니다. 저는 곧 결혼합니다. 나는 샤흐타르 FC팬입니다. 영업실장입니다. 건설 현장 감독입니다. 프로그래머입니다. 전 결혼식장에서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유라 아저씨입니다.

기도 하네”라는 글을 올렸다. 즉, 예비군 안보교육동영상이나 교안은 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부심, 국가안보의 중요성, 예비군의 역할 등과 같은 국가의 가치나 애국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들은 이러한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MZ세대들이다. 국가안보가 나의 존재, 가족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무엇을 해야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안보교육 동영상이나 교안은 시민으로서 개인에 초점을 맞춰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예비군은 익명의 군대가 아니며, 반드시 누군가의 아들, 아버지, 사촌과 연관된 곳”이라는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⁸³⁾

나) 현역장병과 연계된 안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재 예비군 안보교육은 현역장병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정훈계통이 아니라 예비군 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물론, 해당부서에 정훈장교가 보직되어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주관하는 부서는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이다. 따라서 예비군 안보교육 관련 동영상이나 강의 교안을 제작하면서 현역장병 안보교육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훈계통에서는 MZ세대 현역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숏폼 및 웹드라마 형식의 동영상 활용, 게임식 교육프로그램, 공연과 강의의 융합식 교육, AI와 접목한 정신전력교육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기법과 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와 노하우들을 예비군 안보교육에 직접적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안보교육은 정신전력교육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장병과 연계된 안보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의 눈높이에 맞춰 게임을 활용한 교육, 공연과 강연을 접목한 융합식 교육, 팀별 행동화 체험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 택시기사입니다. 나는 체육교사입니다. 나는 지질학 전공학생입니다. 저는 제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제일 친한 학교 친구입니다. 저는 늘 시끄럽던 당신이 제일 싫어하던 이웃입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우리 중에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의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관련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g-iEzSonvWk>(2024. 7. 15 검색) 참조.

183) 장태동(2024), “두 개의 전쟁이 주는 예비전력분야 시사점”, 국방대학교, 6.25 전쟁 74주년 상기 예비전력 오찬포럼 발제자료.

다) 눈높이에 맞는 안보교육 전담강사 운용

예비군 안보교육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담당하면서 예비군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역 장병들에 대한 강의 역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들을 선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강의능력과 기법이 발전되고 있다. 특히, 노래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융합식 교육을 통해 MZ세대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비군 안보교육도 민간기관의 경쟁 구도를 다양화하고, 융합식 방식을 적용하여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민간 차원의 발전 방안

1) 민방위교육시 안보교육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민방위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¹⁸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민방위교육은 탈냉전 이후 포괄안보가 강조되면서 재안안전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민방위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전쟁과 같은 안보위협에 대비한 활동인데,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시에 안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 편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민방위의 임무와 역할 등의 기본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안보교육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에 민방위대로 전환되어 공교육 시스템에서 마지막 국가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안보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자원들도 민방위대로 편성되므로 안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184) Ivo Juurvee(2022.11.16.), "Civil Defence in Ukraine: Preliminary Lessons From the First Months of War", International Center for Defense and Security. <https://icds.ee/en/civil-defence-in-ukraine-preliminary-lessons-from-the-first-months-of-war/> (2024. 7. 25 검색).

2)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날’ 발전

싱가포르는 매년 ‘총력방어의 날’을 시행하여 각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전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방위 날 훈련과도 유사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학교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 국민이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방위 날 행사는 관공서와 유관기관, 일부 시민들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안보의식 제고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¹⁸⁵⁾ 특히, 싱가포르처럼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방위 날 훈련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 및 회사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민방위 날 훈련 시에 전 국민이 전시 및 재난에 대비한 실제 훈련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경각심을 가지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민방위대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안보위협이 높은 나라이며,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총력안보 시스템 속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더구나 미래에 병역자원 감소로 인하여 민간자원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병역의무, 예비군 복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이 안보문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였으며 그들의 안보지식 또한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학교에서 안보와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는 여성 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¹⁸⁶⁾하면서 학생들의 안보의식 약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여성들도 군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고, 모든 기관에서 남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임을 감안할 때, 총력안보태세를 위해

185) 지효근(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24(1): 153-194.

186) 2022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 교사 여성 비율을 69.7%로서 10명 중 7명이 여성 교사이다. 함철민(2022.10.3), “초등학교 교사 '여초' 현상 심화...10명 중 8명은 여자 선생님”, 『인사이드』. <https://www.insight.co.kr/news/413721> (2024. 7. 20 검색); 김인희(2024.2.2.), “초등교사 여초현상 여전...서울 교사 합격자 중 남성은 '10%'”,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4546/?sc=Naver> (2024. 7. 10 검색) 참조.

민방위대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민방위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과 여성의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덴마크, 이스라엘 등 여성들의 민방위대 편성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논의¹⁸⁷⁾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방위대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대할 경우, 재난 및 국가안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국가 기념행사와 연계한 시민안보교육

우리나라의 국가 기념행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 인사와 행사에 관련된 인사들 위주로 주로 실내에서 정형화된 행사로 치러진다. 일반국민들은 TV 생중계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기념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기념하고 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의 거의 60%가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 25%는 매년 참석하고, 34%는 참석하지만 매년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¹⁸⁸⁾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기념행사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위주의 실내 행사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위주의 전국적인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행사의 좌석에 일반 국민들을 일정 비율 이상을 배치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틀에 박힌 행사에서 벗어나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면서 호국보훈과 애국심을 가슴 새길 수 있고, 일반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¹⁸⁹⁾

187) 양기근(2008),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2(2): 43-69; 황현택(2023.1.30.), “與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2880>(2024. 7. 10 검색).

188) Dynamics of the patriotic moods of Ukrainians(2019.8.21.). https://ratinggroup.ua/en/research/ukraine/dinamika_patrioticheskikh_nastroeniy_ukraincev_avgust_2019.html (2024. 7. 18 검색).

189) 김성영, 앞의 논문.

5) 국가보훈문화와 연계한 시민안보교육

미국의 경우 매년 11월 11일 참전군인의 날(Veterans Day)이 되면 그 지역의 참전군인들이 학교의 초대를 받아 교실에서 학생들과 자신의 체험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준다. 이처럼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국가보훈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국민통합의 기재가 되어 안보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부국강병의 선진국들을 대부분 잘 정비되고 발전된 보훈제도를 갖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는 보훈의식과 보훈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¹⁹⁰⁾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과 중진국의 경제발전의 근본 동인의 하나가 나라사랑 마음에 있었다는 결과가 있는데,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의 근원은 국가위난 시에 자기희생으로 국가와 민족을 보호, 보존한 보훈정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⁹¹⁾

사실 국민안보의식 함양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접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보훈과 연계된 행사나 시설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연중 보훈기념행사는 14회에 이른다. 이러한 국가보훈기념행사에 행사와 관련된 인사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행사로 기획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훈의식에 ‘Story Brand’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을 하나의 브랜드’로 해석하고, 청소년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감대를 얻는 방안¹⁹²⁾도 검토해 볼 만하다.

190) 김병문, 앞의 논문.

191) 라미경, 앞의 논문.

192) ‘Story Brand’는 Story와 Brand의 합성어로, 브랜드에 이야기를 접목시켜 효율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석근 (2006), 『청소년의 공감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Story Brand 적용방안 연구』(서울: 국가보훈처) 참조.

〈표 9〉 국가보훈부 주관, 연중 보훈기념행사 현황

번호	구분	기념행사명	기념일자	행사 취지
1	민주	2·28 민주운동 기념식	2월 28일	1960.2.28. 대구지역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을 기념
2	민주	3·8 민주여거 기념식	3월 8일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으로 대구 2·28 마산 3·15와 함께 전국학생시위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4·19혁명의 단초가 됨
3	민주	3·15 의거 기념식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정치적 타락과 영구집권을 위한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항거한 3.15의거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
4	호국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3월4주 금요일	서해수호 희생장병을 추모하고, 국민과 함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함
5	독립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월 11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
6	민주	4·19혁명 기념식	4월 19일	4·19혁명정신을 기리고 4·19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기념일로 정함
7	민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리고 5·18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
8	호국	현충일 추념식	6월 6일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
9	독립	6·10 만세운동 기념식	6월 10일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
10	호국	6·25 전쟁 기념식	6월 25일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다짐하기 위함
11	호국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7월 27일	UN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함
12	독립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11월 3일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인 학생독립운동(1929.11.3.)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13	호국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11월 11일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22개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유엔전몰장병을 추모
14	호국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월 17일	1905.11.17. 대한제국 국권을 침탈당한 을사늑약일을 전후하여 많은 애국지사들의 순국을 기리기 위하여 정함

출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¹⁹³⁾

193) [https://www.data.go.kr/data/15113990/fileData.do?recommendDataYn=Y\(2024. 7. 20 검색\)](https://www.data.go.kr/data/15113990/fileData.do?recommendDataYn=Y(2024. 7. 20 검색)).

또한 국립현충원을 첨단 IT 보훈 안보테마파크로 육성하여 청소년이 친숙하게 찾는 보훈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독립기념관 주변을 청소년 메모리얼 테마파크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¹⁹⁴⁾ 아울러, 서울이나 대전의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외곽지역을 자연친화적공원 및 청소년 보훈 안보 체험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충시설 해설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현충시설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현충시설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네비게이션 지도에 표기¹⁹⁵⁾ 하는 등 국가보훈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쟁기념관에 한국전쟁 기간 중 전사한 참전국 전사자 명부가 회랑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국가보훈정책 차원에서, 각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마다 학교 강당이나 별도의 현충관 등을 설치해 국가를 위해 전사하거나 순국한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의 명단과 명패의 게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¹⁹⁶⁾고 본다.

6) 시민 안보단체 참여 확대

현재 우리나라 안보관련 단체는 민방위대, 예비군, 재향군인회 등이 있다. 이 단체는 대부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자원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는 경우도 있다. 즉, 여성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지원 민방위대, 지원예비군, 지원재향군인으로 자원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주로 활동력이 높은 지역 인사들로서 지역사회의 활동에 앞장서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안보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원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과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이 안보관련 행사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인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94) 안성호(2011), “청소년 보훈·안보교육 활성화방안”, 『한국보훈논총』, 10(4): 117-141.

195) 위의 논문

196) 양병기, 앞의 논문.

7) 박물관·기념관·거리·공원 등에 호국 및 독립영웅 명칭 부여

미국은 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의 명칭이 대부분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물과 관련된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 내에 미군 관련 연병장이나 강당, 건물 등에 모두 전쟁영웅들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 그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예우하고, 그들을 역할모델(role model)로 제시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함정이나 무기의 이름 등에 전쟁영웅들의 이름을 넣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박물관, 기념관 등 전시시설의 건립, 조형물의 설치, 역사유적지의 보존, 거리, 공원, 광장 등의 명칭 제정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용사,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민안보의식 평가 및 조사체계 발전

국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안보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발전이 요구된다. 현재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안보관련 의식조사는 안보에 대한 선호 기반 조사로서 국민의 심층적인 가치의식을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박균열 교수 등의 연구진이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형 도덕판단역량 측정도구(KMCT) KC-지수 알고리즘¹⁹⁷⁾을 적용한 가치의식 조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MCT(Moral Competence Test)는 현재까지 소개된 도덕판단역량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제적이며, 타당도가 높은 도구이다. 한국형 도덕판단역량 측정도구(KMCT)의 KC-지수 알고리즘은 기존 MCT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알고리즘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을 제시한 것이다. 이 도구는 향후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는 통합형 가치의식조사로 확장 발전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앱을 구축하여 Big Data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KC-지수는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쉽게 통용될 수 있으며, KC-지수는 -100~100까지의 넓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의식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방대에서 매년 실시하는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국가안보

197) KC-지수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은 박균열(2019),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 및 C-지수 알고리즘 개선”,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147-157 참조.

에 대한 국민 가치의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범국민안보의식 조사체계를 활용하여 국민적인 안보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대학교가 범국민안보의식 관련 연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의식 조사결과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언론기관을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국민안보의식 수준을 알려주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술대회 개최 및 언론공개 활동을 펼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조사 대행업체에게 위임하여 국방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총력전으로 수행되는 현대전에서 전쟁은 국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수행해야만 하는 국가의 가장 큰 중대사이다. 특히, 국가적인 물질, 인적, 정신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즉 전투는 군인이 수행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수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나 랜드연구소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평상시 국민의 안보의식과 전쟁의지가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실시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조사결과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준비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안보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향후 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보의식 수준이 동원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시민에 대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의 국민안보의식 함양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안보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중에서도 프랑

스의 시민권 경로 3단계, 싱가포르의 총력방어의 날, 미국의 시민교육을 통한 국가정체성 강화, 이스라엘의 쉐라흐 교육 등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 볼 만한 우수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유사시 원활한 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법적 근거 확립 및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이다. 현재 국민 안보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는 <통일교육지원법>, <통합방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안보교육은 통일과 안보가 균형 있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을 <통일안보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거나, <통일교육지원법>이나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안보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관부처의 명확화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교육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통일·안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국가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를 맡는 방안,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소관 부처를 맡는 방안,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통일안보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안보 및 안보교육을 위한 대전략 수립 방안이다. 국가안보는 총력전 수행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안보의식 함양은 ‘총력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안보교육은 각각의 대상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제안하였다.

넷째, 민-관-학-군의 종합적인 안보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다. 안보교육은 어느 한두 부서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보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국민안보의식 평가 및 조사체계의 발전이다. 국민안보의식 조사시 선호도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국민 가치의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도덕판단역량 측정도구(KMCT) KC-지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방대 범국민안보의식 조사체계를 활용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료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국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참고하고 검토해 볼 만한 방안과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제안하였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을 위한 더 많은 논의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단행본]

- 교육부(1993), 국정교과서 『도덕』(5학년), p.150.
- 국립통일교육원(2023),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서울: ㈜늘봄플러스).
- 국립통일교육원(2023),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서울: ㈜늘봄플러스).
- 김구섭 편저(2011),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김광수(2012), 『손자병법』(서울: 책 세상).
- 다카하시 하지메(1975),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옮김, 『현대총력전』(서울: 공화출판사).
- 루덴도르프(1972), 최석 옮김, 『국가총력전』(서울: 공화출판사).
- 모리마츠 토시오(森松俊夫)(1983), 『총력전 연구』(동경: 백제사).
- 박계호(2012),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경기 성남: 북코리아).
- 조석근(2006), 『청소년의 공감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Story Brand 적용방안 연구』(서울: 국가보훈처).
- 한용섭(2005), 『프랑스 국방개혁 2015분석』(서울: 국방대학교).
- 합동군사대학교(2022), 『인지전(cognitive war)』(논산: 합동군사대학교).
- 합동참모본부(2002), 『합동기본교리』(대전: 육군인쇄창).
- 홍종호·김민규·김창민·김정수(2022), 『2022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서울: 국립통일교육원).

[국내문헌 / 논문]

- 강구섭·채수은(20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탐구: 교육 분야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2): 211-240.
- 강진웅(2018), “남북한의 이념교육 비교: 반공교육과 반미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235-252.
- 고성진·박효선(2014), “군과 연계한 학교 안보교육 강화방안”, 『한국위기 관리논집』, 10(6): 89-119.
- 권삼(2022), “동원전력의 실효성 제고 방안”, 예비전력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사점, 국방대학교 세미나.
- 국민안전처(2015), “공직자 안보교육”, 『국가 비상대비 민방위저널』, 40: 12~13.
- 길병옥·나미경·나태종·박재필(2014), “나라사랑 안보체험 및 교육시설 건립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용역연구 최종보고서.

- 김구섭(1997), “국민안보의식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사회교육을 위한 국민안보의식 구축방안 세미나.
- 김규남(2013),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 연구- 대학생 통일안보 대토론회 및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융합보안 논문지』, 13(6): 99-106.
- 김병문(2017), “한국 안보교육의 활성화 방안: 안보개념과 안보교육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6(3), 9-34.
- 김병조(2023), “포괄적 안보 개념에 비추어 본 한국인의 국가안보의식 분석”, 『국방논총』, 31(1): 1-30.
- 김상현(2022), “인지전의 공격 양상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32(4): 21-50.
- 김성영(2010), “청소년의 보훈의식과 나라사랑 정신함양 방안”, 『한국보훈논총』, 9(1) 145-178.
- 김종근(2019), “코리언 평화 공동체를 위한 통합서사의 기능”, 『통일인문학』, 77: 5-36.
- 김종영·황중호·이규웅(2008), “국민안보의식 제고방안”, 『전략논단』, 9: 214-243.
- 김진호·최영찬(2023),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 인지전 발전 방향: 인지전 개념, 전개 양상, 그리고 전략적 대응”, 『국방정책연구』, 39(3): 93-132.
- 독고순·김규현(2013), “국민 안보교육 성과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군의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29(3): 195-224.
- 라미경(2021), “안보체험관 운영실태 비교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방안 모색”, 『한국과 세계』, 3(2): 79-112.
- 박균열(2008), “학생들의 안보의식 연구: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1(3), 173-195.
- 박균열(2017),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국방연구』, 60(3): 67-92.
- 박균열(2019),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 및 C-지수 알고리즘 개선”,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147-157.
- 박균열·이영·방정배(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국가안보”, 『인문사회 21』, 13(6), 4989-5000.
- 박균열·성현영·방정배(2024), “통일교육의 정의, 목표, 이념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윤리교육연구』, (72): 197-225.
- 박계호(2022),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국방대 세미나.
- 박영호·이정훈(2017), “대학생 보훈의식과 나라사랑의식의 활성화 방안”, 『사회융합연구』, 1(1): 11-21.
- 박종탁(2023), “안보교육이 대학생들의 병역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7(5): 251-270.
- 박찬석(2002),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4(1): 139-160.

- 방정배(20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 미디어 활용과 시사점”, 『정신전력연구』, (76), 69-102.
- 손상용(2019), “ASSURE 모형을 이용한 국가 안보교육 개선방안: 증강현실을 이용한 청소년 6·25전쟁 교수설계를 사례로”, 『정신전력연구』, (56), 109-156.
- 설인효·배학영(2023),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66(2): 75-110.
- 송명진(2018), “여성 안보의식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까지의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태은(2022),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내러티브·플랫폼·세 모이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62(3): 213-255.
- 심연수(2006), “통일대비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倫理研究』, 62(1): 245-264.
- 안성호(2011), “가정-학교-사회 연계 '안보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교육』, (677): 18-24.
- 안성호(2011), “청소년 보훈·안보교육 활성화방안”, 『한국보훈논총』, 10(4): 117-141.
- 양기근(2008),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위기관리연구』, 2(2): 43-69.
- 양동안·강길진·강옥경(2011), “국가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보고서.
- 양승봉(2023),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31(1): 204-221.
- 이광현(2013), “중학교 안보교육 강화방안 연구 -군의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택·이선규(2013),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 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군사』, (88): 253-289.
- 이종일(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인지전 차원의 북한 대남적화전력 대응을 중심으로 -”, 『정신전력연구』, (75): 285-319.
- 이지연(2020), “정신전력교육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적용방안”, 『정신전력연구』, (61): 57-99.
- 장태동(2024), “두 개의 전쟁이 주는 예비전력분야 시사점”, 국방대학교, 6.25 전쟁 74주년 상기 예비전력 오찬포럼 발제자료.
- 정길호(2016), “국민행복을 담보하는 국가안보교육 강화방안”, 201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건국대학교.
- 정진섭(2023), “우크라이나 사태 시사점과 국가동원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2023안보연구시리즈 제5-5호. 국방대학교 안전보장연구소.
- 정진섭·강용구(2021), “예비전력 정예화와 연계한 국가비상대비체계 발전 방향”, 『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2021 안보연구시리즈 7(5), 145-221.
- 조영희·김훈희(2023), “국가안보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법」 개선방안 연구 -초·중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56: 459-486.
- 지효근(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24(1): 153-194.

- 차승만·이현숙(2012), “초·중·고 교과서 안보내용 분석과 국가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논총』, 11(3): 71-98.
- 차우규(2016),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나라사랑 교육자료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보고서; 박효중(2011), “초중고교과서의 나라사랑 교육내용 분석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보고서.
- 최순원·양승봉(2024): “예비군 안보교육의 효과 증진방안 연구 - 장병 정신전력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 『정신전력연구』, (76): 37-65.
- 최영진(2013), “민주화 이후 한국 안보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용성(2010), “국민 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6·25전적지 벨트 조성방안”, 『한국보훈논총』, 9(1): 123-144.
- 함규진(2015),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초등학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7(1): 83-105.
- 허광환(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한반도 미래전에 주는 함의 - 군중 속의 전쟁과 다영역(Multi-Domain) 유·무인 복합전 -”, 『한국군사』 13: 57-88.

[기타자료]

- 강영진(2024.6.11.), “남성 최수 수만 명 동원한 러시아, 여성 최수도 징집”,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1_0002767629&cID=10101&pID=10100 (2024. 7. 20 검색).
- 강주현(2019), “주적 사라진 대한민국 군대…국방의무 목적 잃은 청년들”, 『스카이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5651 (2024. 7. 25 검색).
- 갤럽(2023), “자국 연루 전쟁 발발 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63>(2024. 7. 20 검색).
- 구특교(2019), “장병 혼란에 빠트리는 안보교육”,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5/96165108/1>(2024. 7. 22 검색).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2024), 『2024민방위표준교재(민방위소양)』. <https://www.ndti.go.kr/client/board/board.do?boardno=201&no=16749>(2024. 7. 20 검색).
- 「국가보훈 기본법」[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2024), “2024 국가보훈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 국가보훈부(2016.1.4), “‘유대인’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헬라흐’와 ‘가드나’”. 『나라사랑신문』. <https://www.narasarang.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 (2024. 8. 5 검색)
-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서 발간”, 『보도자료』 (2023. 3. 14).
- 국무조정실(2014.6), “대국민 안보교육 기본계획”

- 국방부(2009.4.15.), “예비역 장군, 예비군 안보교육에 앞장선다”, 국방부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344429>(2024. 7. 20 검색).
- 김지훈(2024.3.1.), “3·1절 연휴 우르르 일본으로… 태극기는 전멸”,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48894&code=61121111&cp=nv> (2024. 7. 20 검색).
- 김인희(2024.2.2.), “초등교사 여초현상 여전…서울 교사 합격자 중 남성은 '10%”,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4546/?sc=Naver> (2024. 7. 10 검색).
- 김태훈(2024.8.13.), [단독] “군 교재로 국민 안보 교육”…정부 문건 입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6175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김한식(2013), “안보교육 발미로 국가기관 전방위로 대선 개입”, 『news1』.
 「민방위기본법」[법률 제18522호] (시행 2022. 12. 1.).
- 박용하(2011), ““김대중-노무현 당선은 北때문”…보수단체는 예비군 교육 중”, 『경향신문』.
- 박효선(2023.8.24.), “외신도 지적한 한국 ‘안보불감증’… ‘민방위 사이렌도 무시’”,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7835> (2024. 7. 20 검색).
- 박효재(2022.9.22), “러, 군동원령에 전국 곳곳 반대 시위…“전쟁, TV에서 집안으로 들어왔다”,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9220934001#c2b>
 (2024. 10. 2 검색).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3), 『2023통일의식조사』,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8665>(2024. 7. 15 검색).
- 석경민(2022.3.20), “푸틴 최대 적은 러시아에 있다, 4월 징집 앞두고 도망친 그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706> (2024. 7. 25 검색).
-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정례조사 결과보고서(2023.10.17.).
- 오예지(2023.12.28), “독도가 영토분쟁지역? 군 교재 집필·감수 누가 했나”, 『MBN』.
<https://www.mbn.co.kr/news/politics/4990217> (2024. 7. 28 검색).
- 육군본부(2024), “2024년 정훈공보 업무수행 지시”, 육지시 제24-9001호.
- 윤근학(2017.11.17), “‘색깔론’ 나라사랑교육 강의, 7년 만에 전격 폐지”, 『오마이뉴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시행 2012. 2. 8.] [국방부훈령 제1392호, 2012. 2. 8., 일부개정]
- 이태규 의원 보도자료, “학교통일교육계획에 11개 시 도교육청은 안보교육 미수립”(2023.10.11.).
 인터넷 국어사전.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C%95%88%EB%B3%B4%EC%9D%98%EC%8B%9D&from=tsearch>
- 장재은(2024.8.20.), ““휴가 뒤 귀대하면 바보”…러시아, 탈영·병역기피 5만명 추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0118700009?input=1195m>(2024. 7. 18 검색).
- 정찬(2022.9.21.), “태극기 이미지 ‘긍정적’85%, ‘태극기부대’ 때문에 부정적 변화35%”, 플

- 리뉴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909>(2024. 7. 25 검색).
- 정충신(2023.3.14.), “‘국가정체성 교육’ 국·영·수보다 중시… ‘강한 이스라엘’ 비결”, <https://m.news.nate.com/view/20230314n06173> (2024. 8. 5 검색).
- 조영은(2023.2.8.), “이스라엘 단합 돕는 교육시스템 ‘셀라흐’…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중 요성 확인”, 『뉴스웍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956>(2024. 8. 10 검색).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
- 함철민(2022.10.3), “초등학교 교사 '여초' 현상 심화...10명 중 8명은 여자 선생님”, 『인사 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413721> (2024. 7. 20 검색).
- 황현택(2023.1.30.), “與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2880> (2024. 7. 10 검색).
- 행정안전부(2024),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지침”

[외국문헌]

- Boluze, Par Léa(2023),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 principe et déroulement”, <https://www.capital.fr/economie-politique/journee-defense-citoyennete-1390001> (2024. 8. 10 검색).
- Bukkvoll, T., & Steder, F. B. (2023), “War and the Willingness to Resist and Fight in Ukraine. Problems of Post-Communism” 71(3): 245-258. <https://doi.org/10.1080/10758216.2023.2277767> (2024. 8. 2 검색).
- Connable et al.(2019), “Will to Fight Returning to the Human Fundamentals of War”, *RAND*, https://www.rand.org/pubs/research_briefs/RB10040.html (2024. 8. 10. 검색).
- Fabian, Sandor(2024), “The Illusion of Conventional War: Europe Is Learning the Wrong Lessons from the Conflict in Ukraine”, <https://mwi.westpoint.edu/the-illusion-of-conventional-war-europe-is-learning-the-wrong-lessons-from-the-conflict-in-ukraine/> (2024. 10. 2 검색).
- Grinker, R. R. (1998), *Korea and its Future: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 Hoffman, F. G. (2007),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fare*, Arlington, V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ttps://www.potomac-institute.org/images/stories/publications/potomac_hybridwar_0108.pdf (2023. 7. 18 검색).
- Hoffman, F. G. (2009), “Hybrid vs. compound war. The Janus choice: Defining t

- oday's multifaceted conflict", *Armed Forces Journal - Military Strategy*, 1-7.
- Itsik, R. (2020), "Israel's defence ethos: military service as a turning point", *Ruch Prawniczy, Ekonomiczny i Socjologiczny* 82(3): 299-310.
- Juurvee, Ivo(2022.11.16.), "Civil Defence in Ukraine: Preliminary Lessons From the First Months of War", *International Center for Defense and Security*. <https://icds.ee/en/civil-defence-in-ukraine-preliminary-lessons-from-the-first-months-of-war/> (2024. 7. 25 검색).
- Kahan-Strawczynski, P. & Vazan-Sikron, L. (2002), "Evaluation Study of the Continuing Training Program for Young Shelach Leadership", Research Report (RR-386-02). <https://brookdale.jdc.org.il/en/publication/evaluation-study-continuing-training-program-young-shelach-leadership/> (2024. 8. 5 검색).
- NATO(2010), *BI-SC Input to a New Capstone Concept for the Military Contribution to Countering Hybrid Threats*, Brussels: NATO. http://www.act.nato.int/images/stories/events/2010/20100826_bi-sc_cht.pdf (2023. 7. 18 검색).
- Puyvelde, D. V. (2015), "Hybrid War-does it even exist?", *NATO Review*. <https://www.nato.int/docu/review/2015/Also-in-2015/hybrid-modern-future-warfare-russia-ukraine/EN/> (2023. 7. 18 검색).
- Research Office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2022), "National Education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in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https://www.legco.gov.hk/research-publications/english/2022fs07-national-education-and-national-security-education-in-singapore-and-the-united-states-20221018-e.pdf> (2024. 7. 15 검색).
- Shaishmelashvili, Giorgi(2023), "Total defense: The strategy on how to defeat strong", PMC Research Center Policy Paper, <https://pmcg-i.com/publication/total-defense-the-strategy-on-how-to-defeat-strong/> (2024. 7. 18 검색).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2010), "TEACHER RESOURCE GUIDE: Veterans Day". www.va.gov/opa/vetsday/docs/2010TeacherGuide.pdf (2024. 7. 10 검색).
- Vanovska, I. (2016), "Patriotism and spirituality at the present stage in ukrainian edu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1): 50-60.
- Дронов, М. В.(2023), "ГИБРИДНАЯ ВОЙНА КАК ФОРМА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Закон и власть* (4): 17-24.

[인터넷 자료]

- <https://www.data.go.kr/data/15113990/fileData.do?recommendDataYn=Y> (2024. 7. 20 검색).
- <https://www.youtube.com/watch?v=g-iEzSonvWk> (2024. 7. 15 검색).

- <https://caucasusedition.net/conflict-and-militarization-of-non-formal-education-in-ukraine-part-3/> (2024. 7. 4 검색).
- https://ratinggroup.ua/en/research/ukraine/dinamika_patrioticheskikh_nastroeniy_ukraincev_avgust_2019.html (2024. 7. 4 검색).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5399?sid=104> (2024. 10. 2 검색).
-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2/09/29/20220929500001> (2024. 10. 2 검색).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7/112067675/1> (2024. 10. 3 검색).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2742.html> (2024. 10. 6 검색).
- <https://he.wikipedia.org/wiki/%D7%A9%D7%9C%22%D7%97> (2024. 8. 5 검색).
- <https://blogs.prio.org/2022/03/will-terror-deter-or-motivate-ukrainian-resistance-survey-evidence-from-besieged-ukraine/> (2024. 10. 2 검색).
- <https://www.youtube.com/watch?v=U5e9ryh1Gys> (2024. 10. 2 검색)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9288&cid=60344&categoryId=60344> (2024. 10. 3 검색).
- https://www.newsis.com/view/NISI20220314_0000950306 (2024. 10. 3 검색).
-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1&no=1128262> (2024. 10. 3 검색).
- <https://news.zum.com/articles/74611890> (2024. 10. 3 검색).
- https://www.youtube.com/watch?v=Hqb_GeidFEo (2024. 10. 2 검색).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8601018> (2024. 10. 2 검색).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11/26/5U52TANUTFDJJKBYJUZZSZVIGIMU/ (2024. 10. 2 검색).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feb/19/ukraine-capital-is-caught-between-normality-and-horror-in-shadow-of-war-kiev-russia> (2024. 10. 2 검색).
- <https://dailian.co.kr/news/view/1087861> (2024. 10. 2 검색).
-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2/02/27/20220227500086> (2024. 10. 2 검색).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322/112474818/9> (2024. 10. 2 검색).
- <https://v.daum.net/v/20220227195436963> (2024. 10. 2 검색).
- <https://m.yna.co.kr/view/IPT20220508000009365> (2024. 10. 2 검색).
- <https://news.zum.com/articles/74062697> (2024. 10. 2 검색).
- <https://www.estrepublicain.fr/actualite/2020/01/20/journee-defense-et-citoyennete>

- mieux-armer-les-jeunes-pour-l-avenir (2024. 7. 10 검색).
- https://www.lamontagne.fr/clermont-ferrand-63000/actualites/une-centaine-de-jeunes-hier-dans-les-locaux-du-92e-ri-pour-la-journee-defense-et-citoyennete_1733903/ (2024. 8. 200 검색).
- <https://www.nlb.gov.sg/main/article-detail?cmsuuid=44fa0306-ddfe-41bc-8bde-8778ff198640> (2024. 8. 18 검색).
- <https://cpbs.stjohn.org.sg/cpb-handbook-guidelines/group-1-welfare-service/total-defence-tdf111> (2024. 8. 20 검색).
- <https://www.holidaycalendar.io/holiday/total-defense-day>(2024. 8. 20 검색).
- <https://www.sg101.gov.sg/resources/resource-packages/tdresources/> (2024. 7. 10 검색).
- <https://www.sg101.gov.sg/resources/resource-packages/tdresources/> (2024. 7. 20 검색).
- <https://www.hci.edu.sg/news-and-events/news/totaldd2024/> (2024. 7. 20 검색).
-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veiller-a-le-sprit-defense> (2024. 7. 18 검색).
-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veiller-a-le-sprit-defense>(2024. 8. 10 검색)
- <https://www.info-militaire.fr/information-familles-militaires/loffre-jeunesse> (2024. 8. 10 검색).
- <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fr/operation-heritiers-de-memoire> (2024. 8. 10 검색)
- <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fr/revue/le-tourisme-de-memoire-un-enjeu-national>(2024. 8. 10 검색).
- <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fr/le-tourisme-pedagogique-de-memoire>(2024. 8. 10 검색).
-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veiller-lesprit-defense/enseignement-defense> (2024. 8. 10 검색).
-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nation-du-public/jeunesse/veiller-a-le-sprit-defense> (2024. 8. 10 검색).
- <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en/revue/teaching-about-defence> (2024. 7. 10 검색).
- <https://www.globalfirepower.com/global-ranks-previous.php> (2024. 7. 18 검색).